

이 발표논문집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7-362-B00013)

2016 정책토론회

한-유라시아 산업협력의 과제와 방향

- 일 시 2016년 3월 25일(금) 13:20~18:00
- 장 소 한양대학교 국제관 6층 화상회의실
- 주 최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 후 원 한국연구재단

■ 프로그램

2016년 3월 25일(금)

제 1세션(13:40-15:40)

- 사회자: **김영진**(한양대학교)
- 발표자: **이상준**(국민대학교)
 - “러시아의 산업정책과 협력 방안”
 - 박지원**(KOTRA)
 - “카자흐스탄의 산업정책과 협력 방안”
 - 한홍열**(한양대학교)
 - “키르기스스탄의 산업정책과 협력 방안”
- 토론자: **Masaltsev. A.**(주한 러시아대사관, 2등서기관)
 - Issenali. A.**(주한 카자흐스탄대사관, 참사관)
 - Namatbaev. A.**(주한 키르기스공화국대사관, 참사관)

제 2세션(16:00-18:00)

- 사회자: **고재남**(국립외교원)
- 발표자: **김영식**(강릉원주대학교)
 - “우크라이나의 산업정책과 협력 방안”
 - 변현섭**(한양대학교)
 - “우즈베키스탄의 산업정책과 협력 방안”
 - 조영관**(수출입은행)
 - “투르크메니스탄의 산업정책과 협력 방안”
- 토론자: **Horopakha. S.**(주한 우크라이나대사관, 1등서기관)
 - Shagzatov. O.**(주한 우즈베키스탄대사관, 참사관)
 - Durdyev. B.**(주한 투르크메니스탄대사관, 참사관)

목 차

제 1 세션

이상준	러시아의 산업정책과 협력 방안	13
박지원	카자흐스탄의 산업정책과 협력 방안	25
한홍열	키르기스스탄의 산업정책과 협력 방안	45

제 2 세션

김영식	우크라이나의 산업정책과 협력 방안	67
변현섭	우즈베키스탄의 산업정책과 협력 방안	81
조영관	투르크메니스탄의 산업정책과 협력 방안	99

제 1세션(13:40-15:40)

- 사회자: **김영진**(한양대학교)
- 발표자: **이상준**(국민대학교)
“러시아의 산업정책과 협력 방안”
박지원(KOTRA)
“카자흐스탄의 산업정책과 협력 방안”
한홍열(한양대학교)
“키르기스스탄의 산업정책과 협력 방안”
- 토론자: **Masaltsev. A.**(주한 러시아대사관, 2등서기관)
Issenali. A.(주한 카자흐스탄대사관, 참사관)
Namatbaev. A.(주한 키르기스공화국대사관, 참사관)

러시아 산업정책과 협력방안

이상준(국민대학교)

I. 서론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시장에 대한 시각은 크게 변했다. 시장 만능주의에 맹신이 사라지고 경제활동에 있어 국가의 역할이 다시금 재조명받게 되었다. 인력 양성, 기술개발, 원자재 조달, 세금 및 금융지원, 산업인프라 조성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정책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국가의 역할과 시장개입을 제한하면서 점차적으로 그 기능이 퇴색되었다. 그러나 글로벌 위기 이후 시장에 맡겨두었을 때 의사결정이 효율성에만 지나치게 치중하게 되고 그로 인한 근시적인 의사결정만을 추구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국가와 시장의 협업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시장을 통한 배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부의 산업정책이 필요해지고 그래서 기업 활동과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산업정책의 필요성은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

러시아는 1990년대 혼란기를 경험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측면에서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러시아 산업정책의 핵심은 자원의존도 탈피를 위한 산업다각화, 넓은 생산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고도화 하는 것, 첨단기술 활용에 의한 신성장 동력 확보, 지역적 특성에 따른 산업공간의 재편, 영토적 광활함을 활용하여 글로벌 공급사슬망 중심으로 국내외 산업거점망 연결 등으로 축약될 수 있다. 이러한 산업정책은 소련 시기처럼 국가의 역할과 기능을 단순하게 부활시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동안 국가의 과도한 개입과 국가의 쇠퇴를 경험하였다는 점에서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도 그렇다고 시장에서 국가를 지나치게 없애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였다는 점에서 러시아 정부의 산업정책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글로벌 경제 상황이 아직 충분히 개선되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러시아 정부의 정책적 시도에 대한 평가는 아직은 이르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 정부의 산업정책을 잘 활용한다면 한국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 산업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성과 그로 인해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방식을 모색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라고 판단된다.

II. 러시아 산업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러시아의 산업정책을 단순하게 정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후발국가로서 산업화를 성공한 소련의 경험 덕분에 러시아 경제는 언제나 산업정책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의 집권 이후 러시아 산업정책은 경제상황 변화에 보다 능동적인 대응으로 특징지어진다.

[표 1] 2000년대 러시아 산업정책의 주요 발전

구분	우선순위	특성	자원	기업관계
푸틴 집권1기 2000-2003	시장제도 발전 및 구조조정	유연한 규제정책 (세금, 독점, 환율)	경제성장 회복 및 정부예산 제약	올리가르히 관리 및 대기업과 정기적인 미팅
푸틴 집권2기 2004-2008	산업다각화 및 혁신 촉진	수직계열화, 장기 계획, 국가발전체 제 구축	실질적인 예산 투입	국가에 의한 수 직적인 통제 구 축, 정부정책 실 행을 위한 조직 창설
글로벌 위기 2008-2009	사회적 안정	대기업 지원, 인 위적 통제 선호, 정부의 보상(고 용)	예산 제약으로 정부지출 축소 및 조정	정부와 기업간협 력을 통한 정부 재정지원
위기 극복 2010-2011	신성장동력 모색 및 현대화, 혁신	기술력 중심 산 업 정책	재정건전성 확보 및 불확실성 제 거	시장접근 경쟁 심화, 벤처 등 새 로운 기업 출현
푸틴 집권3기 2012-2014	재산업화, 투자환 경개선, 신성장산 업 지원	고용창출을 위한 산업정책	성장감소로 인한 정부지출 감소	새로운 소통방식 도입(개방정부)
경제침체 2014-현재	대러 제재 및 유 가 하락 대응	수입대체 및 산 업다각화	재정긴축	위기 대응 수직 통제방식

자료: 가이다르 경제연구소(2013) 바탕으로 저자 보완

러시아의 산업정책은 산업다각화 및 고도화 정책, 산업공간 재편, 글로벌 공급망 활용 산업거점 확보 등으로 단순하게 구분할 수 있다.

1) 산업다각화 및 고도화 정책

소련시기 급속한 공업화를 통해 빠르게 성장한 경험을 가진 러시아는 산업정책과 관련된 수요가 많았다.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정부가 산업발전의 목표를 조정하여 주기를 바라는 요구가 강했다.

소련시기 뿐 아니라 1990년대는 체제전환 위기, 2000년대 초반국가의 시장 개입 증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2014년 대러 제재 등으로 늘 위기와 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였고 산업정책은 그 수단으로서 집행되었다.

소련과 러시아는 여타 국가의 산업정책과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냉전시기, 냉전 이후 국가의 안보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육성과 광활한 영토적 특징을 바탕으로 지역개발과 연관된 산업육성 등이 늘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 산업정책의 목표는 경제적 문제 해결과 장기적 관점에서 산업다각화, 수입대체,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 러시아 과학기술 활용에 의한 연구개발, 첨단 기술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라는 일반적인 목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러시아 정부가 주로 사용하였던 산업정책 집행 수단 역시 ① 세금 부담 경감, ② 관세율 변경, ③ WTO, 유라시아 경제연합, FTA 등 무역협정 체결, ④ 러시아 생산자 보조금 지급, ⑤ 위기 발생시 특정 산업분야에 대한 선별적이고 긴급한 지원, ⑥ 국가의 발전 정책에 따라 국가가 충분한 재정적 여력을 바탕으로 특혜성 투자지역 지정 등으로 다른 선진 산업화 국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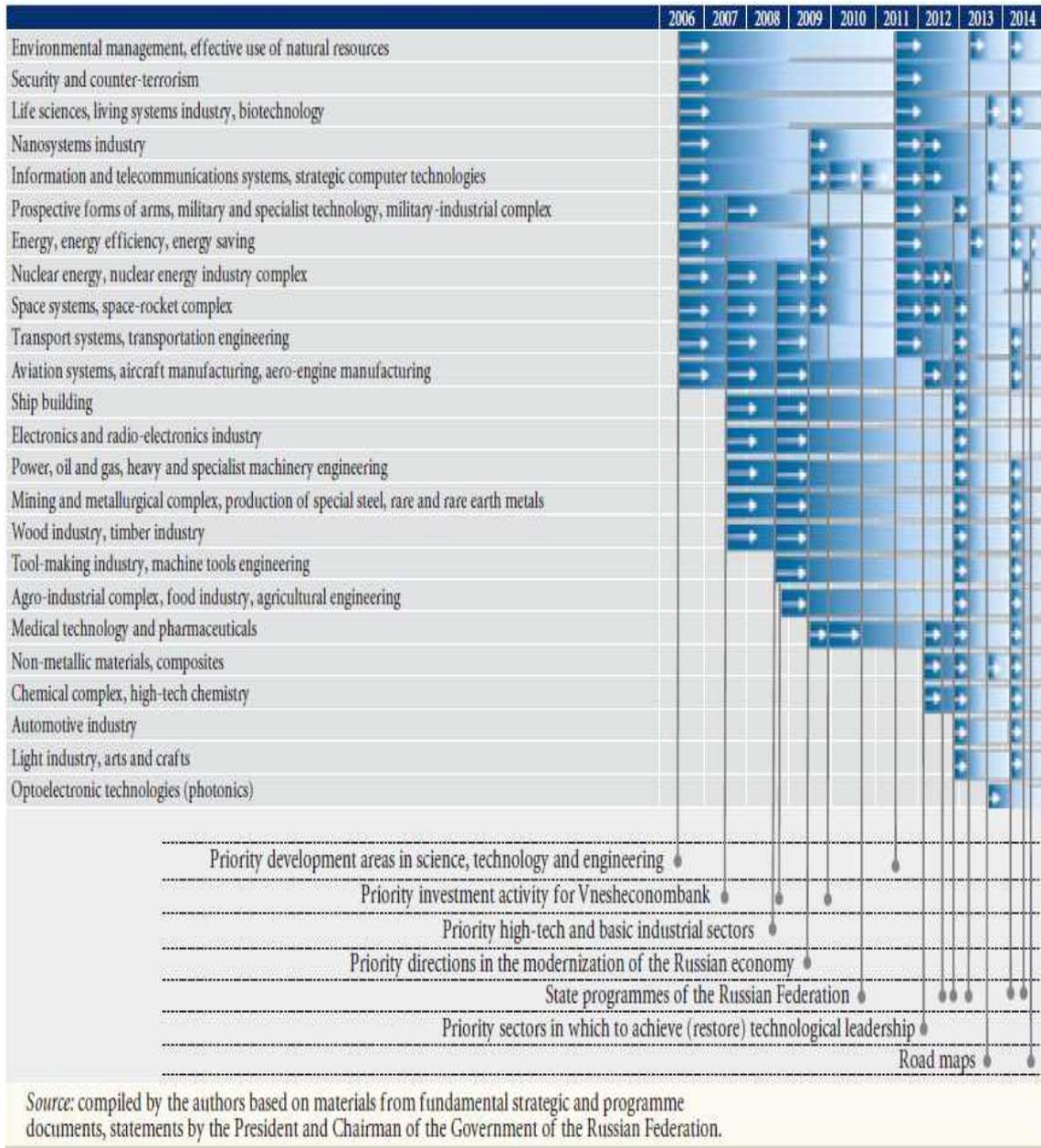
그러나 러시아 산업정책은 경제적인 목적 뿐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데 사회적 안정, 낙후지역의 고용창출, 단일 산업도시, 대기업에 높은 의존도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적인 목적은 경제적 목적보다 우선시 되는 경향이 많았고 특정한 분야를 왜곡하여 불균형적으로 빠르게 성장시키는 방식을 자주 활용하였고 이를 위해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음.

최근 수입대체 정책 역시 경제적 이해관계 뿐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에 의하여 강조되고 있다. 2006년 이후 러시아 산업정책의 우선순위 변화를 살펴보면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06년에는 환경보호, 안보 및 반테러, 생명과학, 나노 기술, 정보기술, 방산, 에너지, 우주항공, 교통 및 교통엔지니어링, 항공기 제작, 선박 산업이 우선적인 지원 대상이었다. 오늘날에는 엔지니어링, 금속가공, 목재, 공작기계, 의료기술, 석유화학, 자동차, 경공업, 광학기술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과거 2006년과 비교할 때 2014년에 선정된 산업정책의 우선분야는 한국 기업이 더욱 관심을 가지는 분야이며 또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림 1] 러시아 산업정책의 우선순위 (2006-2014)



자료: Simachev(2014), p. 14

산업다각화와 고도화를 위하여 러시아 정부는 현대화정책과 수입대체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러시아 현대화 정책의 주요 방향은 ① 국내외 시장에 활용될 새로운 에너지 원천 개발 및 에너지 효율성 제고(新연료 개발, 전력망 현대화, 스마트 그리드, LED 조명 등), ② 질적으로 새로운 수준의 원자력 기술 개발 및 유지, ③ 모든 형태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지상 및 우주 인프라 구축, ④ 정교한 진단 장비 및 의약 등 의료기술개발(진단장비 및 의약품 등), ⑤ 슈퍼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포함한 전략적 정보기술 개발(에너지, 전력망, 교통, 의료 등의 분야에 embedded 된 IT 솔루션, 소프트웨어 개발 등)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다.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가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거나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분야와 외국으로부터 기술 수입을 통해 러시아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분야로 구분하여 현대화를 추진하였다. 현대화 정책은 정책 조정 기관인 대통령 산하 경제 현대화·혁신 발전 회의를 중심으로 혁신 프로젝트 수행·지원 역할을 하고 있는 전략이니셔티브청, 스콜코보 재단, 과학기술 분야 혁신 소기업 지원 재단(FASIEST), 러시아벤처컴퍼니(RVC), 대외경제은행, 로스나노 등 다양한 기관들 간 협조체계 아래 추진되었다.¹⁾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수단으로서 추진된 경제 현대화 정책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2013년 러시아의 GDP 대비 총 R&D 지출액은 1.12%로 OECD 국가들의 평균인 2.36%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러시아의 총 R&D 지출액에서 정부가 68%, 민간이 28%를 차지하고 있어 기업들이 R&D 투자를 더욱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경제 현대화 정책은 방위산업 분야와 하이테크 벤처 및 스타트업 기업 분야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물론 러시아 경제를 빠르게 발전시킬 만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지는 않았다.

현대화 정책의 일부는 최근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수입대체 정책으로 변화되었다. 구체적으로 수입대체 정책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에너지 장비, 의료 및 IT 분야는 경제 현대화 정책에서도 중점 분야이다. 에너지는 효율성이 낮아 투자 효과가 매우 크지만 러시아 에너지 분야 장비와 설비의 경쟁력이 낮아 70% 이상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성의 개선도 크지 않았다. 그래서 에너지 분야의 수입대체를 통해 러시아 에너지 생산 및 공급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러시아 에너지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 생산도 배가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외국기업들은 러시아 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을 통한 생산의 현지화를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 의료· 제약 시장은 지난 10년간 평균 10%에 가까운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정부조달시장에서 외국제품의 입찰 제한을 통해 수입대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산업공간 재편정책

러시아 산업정책은 산업공간 재편과 연관되어 있으며 산업특구 지정과 개발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2005년도 들어 러시아 정부는 자국 경제 활성화 및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특별경제구역(SEZ)'을 설립했다. 러시아에서는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과 자유경제구역(Free Economic Zone)의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

1) 제성훈 외(2015).

[그림 2] 러시아 경제특구와 테크노 파크



자료: [Russia 포커스] 러시아 테크노파크와 경제특구

러시아 정부는 세제 혜택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혜택은 외국인 투자 기업에도 제공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법인 이윤세이다. 총 이윤세 중 2%는 연방재정으로 귀속되고 18%는 지방재정으로 귀속되고 있다. 지방정부는 지방 정부는 법인 이윤세 과세율을 임의적으로 4%까지 인하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데 지방 정부로부터 조세 우대 혜택을 받을 경우 법인 이윤 세는 최소 16%까지 인하될 수 있다. 물론 지역별로 법인 이윤세 인하에 대한 편차는 존재한다.

물론 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투자분위기의 침체와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글로벌 가치 사슬에 이미 편입되어 가동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새로운 공간에 대한 관심 저하 등으로 경제특구에 대한 투자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향후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 및 제반 인프라 구비,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 제공, 다양한 노동력, 주변 시장으로의 진출 확보, 관련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해 러시아 지방의 지리적 특성(인접시장, 인프라 등)과 부존자원의 풍부함을 감안하여 경제특구 개발에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러시아 정부는 투자유치를 위해 복잡한 거버넌스 구조를 해결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청 등을 설치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복잡한 거버넌스 구조로 투자결정을 주저하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러시아 투자환경은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당장 큰 성과를 내지 못하지만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제특구 가운데 러시아 정부가 지정학적 과제로 추진하는 것은 신동방정책에 의한 극동개발과 유라시아 대륙에서 러시아 위상을 높이기 위한 유라시아 경제연합도 산업공간 재편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특히 극동개발은 지역개발 뿐 아니라 산업다각화 및 고도화의 공간적 배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러시아 정부의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지정은 러시아 극동에서 산업화와 지역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한층 높여주고 관련 기업들의 진출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선도개발구역은 항만, 공항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의 보다 광활한 공간위에 설립되며, 자유항은 항만과 공항 인근지대에 설립됨에 따라 지역개발의 범위가 차이를 가진다. 선도개발구역은 농업, 물류, 광업, 수산업, 항공기 부품, 건축자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를 포함하고 있고 자유항은 물류 중심에 수산업, 관광, 과학기술 등 네 가지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의 개발은 연관성을 가지고 개발이 진행될 계획이다.

[표 2] 2025 극동개발계획의 목표와 과제

목표	목표 실현을 위한 과제
<p>(제 1 목표)</p> <p>지역 발전 여건 조성 및 경쟁력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내총생산 및 연평균 투자증가 속도를 러시아 평균보다 1.5% 포인트 이상 확보 • 가공 산업의 빠른 발전을 통한 역내 경제구조 개선 • 에너지, 교통, 통신비 최적화와 기술혁신 및 연구소 수준 제고를 통해 역내 경쟁력 강화 • 새로운 교통시설, 전력 등 인프라 시설의 빠른 개발 • 양호한 투자환경 조성(예산, 세금, 관세 및 기타 혜택 제공)으로 러시아의 유럽지역과 동일한 비즈니스 여건 조성 • 러시아의 다른 지역과 교통 시간 단축 및 도로망 확충 • 아태지역 국가들과 무역 통상교류 강화와 역내 기업의 수출확대
<p>(제 2 목표)</p> <p>주민 수 증대와 수입 및 복지 증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율 및 평균수명 향상. 역내 진출 억제와 전입 확대를 통한 주민 수 증대 • 역내 근로소득 성장 속도를 러시아 평균보다 빠르게 하여 2025 년경 평균 임금이 러시아 평균보다 30% 높게 함. • 주택건설 및 복지시설 개발 속도 증대 • 토착 원주민의 전통적 생활양식 및 안정적 발전 지원

자료: 김정기(2015)

푸틴 대통령은 2013년 12월 연두교서에서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에 수출지향적인 비원료산업의 기업을 위한 특별한 조건을 갖춘 선도경제발전 특별구역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면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① 국내 시장 뿐 아니라 수출을 위한 인프라 측면의 제약을 제거하고 지역 간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위해 BAM(바이칼-아무르 철도)와 TSR(시베리아 횡단 철도)의 현대화를 추진한다. ② 국내 뿐 아니라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극동 지역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 아태지역국가들의 성공적인 지역개발 모델들을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지하자원개발, 인프라 구축, 건설, 교통 및 농업 개발, 원료-에너지 복합체에서 수출을 목적으로 원료 가공 및 현대적 생산 시설 구축 등 전통적인 분야 및 새로운 분야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실현한다. ③ 선도개발구역의 설립을 통해 투자 및 비즈니스 수행을 위한 여건이 아태지역국가들의 핵심 업무 중심지와 비교해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유치 등 대규모 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지역 개발 정책과 관련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표 3] 극동지역 9개 선도개발구역 선정 목록

연방주체	선도경제구역 명칭	소재지	특성화 분야	투자액 (10억 루블)		일자리 창출 수	면적 (ha)
				민간 (초기 입주자 기준)	정부 예산 (전체)		
연해주	나데즈딘스카야	나데즈딘스카야 구	운송-물류, 경공업, 식료품	6.73	3.972	1630	806
연해주	미하일로프스카야	미하일로프스키 구, 스파스키 구, 체르니고프스키 구	농업(돼지사육 및 가공, 사료공장)	39.03	4.438	2401	3151
하바로프스크 변경	하바로프스크	하바로프스크 구, 라키투넨스키 마을	운송-물류, 철강	28.52	2.361	3095	587
하바로프스크 변경	콤소몰스크	콤소몰스크-나-아무레시, 아무레시	항공기 및 부품, 목재가공	15.23	1.232	2700	210
아무르주	프리아무르스카야	블라고베웬스키 구, 이바노프 구	공업(시멘트 클링커, 석유정제 등), 운송-물류	128.9	0	1530	857.3
아무르주	벨로고르스크	벨로고르스크시	농공업 (콩가공, 동물사료, 베이커리 등)	1.45	0.046	275	702.3
캄차트카 변경	캄차트카	엘리조프스키 구, 페트로파블로프스크-캄차트스키시	관광-레저, 공업, 컨테이너 항만(북극항로용)	28.1	8.465	2918	2,200
추코트 자치주	베린고프스키	아나디르스키 구 석탄광산	석탄 및 천연가스 채굴 및 가공	8	0	450	5,960,000
사하(야쿠티아) 공화국	칸가라시	사하(야쿠티아) 공화국	산업단지 (세라믹블록, 니스 및 페인트, 플라스틱 관, 전자재 등)	1.11	0.2	350	16.9
합계(관리회사 자본금 포함)				257.07	20.714	15,349	5,968,531

자료: 변현섭(2015)

극동-2025 프로그램은 제조업 분야를 발전시키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극동 지역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제조업 분야는 항공기 제조, 우주 분야, 조선업, 석유화학, 그리고 자동차 산업 등이다. 항공기 제조와 조선, 그리고 자동차 부문은 극동지역에 일부 기반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 분야이고, 우주 및 석유화학 분야의 제조업은 새로 신설되는 부문이다. 극동 지역의 비교우위에 있는 광물 자원을 배경으로 관련 제조업 분야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단순 채굴 및 수출을 지양하고 광물자원 가공 산업을 활성화하여 부가가치 증대를 추구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부속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아직 세부계획이 계속적으로 수립되고 있지만 도시간 연계, 산업간 연계, 프로젝트간 연계가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하지만 주요 프로젝트 가운데 상당수가 인프라 수요가 많고 중장기 건설기간이 소요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단기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 유치가 필수적인데 교육, 주거환경 개선, 의료복지 향상 등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임. 특히 대학을 기반으로 혁신 경제로의 전환도 요구된다.

극동개발정책은 극동지역 자체의 개발보다 국가 전체의 한 부분으로서 극동지역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며 러시아 연방 차원의 개발계획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예를 들어 ‘러시아연방 에너지 전략 2030’은 러시아의 원유 및 천연가스 수출시장으로서 아·태지역의 비중을 20~2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러시아의 국영 석유회사들은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에서 새로운 유전·가스전을 발굴하기 위한 탐사를 진행하는 한편, 태평양 쪽으로 ESPO 송유관을 건설하였다. 또한 <2025 연방프로그램>에 포함된 극동지역 남부의 석유화학단지 건설계획은 이러한 송유관의 부설 계획과의 연관성 속에서 수립되고 있다.

유라시아 경제연합으로의 산업공간 재편은 다소 개발협력과 산업통상협력이 혼재하고 있어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크지 않다.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회원국들 간 상품, 서비스, 자본 및 사람의 자유 이동과 경제분야에서 공동정책을 확보하여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회원국들 상호간의 서비스무역, 설립 및 투자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점진적인 자유화를 수행하고²⁾ 최대한 많은 서비스분야에서의 단일 서비스시장을 창설하고자 한다.

하지만 회원국들은 각각의 국별 유보, 면제 부가 요건 및 조건에 관한 리스트(national lists of reservations, exceptions, additional requirements and conditions)를 통해 서비스무역, 설립 및 투자를 제한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와 관련한 조치를 도입, 시행할 권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당장 산업공간 재편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실제 러시아의 주요 교역대상국 가운데 수입측면에서 벨라루스가 117억불(2104년 기준)로 5위를 차지하는 것 말고 다른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과의 무역규모는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러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산업공간 재편은 고부가가치 산업과 저부가가치 산업간 공간적 재배치와 회원국간 산업내 무역을 통해 보다 유의의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유발할 것이다.

3) 글로벌 공급사슬망 연계 거점 육성

러시아 산업정책은 인프라 구축과도 관련성이 높다. 광활한 대륙을 품고 TSR과 새롭게 열리는 북극 항로는 러시아를 글로벌 공급사슬망의 중심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다. ‘러시아연방 철도교통 발전전략 2030’의 경우 러시아 철도의 주축을 이루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현대화 계획을 비롯하여 한반도종단철도(TKR) 등 접경국 철도와의 연결 계획을 포함하며, ‘러시아연방 교통 전략 2030’은 미래의 해운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

2) EEU조약 65조 1항 및 66조.

대되는 북극항로(NSR)의 개발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북극권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러시아는 유럽과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가장 짧은 국제 해양 운송 노선과 시베리아 강과 극동 항구를 연결하는 중요한 국내 노선을 확보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북극해 항로의 개척과 개발로부터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Ⅲ. 한·러 산업 협력

1) 한·러 양국의 산업생태계 연결 및 산업내 무역 증진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핵심역량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 생산 및 부가가치 창출 활동을 세계 전체를 공간적 배경으로 조달하고 공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생산 활동이 러시아 산업정책과 연계된 경우 한·러 양국간 협력의 시너지 효과는 증폭될 수 있다. 한국과 러시아의 글로벌 기업이 자원개발, 인프라 개발, 기술개발, 제조 및 생산, 물류, 마케팅, 비즈니스 서비스 등 맡아서 쌍방 간 투자가 활성화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한국과 러시아 기업의 가치사슬 서로 연결될 경우 양국 간 무역이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B2C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은 B2B, B2G로 확대될 수 있다. 이미 한국의 기업들이 러시아 B2C시장에서 더 이상 시장 점유를 늘리는 것에는 한계에 봉착하였다는 점에서, 또 위기시 양국간 무역 변동 폭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협력 방식은 양국간 산업통상 협력을 안정적으로 지탱하게 할 것이다.

또한 첨단기술을 매개로 상호보완성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러 간 과학기술협력의 필요성과 그 잠재성은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과학기술 분야의 성과는 크지 않다. 한·러 양국은 현재 혁신 주도 경제로 진입하고자 있다. 과학기술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먼저 다양한 형태의 과학기술 인력 교류 및 협력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기업의 추격으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기 위한 모멘텀이 필요하다. 더욱이 중국이 생산기지 및 시장 측면에서 포화상태에 달하면서 중국이 가지는 장점이 점차 소멸되고 있는 상황이다. 생산기지로서는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제2의 중국이 될 새로운 해외거점이 필요하며 저가제품 뿐 아니라 전자, ICT 등 하이테크 분야까지 중국기업의 성장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시장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하이테크 분야에서 러시아 스타트업 기업과 히든 챔피언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

한국과 러시아의 스타트업 기업과 기초과학 분야와 혁신 기업 간 매칭 협력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벤처기금 등이 확보된다면 가치사슬에 입각한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양국 간 협력은 한층 공고화될 것이다.

2) 극동개발 협력

천연자원과 생태자원의 보고인 극동 러시아는 그동안 발전 잠재력에 비하여 열악한 투자환경과 적은 투자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 한국 경제의 추가 성장 동력원과 통일 한국의 유라시아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극동지역 상호간 산업통상협력이 필요하다.

한국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동력원(에너지, 자원,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 보장되어야 하며, 러시아 극동지역은 그러한 동력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적합한 지역이며 러시아 극동지역은 우리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관련 주요 정책의 시발점이기도 하다.

때마침 러시아 정부는 과거와 다른 속도로 극동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의 극동개발 정책의 핵심 방향은 ① 국내외 투자유치를 통한 가공산업 및 제조업 육성과 인프라 구축 ② 빠른 시일 내 수출 상품 생산과 아·태지역에 대한 수출 확대 ③ 극동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수 증대 등이다. 주요 세부 과제로 제조업 및 자원 가공 관련 산업 클러스터 조성, 콩 클러스터 및 수산 양식장 개발 등 농수산업분야 클러스터 조성, 인력 양성 및 R&D 강화, 클러스터의 기반 시설인 수송망과 전력 시스템 구축 등 각종 인프라 건설, 주민복지와 관련된 각종 공공시설 건설 등이 제시되고 있다. 한국기업들은 이 분야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실질적인 극동개발 전략의 하나로 새로운 형식의 경제특구라 할 수 있는 ‘선도개발구역’(TOR, Advanced Development Zone) 지정을 통해 극동의 자원을 활용하는 가공산업 및 제조업 육성과 아·태지역으로의 수출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 자동차 클러스터, 하바롭스크지방의 콤포스토크-나-아르르의 항공·조선 클러스터 등 극동 각 주정부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던 기존의 경제특구 및 ‘혁신적 지역 클러스터’ 정책도 병행하여 추진 중이고 우리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업들이다.

그리고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도 러시아 극동개발에 새롭게 접근 중이라는 점에서 한국정부도 새로운 접근 방식 마련이 필요하다.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 진행 중이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중국의 극동진출에 주저하던 러시아 정부도 중국과의 협력에 적극적 자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러시아정부의 극동개발정책과 맞물려 북한과 러시아간 경제 협력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물론 UN의 대북제재로 당분간 남북러 3각 협력이 당분간은 진행되지 어렵다. 그러나 결국 한반도 통일을 위해 러시아와 한반도 접경 지역에서 초국경협력을 감안한다면 여전히 협력의 가능성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도 대러 협력기구인 ‘일로교류촉진관민연락회’를 정부차원에서 출범시키고 에너지를 시작으로 농수산 분야 등으로 협력 범위 확대해 가고 있다.

따라서 자유항으로 지정된 블라디보스토크와 연계된 주변의 선도개발구역을 하나의 산업공간으로 하여 한국의 산업공간과 연계시키는 노력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 글로벌 공급사슬 연계 및 생산공급 거점 협력

유라시아 대륙의 가장 큰 국가인 러시아는 글로벌 공급사슬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잠재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TSR은 동북아시아 경제권과 EU를 연결시키는 가교로서 인정받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와 북극해 빙하 감소로 북극해 항로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간, 거리,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매력적인 수송로로 북극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가 가진 글로벌 공급사슬로서의 이점을 확실하게 하려면 관련 인프라와 법과 제도적인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인프라는 시장의 힘에 의하여, 법과 제도는 정치적인 힘에 의하여 결정된다.

러시아는 트랜짓 국가로서의 장점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물류의 거점이 되는 공간을 어떠한 형태의 공간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류의 시스템이 단순히 점과 점을 이어주는 단선적인 것을 넘어서는 경우에만 물류 시스템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IV. 결론

1992년 1.9억불에 불과했던 한국과 러시아 간 무역규모는 연평균 24.9%씩 증가하여 2014년에는 258억불까지 도달하였다. 이는 1992년 대비 134배가 증가한 규모이다. 물론 직선적으로 계속 성장한 것은 아니었다. 1998년 러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 시기마다 양국 간 교역은 급감하였다. 다행히도 러시아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하면 양국간 교역 규모는 그 이전보다 더 큰 규모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지금 다시 러시아 경제는 위기에 처하고 있다.

러시아 경제는 결국 위기를 극복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양국간 교역규모가 위기 극복과 동시에 다시 크게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다. 과거와 달리 중국이라는 경쟁자가 나타나 품질과 가격에서 모두 한국을 턱밑까지 추격해왔기 때문이다. 한 가지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한러 양국간 협력의 상호보완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 러시아는 산업통상 협력에 한걸음 더 나아간 새로운 접근방법을 통해 양국이 원하는 협력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러시아가 현재 추진하는 산업정책은 상품과 완제품 교역만으로 그 협력의 깊이와 폭을 넓힐 수 없는 것이다. 수입대체 정책은 결국 현재와 같은 산업간 무역이 아니라 산업 내 무역을 증진시킬 경우에만 의미있는 산업통상 협력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한국기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러시아 시장에 투자하고 산업내 무역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지만 상업적인 측면에서 한국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 비즈니스하고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개발도 필요하다. 한국기업들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조건과 더 많은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것을 서로 이해한다면 협력의 제도화와 지원체계 구축에 양국 정부가 보다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카자흐스탄의 산업정책과 한국과의 협력방안: 카자흐스탄의 중·단기 산업정책을 중심으로¹⁾

박지원(KOTRA)

I. 서론

카자흐스탄 경제가 기본적으로 자원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석유와 가스 및 광물의 채굴산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정부는 자원가격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이러한 경제구조를 타파하여 산업다각화를 이루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원자재 수출에서 얻어진 수익의 일부를 다른 산업부문에 투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와 같이 산업육성을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자본의 투입을 재조정하는 정책은 경제에서 원자재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국가들이 이미 사용해 왔던 전례가 있다.²⁾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 근간은 원자재 수출로 얻어진 외화의 국내유입을 방지하는 ‘불태화 정책’을 통해 국내 산업이 가격적인 측면의 비교우위를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정부의 인위적인 자본투자를 통한 제조업 육성에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산업다각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정부주도하의 자원배분을 통해 제조업 육성과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리고 지난 2012년 <카자흐스탄 2050> 전략을 새롭게 제시하면서 장기적인 경제발전 계획과 그 성취를 위한 경로를 재구성하였다. 기존의 <카자흐스탄 2030> 전략 수행완료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서둘러 내놓은 것은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기존 정책 노선이 빠르게 수정되어야 하였기 때문이며 그 핵심은 자원위주 경제성장에서 탈피한 자국 내 산업육성이다. 정부의 선제적이고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자원의존적인 경제구조의

-
- 1) 본 논고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2015 전략지역심층연구’ 과제로 저자가 공동연구로 참여한 ‘한-유라시아 주요국 산업협력을 위한 전략적 제후방안 연구’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하였습니다.
 - 2) GCC 국가들의 국가재정에서 원유에 의존하는 비중은 가장 낮은 오만과 아랍에미리트(UAE)의 경우 77%, 가장 높은 쿠웨이트의 93%까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국가들의 산업화는 현재까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천연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의 산업화가 쉽지 않은 경로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최근 클러스터 개발 위주의 제조업 육성에 자원을 집중하고 있지만 단순한 인프라 구축위주의 정책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Christian Ketels, “From clusters to cluster-based economic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Technological Learning, Innovation, and Development*, Vol. 1, No. 3, 2008, p. 386.

타파가 어려운 것임을 자인한 것이다. 同계획의 핵심목표는 카자흐스탄을 2050년까지 세계 30대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는 것으로서 변화된 국제정세에 맞추어 카자흐스탄의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³⁾

그리고 이러한 장기계획 실현을 위해 정부는 중단기적으로는 <국가 산업·혁신발전 프로그램> 수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단계는 2010-2014년까지, 2단계는 2015-2019년까지 시행되게 되어 있어 현재는 2단계의 초반 산업화 단계에 있다. 1단계 프로그램에서 정부는 경제특구를 통한 투자유치에 목적을 두었다면 2단계 프로그램에서는 제조업 성장에서 정부의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해 국영지주회사인 ‘바이테렉’을 활용하고 있다. 바이테렉은 그 산하에 다양한 투자 펀드와 공사를 두고 운영하면서 카자흐스탄 산업화와 산업다각화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부의 자금을 기업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1단계 프로젝트의 계획과 완성된 시점까지의 카자흐스탄의 경제구조와 2단계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 및 이를 기반으로 한 한국과의 협력방안을 살펴본다.

II. 카자흐스탄 경제구조와 한-카자흐스탄 무역구조

다음의 <표 1>은 카자흐스탄의 품목별 수출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광물자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그 등락폭이 매우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광물자원은 카자흐스탄 성장을 위한 정책의 마중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동시에 경제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기도 하다.

<표 1> 카자흐스탄의 상위 수출품목별 수출증가율 (단위: %)

품목/기간	2010- 2011년	2011- 2012년	2012- 2013년	2013- 2014년
광물연료, 원유, 정제제품	55	2	-3	-3
철, 철강	66	-4	-45	-5
무기화학제품, 귀금속화합물, 동위원소	15	17	-11	-15
광석, 슬래그 및 재	103	-10	-32	-6
구리 및 관련제품	53	14	-23	-37
곡물	-23	123	-22	-14
보석, 금속, 동전 등	36	15	-41	-33
아연 및 관련제품	38	34	-56	29
소금, 유황, 석재, 석고, 석회, 시멘트	138	4	-30	13
맥아, 녹말, 눌린, 글루텐	2	9	-6	-1

3) 박지원, “카자흐스탄의 <2050 전략과 산업다각화>,” Emerics 칼럼, 2015. 3. 15

기계, 원자로, 보일러 등	153	63	-12	-18
알루미늄 및 관련제품	49	-12	-1	-21
과일, 씨앗	189	175	-26	47
선박류	5495	119	-3	96
전기·전자제품	111	79	-3	12
항공기, 우주선 및 관련부품	-33	191	-2	17
납 및 관련제품	101	-10	-51	31
철, 철강소재 제품	95	10	-2	-9
기타 비금속 및 관련제품	78	22	-29	-25
플라스틱 및 관련제품	89	38	-22	25
Total	54	5	-11	-5

* 자료: www.trademap.org

상기의 표를 보면 2010-2011년도 주요 국제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상위수출품목의 수출 증가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광물원료 및 원유·정제제품 등의 경우는 55%, 철강류는 66% 등으로 매우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 광석 및 슬래그, 구리, 아연 등의 주요 원자재의 경우도 전년대비 수출증가 상승폭이 매우 크다. 하지만 2012-2013년과 2013-2014년 의 경우 글로벌 경기가 불황으로 이어지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들 주요 원자재 상품의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원자재 수출이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2012-2013년 사이에 철 및 철강 제품은 전년대비 45%나 수출이 감소하였고, 광석·슬래그, 구리, 아연 및 관련제품 등도 각각 -32%, -23%, -53% 등의 수출 감소를 나타냈다. 그리고 이러한 동향은 2013-2014년도 까지 계속되면서 주요 10대 수출품에서 아연 및 관련제품, 소금·유황·석재·시멘트 등의 두 가지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출감소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카자흐스탄은 대체로 높은 무역개방도 수준을 보여 왔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장기간 계속된 국제 원자재가격의 상승을 기반으로 한 수출을 바탕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무역개방도가 높은 국가는 일반적으로 세계경기변동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는 단점이 있으며 특히 카자흐스탄과 같이 원자재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는 그러한 위험성이 더 크게 나타난다. 2008년도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및 최근 2014-2015년의 원자재 하락과 같은 상황에서 카자흐스탄은 주요 수출품인 원유 등의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인해 무역수지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카자흐스탄의 경제구조는 무역자유화 지수의 변화에서 살펴볼 수 있다. 2000년도 67에 불과하였던 무역자유도는 2004년까지 하락하였으나 2006년 69.2로 개방성이 확대되었고, 2008년에는 86.2까지 상승하여 최대의 개방도를 보였다.⁴⁾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

4) 다음은 Heritage Foundation, Index of Economic Freedom에서 평가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무역자유화 지수 변화 추이이다.

연도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지수	67.0	65.0	65.0	69.2	86.2	85.9	78.2	78.2

후 세계적으로 자국시장 보호에 대한 기조가 확산되자 카자흐스탄 또한 자국 시장 보호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대외정책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2010년에 무역자유도는 85.9를 기록하여 개방도가 감소하였으며 2012년과 2014년에도 78.2를 나타내는 등 최근의 단기적인 추세는 무역자유도가 하락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체제전환 이후 현재까지의 장기적 관점에서 카자흐스탄의 무역자유도는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이러한 개방적인 체제하에서 원자재 중심의 편중된 무역구조는 거시적인 차원의 안정적인 경제운용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교역 대상에 있어서도 편중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음의 표는 2013년 카자흐스탄의 주요 교역국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카자흐스탄의 주요 교역국

순위	수입		수출	
	국가	비중	국가	비중
1	러시아	35.6%	EU	45.6%
2	중국	25.8%	중국	23.3%
3	EU	18.0%	러시아	8.5%
4	우크라이나	4.3%	캐나다	4.0%
5	미국	2.3%	터키	2.6%
6	대한민국	2.2%	우즈베키스탄	2.2%
7	터키	2.1%	미국	2.1%
8	벨라루스	1.8%	스위스	1.8%
9	우즈베키스탄	1.7%	세르비아	1.3%
10	일본	1.4%	키르기스스탄	1.2%

* 자료: European Union Trade in Goods with Kazakhstan, European Commission, 2013

카자흐스탄의 주요 수입국은 러시아와 중국, 유럽연합의 3개 지역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가 35.6%를 차지해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중국과 유럽연합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10년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 관세동맹 시행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러시아 제품의 카자흐스탄 유입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준다. 카자흐스탄의 주요 수출국은 유럽연합이 45.6%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중국과 러시아의 순이다. 특히 유럽연합과 중국을 합하면 수출의 68.9%를 두 지역이 차지하고 있어 수출지역의 편중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카자흐스탄은 수출품목에서 지나친 원자재 의존과 수출 국가에 있어 몇 개 지역에 의존한 편중된 구조를 복합적으로 갖고 있어 경제의 대외변수에 대한 취약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약성 극복을 위한 경제구조의 다각화 및 교역 규모의 분산은 국가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표 3> 카자흐스탄의 대 한국 수출구조(천달러)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HS	총수출	232,868	279,213	300,100	128,569	872,608
'27	광물 및 연료	0	0	0	0	789,349
'72	철강	173,169	153,012	147,205	68,515	73,537
'81	기타 금속 및 제품	12,301	53,365	89,678	36,099	5,731
'28	무기화합물	1,426	1,131	3,075	2,794	2,226
'84	기계류	1,533	313	476	510	503
'05	동물제품	267	518	180	291	343
'85	전기전자	1,590	418	232	726	262
'73	금속제품	0	2	4	3	163
'40	고무 및 제품	0	0	2	0	121
'49	인쇄물	14	72	79	124	93
'87	차량	1	117	68	0	83
'90	광학제품	58	28	8	158	72
'39	플라스틱 및 제품	21	10	2	2	45
'18	코코아 등	0	0	0	0	40

* 자료: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교역동향을 살펴보면, 카자흐스탄의 한국에 대한 수출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크게 확대되었다. 주로 에너지 자원의 수출이 2014년 이후 본격화 되면서 총 수출 확대에 기여했다. 상기의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카자흐스탄의 대 한국 수출 품목에서도 2014년도 총 수출 약 8억 7천만 달러 중 약 90%에 달하는 7억 9천만 달러를 광물 및 연료 관련 제품이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철강 및 기타 금속 제품을 더하면 사실상 카자흐스탄이 한국에 수출하는 제품은 대부분이 광물 및 관련 가공 제품이며 공업 생산품의 수출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카자흐스탄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제품은 차량 및 기계류, 전기전자 제품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로 차량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기계류, 전기 전자 제품, 플라스틱 제품 등 한국의 카자흐스탄에 대한 수출은 공업생산 제품이 대부분이다. 이들 주요 제품의 카자흐스탄에 대한 수출 증가로 카자흐스탄의 한국제품 수입은 2010년 대비 2014년에 약 2배가량 증가하였다.

<표 4> 카자흐스탄의 대 한국 수입구조(천 달러)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HS	총수입	527,256	622,485	956,686	1,250,288	1,067,779
'87	차량	46,090	111,188	253,489	446,505	396,186
'84	기계류	98,253	125,117	156,855	272,168	182,216
'85	전기전자	83,346	116,042	246,362	177,249	132,263
'39	플라스틱 제품	106,601	110,884	117,285	115,591	104,137
'72	철강	14,999	14,174	25,951	44,426	37,296
'90	광학제품	15,817	19,411	23,203	27,456	32,686
'73	철강제품	8,252	28,840	23,037	22,858	27,088
'94	가구 등	6,729	22,058	7,713	15,410	23,414
'44	목재 및 제품	769	4,670	2,316	6,270	16,593
'40	고무 및 제품	6,545	10,134	23,755	22,969	15,032
'27	광물 연료	6,797	9,144	10,831	13,640	14,846
'24	담배	5,350	4,117	8,657	13,992	11,520

* 자료: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주요 수입품 가운데 자동차 관련 제품이 약 4억 달러에 달해 전체 수입의 37%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계류도 1억 8000만 달러를 상회하면서 17%의 수입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거 다음은 전기전자 제품으로 약 1억 3000만 달러, 플라스틱 제품이 약 1억 달러 가량의 수입금액을 보이고 있다. 2014년 중반부터 국제원유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원유 수출국인 카자흐스탄의 경기에도 영향을 받고 있으며 주요 제품 수입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Ⅲ. 1단계 산업화 정책의 현황과 평가

<국가 산업·혁신발전 프로그램>은 2010년 4월 카자흐스탄 정부에 공식적으로 승인되었는데 1단계는 2010-2014년까지, 2단계는 2015-2019년까지 추진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카자흐스탄 2050> 전략이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비전을 제시하는 목적의 전략제시라면 <국가 산업·혁신발전 프로그램>은 2019년까지 중·단기적인 산업화 추진을 위한 전략을 담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다시 1 단계인 <국가 산업·혁신발전 촉진 프로그램 2010-2014(State Program for Accelerated Industrial and Innovative Development of Kazakhstan for 2010 - 2014)>과 2 단계인 <국가 산업·혁신발전 프로그램 2015-2019(State Program of the Industrial and Innovative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for 2015- 2019)>로 나누어진다. 1 단계 프로그램은 2009년 6월 대통령령으로 인가되었는데 주요 목적으로는 1) 카자흐스탄 경제의 다변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선 분야의 발전 2) 주요 투자 프로젝트와 산업부문의 발전 3) 산업화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 4)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의 선도적 중심지역 형성 5) 경제의 우선적 발전 분야에 대한 정부와 민간부문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이 포함되어 있다. 1단계

산업화 프로그램의 예산은 총 196억 텡게인데 이 가운데 135억 텡게가 경제특구 건설에 집중되어 있으며 47억 텡게가 수출장려, 나머지 14억 텡게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에 할당되어 있다. 결국 1단계 프로그램의 핵심은 경제특구의 기반 조성과 이를 통한 산업부문의 발전에 있는 것이다.

경제특구를 통해 카자흐스탄 정부는 비원자재부문의 성장을 위해 새로운 산업생산 기술을 도입하고 혁신적인 생산기반을 갖추는 데 국제적인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혁신 클러스터의 개발을 통해 제조업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실현해 나갔던 것이다.⁵⁾ 특히 경제특구는 <국가 산업·혁신발전 촉진 프로그램 2010-2014> 프로그램의 추진에서 4번째 추진 목표인 지역경제의 선도적 중심지역 형성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카자흐스탄 정부의 경제특구 개발은 정부의 산업화 정책실현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정책 수행의 지표이자 그 자체로 성과관리를 위한 정책목표가 되고 있는데 카자흐스탄 정부가 2010년 설정한 주요 목표로서 ① 글로벌 2000개 기업 중에서 18개 기업의 유치 ② 경제특구 참여기업을 2015년까지 159개로 확대 ③ 경제특구 내 제품 생산금액을 7,180억 텡게로 확대 등을 제시하면서⁶⁾ 주로 중·단기적인 정책수행의 목표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표 5>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지정한 경제특구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 5> 카자흐스탄의 특구 지정현황

특구명	설립연도	지정기한	위치	면적	주요기능
Astana-New City	2001년 6월	2027년	아스타나 시	7,526ha	건설, 산업
Seaport Aktau	2002년 4월	2028년 1월	망기스타우	2,000ha	금속가공, 장비제작
Innovation Technologies Park	2003년 8월	2028년 1월	알마티	163ha	IT 혁신장비 제조
Ontustyk	2005년 7월	2030년 7월	남카자흐스탄	200ha	섬유
National Industrial Petrochemical Technology Park	2007년 12월	2032년 12월	아티라우	3,475ha	석유화학
Burabay	2008년 1월	2017년 12월	아크몰라	370ha	관광
Saryarka	2011년 11월	2036년 12월	카라간다	534ha	금속가공
Pavlodar	2011년 11월	2036년 12월	파블로다르	3,300ha	석유화학
Khorgos-Eastern Gates	2011년 11월	2035년	알마티	5,740ha	통상, 물류
Chemical Park Taraz	2012년 11월	2037년 1월	잠불	505ha	화학

* 자료: Kazakhstan: Special Economic Zones, 카자흐스탄 투자청

5) 박지원, op. cit.,

6) Sabit Khakimzhanov and Ai-Gul S. Seitenova, "In Search of Coherence: Kazakhstan's Trade and Industrial Policy," University of Central Asia, Working Paper No. 18, 2013, p. 20.

카자흐스탄 정부가 가장 먼저 경제특구로 지정한 곳은 아스타나 경제특구이다. 1990년대 수도를 알마티에서 아스타나로 이전한 이래 정부는 아스타나로의 인구 증가와 도시 자생력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인구 증가에 따르는 주거 및 상업시설 확보에 노력을 기울였다. 악타우는 서쪽 카스피해 인근의 유전지대에 위치한 항구도시로 유전개발과 관련한 각종 설비와 장비 등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왔다. 아티라우 역시 원유생산 지대에 위치한 도시로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단순 원유의 수출이 아닌 원유의 가공을 통한 석유화학제품의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로서 산업 다각화의 의미를 가진 도시이다. 호르고스-이스턴 게이트는 알마티를 중앙아시아의 물류거점으로 성장시키고자 지정한 물류 중심의 경제특구이다. 이 특구는 2011년 11월 대통령령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카자흐스탄의 2020년까지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전략적인 경제특구이다.⁷⁾ 본 경제특구는 중국 상품의 생산과 물류기지 역할을 담당하도록 설계되었는데 중국 동부지역의 연롄강 인근에 카자흐스탄 정부가 건설한 물류기지로 부터 상품을 수집하는 중간 허브 역할을 하게 되며 이곳으로부터 유라시아 전역으로 상품을 배송하는 물류중심지가 된다.

카자흐스탄의 경제특구 개발 정책은 중·단기적인 정부의 산업화 정책의 틀 안에서 지역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특화된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약 10년 간 지정된 경제특구들은 넓은 카자흐스탄 영토에 산재한 주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가진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지정되었으며 동시에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의 클러스터 중심 경제개발은 지난 2005년 하버드(Havard)대학의 포터(Michael Porter) 교수를 초대하여 그의 지역별 산업클러스터 정책을 수용하면서 본격화되었고,⁸⁾ 경제특구 개발은 이와 같은 산업다각화 정책의 일부이며 관리 체계이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는 <비즈니스 로드맵-2020(Business Road Map 2020)>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의 추진 목적은 크게 1) 신비즈니스 이니셔티브의 지원 2) 기업부문 건전화 3) 수출중심 산업지원 이라는 3 가지로 구분된다.⁹⁾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경기가 악화되면서 기업부문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도산하는 기업이 늘어나자 카자흐스탄 정부는 재정투입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체질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적으로 동전략을 추진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 산업·혁신발전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단기적 목표와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단기적 위기극복을 목적으로 한 중·단기적 프로그램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부문 건전화라는 두 번째 추진과제는 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무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부실화 된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은행 대출금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으로 대출이자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취했으며 대출금 상환에 문제를 겪는 기업에게도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 금융지원에 초점을 맞춘 정책에 중심을 두었다. 신 비즈니스 이니셔티브 지원과 수출중심 산업지원의 2가지 추진과제는 기업 부문의 체질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산업다각화 정책에 부합하는 것이다. 첫 번째 신 비즈니스 이니셔티브 지원 정책은 다시 4가지 주요 실행과제로 구분되는데 그 가운데 두 가지는 기업부문 건전화와 같은 방식의 금융지원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다만, 지원 대상이 주로 천연자원 부문이 아닌 새로운 기업

7) 호르고스-이스턴 게이트 홈페이지, (<http://sezkhorgos.kz/ru/o-kompanii.html>, 검색일: 2015년 6월 13일)

8) Hilda C. Eitzen, "Dilemmas of Diversificatio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Business-Industrial Clusters in China and Kazakhstan," *Journal of Emerging Knowledge on Emerging Markets*, Vol. 4, 2012. p. 7.

9)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13 апреля 2010 года № 301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рограммы «Дорожная карта бизнеса 2020», стр. 1-2.

이나 프로젝트, 산업 현대화, 생산시설 확장 등의 목적인 경우가 우선 지원대상이라는 점이 차이점이다. 나머지 두 가지 정책 가운데 하나는 산업생산 인프라 발전 지원정책으로 산업생산과 관련된 도로, 배수로, 난방, 상수도, 철로, 전화망, 변전소 및 송배전 시설 등의 확장 및 현대화와 관련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비즈니스 서비스 지원정책으로 수도인 아스타나(Astana) 또는 경제중심지인 알마티(Almaty)와는 달리 여전히 카자흐스탄의 지방 도시들은 각종 비즈니스 및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여건이 낙후되어 있으므로 정부차원에서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과 마케팅 제공, 비즈니스 프로세스 제시, 회계 및 법률정보 제공, 기업 운영 및 정보기술 등의 다양한 사업 환경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¹⁰⁾

두 번째 수출중심 산업지원도 주로 재정적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주로 원자재 수출과 관련되지 않은 생산품을 10%이상 수출하는 기업에 대한 은행대출금의 보조금 지급이 주된 지원방법이 되고 있다.

IV. 2단계 산업화 정책: 지주회사 중심의 국가 주도형 산업육성

카자흐스탄의 산업정책은 개방과 국가주도 전략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에서 과거 카자흐스탄의 산업화 정책 및 프로그램과 큰 차이가 없다. 물론 동일한 정부의 장기적 계획하에 산업정책이 진행되고 있지만 전략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외국인 직접투자 전략과 함께 국내 제조업과 벤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자원배분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개방과 정부개입을 매우 적극적으로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 성공 여부는 자원의존형 경제의 발전모형에 커다라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카자흐스탄의 정책은 과거부터 정책의 큰 틀을 구성하는 <카자흐스탄 2050> 정책과 <국가 산업·혁신발전 프로그램> 의 2 단계 산업화 과정에 준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2단계인 <국가 산업·혁신발전 프로그램 2015-2019> 는 1단계의 산업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산업다변화를 촉진하는 데 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으로는 1) 제조업 발전 촉진 2) 주요 산업분야에서 부가가치와 효율성 향상 3) 비석유 부문의 비중 증가를 위한 시장 확대 4)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 5) 제조업 우선 분야의 기술 효율성 증대와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미래 산업 기반마련 6) 제조업 분야에서 비즈니스 활동 촉진과 중소기업 발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과제 실현을 위해 연간 구체적인 투입 재정을 확정하였다. 정부는 2단계 1차 연도인 2015년에 약 3,275억 텡게라는 많은 자원을 투입하여 산업화의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이후 2016년에도 약 1,113억 텡게를 투입할 계획에 있으며 2019년에는 약 658억 텡게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1단계의 산업화 전략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1단계 경제특구의 기반 조성에 이어 2단계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한 본격적인 산업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의 <표 6>은 2 단계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예산 추진 계획을 보여준다.

10) Ibid., pp. 11-12.

<표 6> 2단계 산업화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예산

(단위: 백만 텡게)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327,506.3	111,324.6	74,464.6	64,785.3	65,828.8

* 자료: Baiterek 홈페이지

카자흐스탄 정부는 산업발전 계획에서 국가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부문을 강화할 것이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으나 산업화와 주요 전략 산업에 있어서는 정부의 주도권을 놓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는 혁신적인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 단순히 세금을 감면하는 등의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¹¹⁾ 세금면제 방식의 산업육성책은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으나 그다지 큰 성과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자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자금을 각각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업에 배분하거나 운영하는 방식의 정책실현을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정부재원의 분배를 통해 산업간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책현실화의 결과물을 염두에 둔 다양한 방식의 정부운영 펀드 및 기구를 산업육성의 도구로 삼고 있다.

이러한 산업정책의 수행을 목적으로 카자흐스탄 정부는 2000년대 초반 산업부문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지원 목적의 다양한 국가 기구를 창설하였다. 2000년대 초부터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이 시작되었고 원유와 천연가스, 광물 등의 원자재 수출로 막대한 금액의 외화가 유입되자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러한 자금을 원자재 이외의 산업분야 발전을 위한 각종 마중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이러한 정책적 의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동원한 정책 메커니즘은 매우 특기할 만한 것인데 그 요체는 2013년 국영 지주회사인 ‘바이테렉(Байтерек)’을 설립한 것이다. 이 기구는 효율적인 산업정책 집행과 자금 제공, 운영과 관리의 편의를 목적으로 한다. 즉, 산업정책의 구성요소에 있어서 자원의 배분(Channelling)과 관리(Management)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2015년 12월 기준으로 바이테렉은 산하에 11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카자흐스탄-2050>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카자흐스탄 경제에서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부문에 대해 정부차원의 재정적인 자금 제공과 행정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바이테렉의 자회사 중에서 ‘기술 개발공사’, ‘카자흐스탄 투자펀드’, ‘카자흐스탄 개발은행’ 등의 3개 기업은 카자흐스탄 산업화와 산업다각화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도록 정부의 자금을 기업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정부가 설립한 국영기업으로 바이테렉 산하에서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산업화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다.

‘기술 개발공사(Национальное агентство по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му развитию)’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2003년 ‘국가혁신펀드(Национальный инновационный фонд)’라는 명칭으로 창설하였다. 이 공사의 설립목적은 카자흐스탄 내에서 산업분야의 혁신적인 기업 활동을 촉진된 자금을 활용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운영적 지원을 겸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따라서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들의 창업에서부터 성장에 이르기까지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기구로 볼 수 있다.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이 부족하거나 창업 초기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초기 자금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

11) КИСИ, Казахстанский путь - 2050. Книга 1. Экономика Казахстана в XXI веке, (Алматы: В олкова Е.В, 2014), с. 48.

다. 다음의 <표 7>은 2013년 기준 기술 개발공사의 자금 지원 내역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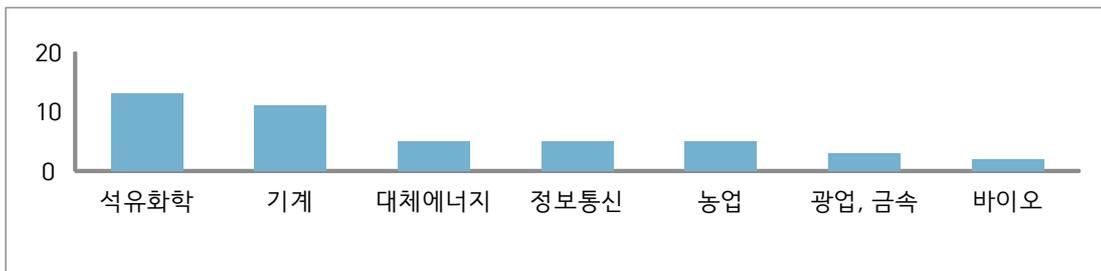
<표 7> 기술 개발공사의 부문별 자금 지원내역(2013년)

부문	금액(백만 텡게)	비고
혁신자금 지원	822.8	산업별 선별 지원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307.0	테크노 파크 입주기업 운영관련 지원
기술 이전 자금지원	80.7	로열티 지급 자금지원

* 자료: 기술 개발공사 2013년 사업보고서

위의 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이 기술 개발공사의 자금 지원사업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것은 각 산업에 대한 혁신 자금 지원 부문이다. 2013년 한 해에 총 44개 혁신 프로젝트에 대해 약 8억 2280만 텡게의 자금을 지원하였다. 혁신자금은 기본적으로 수혜를 보는 기업이 상환의무를 갖지 않는 자금으로 기업이 혁신자금을 신청하면 공사는 내부적인 선별절차를 통해 수혜기업을 결정하게 된다. 2013년의 44개 선정 기업을 산업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산업별 혁신자금 지원 내역(2013년)



* 자료: 기술 개발공사 2013년 사업보고서

혁신 자금의 산업별 지원내역을 보면 석유화학 산업이 총 13건의 지원을 받아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그 다음은 기계 부문으로 총 11건의 자금지원을 받았다. 그 뒤를 이어 대체에너지, 정보통신, 농업 부문이 각 5개 프로젝트에서 선정되었으며 광업·금속 부문과 바이오 부문은 각각 3개와 2개의 프로젝트에서 선정되었다.

석유화학 부문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의 창업이 많고 이에 대한 공사의 지원비중이 높은 것은 카자흐스탄의 전반적인 화학 및 석유화학 산업 성장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카자흐스탄 경제에서 원유를 중심으로 한 채굴산업과 가공부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산업부문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카자흐스탄 정부가 파블로다르, 아티라우, 잠불 지역에 조성한 경제특구의 경우 화학제품이나 석유화학 제품

에 특화된 경제특구로 성장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이와 연관이 있다.¹²⁾ 광업이나 금속 관련 프로젝트 역시 석유화학 부문과 마찬가지로 천연자원과 관련된 전·후방산업과 연계된 혁신 프로젝트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체에너지 부문에 대한 프로젝트가 5건 선정된 것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다. 카자흐스탄이 현재로서는 자원이 풍부한 국가로서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자원고갈과 환경 문제 등에 대비한 대체에너지 기술의 개발은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대체에너지 부문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도 다양한 산업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기술개발 공사의 또 다른 자금 지원은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공사는 자회사로 9개의 각 지방별 테크노 파크와 6개의 기타 기관을 두고 있는데,¹³⁾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사업은 주로 9개 테크노 파크에 입주한 약 20개 기업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으로 보조되고 있다. 또한 기술이전 자금 지원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사용에 대한 로열티 지급을 보조하는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금액은 그리 크지 않다. 상기의 자금들은 공사가 자금 지원을 하지만 원칙적으로 자금회수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없는 지원금이다.¹⁴⁾ 즉, 정부차원에서 혁신 프로젝트의 성공여부에 관계없이 기업에 대해 공여하는 성격의 자금이다. 자금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주로 기술력을 가진 소규모 벤처기업들이다.

‘카자흐스탄 투자펀드(Инвестиционный фонд Казахстана)’는 2003년 5월에 설립되었으며 2011년 8월 정부의 신기술 산업부 산하로 이관되었다. 이후 2013년 5월 바이테렉 산하 기업으로 등록되었다. 2014년까지 이 펀드의 기능은 사실상 다른 펀드와 중복되는 성격을 갖고 있었다. 2013년 기준으로 카자흐스탄 투자펀드가 지분의 일부에 대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표 8> 카자흐스탄 투자펀드의 지분투자 기업과 총액(2013년)

산업부문	기업 수	투자 총액 (십억 텡게)
목재가공	5	6.9
야금, 채굴	4	2.6
화학	1	1.0
섬유	2	1.3
항공	1	0.5
건설, 자재	4	2.6
농업	3	4.0

12) 다른 산업 부문과 마찬가지로 원유·가스 산업 역시 산업 내에서의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PwC가 원유·가스 관련 기업의 중역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에서 88%의 응답자가 향후 5년 내 기업발전에 있어 혁신이 중요한 요소라고 답하였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원유·가스를 기반으로 한 석유화학 산업의 발전이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요인이며 지속적인 산업 내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투자뿐만 아니라, 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끊임없는 투자가 필요하다. PwC Consulting, “Gateway to growth: innovation in the oil and gas industry,” 2013, p. 3.

13) 기술 개발공사 2013년 사업보고서, p. 128.

14) 반면, 일부 자금의 경우 국내와 국외로 나뉘어 향후 투자 및 이익금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형태의 자금지원도 있으나 그 금액은 전자에 비해 그리 크지 않다.

수산업	1	1.2
교통	1	5.8
금속제조	1	0.2

* 주: 지분투자 기업 중 지분전량이 아닌 일부 투자기업만을 표시

* 자료: ПРОЕКТЫ АО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ФОНД КАЗАХСТАНА»

카자흐스탄 투자펀드가 2013년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한 산업부문은 목재가공과 교통, 농업의 순서이다. 특히 목재가공 부문은 총 5개의 기업에 약 69억 텡게의 자금을 투자하여 가장 높은 투자비중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는 교통 부분으로 1개 기업에 대한 투자가 58억 텡게에 이를 정도로 집중적인 투자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 기업은 카자흐스탄 철도공사이다. 다음의 투자비중이 높은 산업분야는 농업, 건설부문, 야금·채굴 부문으로 나타나고 있다.

카자흐스탄 투자펀드가 기술개발공사의 자금 지원정책과 다른 점은 첫째, 동공사의 경우 사실상 투자를 통해 해당기업의 지분을 매입해왔다는 점이다. 투자 내역가운데 지분의 전부(100%)를 매입한 기업은 10개로 나타나는데, 그 숫자와 금액이 그리 크지 않으며 상당부분은 지분의 일부를 매입한 투자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각각의 기업에 대한 투자 금액 규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산업분야가 기술개발공사의 투자 분야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술개발공사의 투자금액과 투자부문이 기술력을 가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집중되면서 전통적인 제조업과 신사업 분야를 망라했다면 카자흐스탄 투자펀드는 주로 안정적인 부침이 없는 전통적인 산업 부문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카자흐스탄 투자펀드는 2014년 11월에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수행해야 하는 전략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였다.¹⁵⁾ 첫 번째 추진 방향은 새로운 경제 분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다. 특히 이 펀드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카자흐스탄 중·단기 산업화정책인 <비즈니스 로드맵-2020> 전략의 실현에 있다. 이 전략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3가지 주요 실행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신비즈니스 이니셔티브의 지원의 실행과제는 카자흐스탄 투자펀드의 주요 추진방향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재정적 지원에는 <비즈니스 로드맵-2020> 실현을 위해 선별된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바이테렉에 포함된 기업과 또 다른 정부지주회사인 ‘삼룩-카지나(Самрук-Казина)’의 자회사로 편입되어 있는 기업 간의 효율적인 협업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이 포함된다. 두 번째 추진방향은 산업부문의 건전화이다. 이러한 방향은 <비즈니스 로드맵-2020>의 실행과제인 ‘기업부문 건전화’의 실현에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산업부문의 현대화와 국영기업의 많은 과제들 가운데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부실화된 부분을 효율화시키고 수익성을 개선시키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카자흐스탄 경제에서 부실화된 기업의 문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해 도산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나면서 확대되기 시작했다. 특히 정부가 부실화된 기업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업을 그대로 도산시키기 보다는 부실자산을 포함해 국영화시키는 사례들이 증가하면서 기업부문에서의 비효율성 문제가 확대되었다. 이처럼 구조조정을 요하는 기업부문에 대해 카자흐스탄 투자펀드가 부실자산을 정리하고 경영을 효율화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다. 정부가 신 산업육성과 다각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투자를 한 산업이라 하더라도 처음의 예상과 부합하지 않게 발전이 더디게 나타나 수익성이 악화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때 자산 구조조정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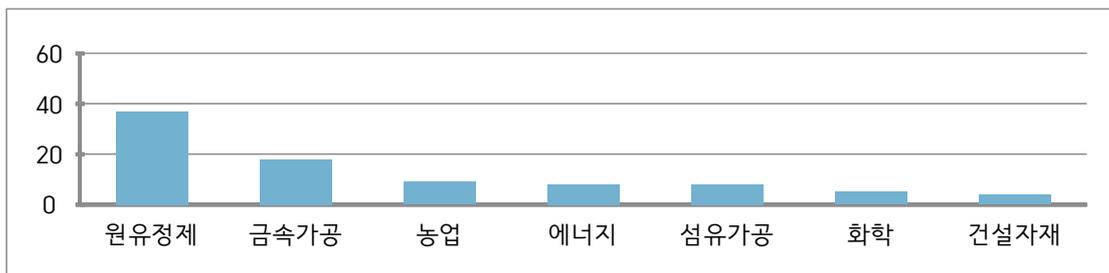
15)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фонд Казахстана> на 2014–2023 годы, с.7.

있어 카자흐스탄 투자펀드가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특화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 개발은행(Банк развития Казахстана)’은 2001년 대통령령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은행 역시 정부지주회사인 바이ટે렉 산하 기업으로 등록되었으며 설립목적은 카자흐스탄 경제의 자원의존도를 완화하여 비자원 부문을 활성화시키는데 있다. 이를 위한 주요 실행목표로는 공공투자부문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제조업과 산업 인프라를 발전시키며 국내외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다.¹⁶⁾ 또한 금융기관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분배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카자흐스탄 개발은행의 경우 여신을 제공하는 경우는 다음의 3가지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여신으로 최저 5년에서 10년까지 제공하며 최저금액은 3000만 달러이상 2) 기업에 대한 자금대여로 최저 3년에서 20년까지 최저금액은 100만 달러이상 3) 수출 금융 부문으로 최저 1년에서 3년까지 최저금액은 100만 달러이상 등이다. 앞선 기술 개발공사나 카자흐스탄 투자펀드의 자금 지원과는 달리 금융기관으로서의 고유목적에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개발은행의 설립이후 2014년까지 약 13년간 총 86억 달러의 자금을 기반으로 약 75개의 프로젝트에 대한 여신을 제공해 왔다.¹⁷⁾ 2013년을 기준으로 카자흐스탄 산업은행이 자금을 제공한 프로젝트의 산업별 비중은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카자흐스탄 개발은행의 산업별 투자 비중(프로젝트 수, 2013년)



* 자료: Годовые отчеты 2013, Банк развития Казахстана

은행의 산업별 투자 비중은 원유정제 부문이 37%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금속가공 18%, 농업 9%, 에너지 및 석유가공 부문이 각각 8%, 화학 5%, 건설자재가 4%를 차지하고 있다. 주로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여신제공이 주요 기능인 은행의 기능상 원유 등 자원관련 시설에 대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카자흐스탄 개발은행이 주로 투자한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아티라우 지역에 조성한 경제특구인 ‘국영산업-석유화학 테크노파크(National Industrial Petrochemical Technology Park)’ 내에 ‘카자흐스탄 석유화학 산업(Kazakhstan Petrochemical Industries Inc.)’이 건설 중인 석유화학공장이 있다. 이 공장은 총 사업비 약 20억 달러가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로 연간 약 50만 톤의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중국, 동유럽 및 CIS 국가로의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같은 경제특구 내에 ‘아티라우 정유(Atyrau Refinery)’가 총 사업비

16) 카자흐스탄 개발은행 홈페이지 (<http://www.kdb.kz/ru/about/about/>, 검색일: 2015년 8월 13일)

17) Development Bank of Kazakhstan, “Information on Implemented and commissioned projects of Development Bank of Kazakhstan and DBK Leasing JSC,” 2014. p. 2.

약 18억 달러를 들여 건설 중인 원유정제 시설에도 투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유 정제 및 석유화학 시설은 설비투자가 크게 필요한 산업으로 이 은행의 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금속 가공 부문에서는 철로와 철골 구조물 생산 가공 공장이 ‘악토베(Aktobe)’ 지역에 건설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총 사업비 약 3억 7000만 달러의 대형 사업으로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철로와 철골 구조물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추진하는 국내 철도 건설에 사용될 계획이다.

카자흐스탄 개발은행에서 지원하는 많은 산업 프로젝트들은 카자흐스탄의 중·단기 산업발전 프로그램인 <국가 산업·혁신발전 프로그램> 의 주요 과제로 포함되어 있는 프로젝트들이다. 즉, 카자흐스탄 개발은행은 정부추진 산업발전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앞의 3가지 산업정책 지원 기관의 주요 투자부문을 보면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개발은행의 경우 주로 원유정제와 금속가공과 같은 카자흐스탄이 전통적으로 강점을 가진 자원채굴 부문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부문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비교적 신규벤처 기업에 대한 지원이 주로 이루어지는 기술 개발공사의 경우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 공사의 경우도 자금 지원에 있어 석유화학 부문 기업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았다. 즉, 카자흐스탄 정부는 채굴산업의 수직계열화를 통한 안정적인 원료 확보와 이를 기반으로 한 산업발전 추진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해당 분야에서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에도 투자함으로써 선도적인 기술개발에도 힘쓰고 있다는 점이다. 채굴관련 분야 이외에 카자흐스탄 정부가 많은 투자를 보이고 있는 산업부문은 건설자재, 농업, 에너지 부문이다. 카자흐스탄은 아스타나 및 알마티를 중심으로 도시화가 지속되면서 건축자재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건축자재는 제한적인 관계로, 저가의 건축자재는 중국 및 터키에서, 고가의 건축자재는 주로 이탈리아 등지에서 수입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건축자재의 국내생산을 위해 힘써왔고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 및 자금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부문 또한 정부의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국토가 넓고 주요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편중된 구조를 갖고 있어 효율적인 에너지의 송·배전이 중요한 과제이며 지역에 따라 에너지 수급에 문제를 겪고 있으며 에너지 분야에도 많은 투자를 해왔다. 다음의 <표 9>는 카자흐스탄 개발은행이 자금을 지원한 주요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이다.

<표 9> 카자흐스탄 개발은행의 에너지관련 주요 프로젝트

수혜 기업	주요 내용
KEGOS JSC	- 카자흐스탄 남부지역의 에너지 수급개선 목적 - 송·배전망 추가 건설을 통한 배전용량 확대
Almaty Power Plants JSC	- 알마티 지역의 전력 공급 확대 목적 - 주요 시설 교체
Karaganda Energocenter LLP	- 카라간다 지역 전력인프라 개선 확대 - 전기생산 확대를 위한 주요 장비 및 시설 교체

*자료: Development Bank of Kazakhstan, “Information on Implemented and commissioned projects of Development Bank of Kazakhstan and DBK Leasing JSC,” 2014.

자금지원을 받는 주요 에너지 프로젝트는 전기 생산 및 공급과 관련한 프로젝트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신재생 에너지 등과 같은 분야의 투자는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즉, 현재까지는 전통적인 에너지의 생산과 공급분야의 기본적인 인프라개발과 개선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V. 한-카자흐 산업협력 방안

제조업 발전을 자국 경제성장에 있어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는 카자흐스탄의 정책은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성장의 한계, 중소기업의 도약과 국제화, 해외진출시장의 편중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에게 우호적인 환경과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기존 한국 정부와 기업의 카자흐스탄에 대한 접근 방식은 대개 자원개발 위주(resource-seeking)의 시각에 편향되어 왔다. 원유와 광물을 중심으로 한 자원개발과 이를 활용하는 방식의 투자가 대부분이었다. 물론 이러한 방식의 자원개발 투자는 현재까지도 유효하다.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개발기술 및 자본 투자를 통해 카자흐스탄의 다양한 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카자흐스탄 정부의 정책이 더 이상 자원개발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양한 제조업 발전을 기반으로 한 경제 성장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도 카자흐스탄 정부의 정책에 보조를 맞춘 산업협력에 초점을 맞춘다면 양국의 경제관계는 좀 더 지속가능한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카자흐스탄의 산업화 정책을 기반으로 한국은 어떤 협력 전략을 가져가야 할 것인가? 먼저 카자흐스탄의 산업화 정책의 우선순위와 실제로 재정이 투입된 부문을 구분하여 협력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다음의 <표 10>은 앞선 카자흐스탄 정부 산업화 정책을 기반으로 카자흐스탄 산업화의 중요도와 실제 자금투여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표 10> 카자흐스탄의 산업정책 우선순위

구 분		산업 중요도	
		小	大
정부 자금투여	大	- 건설 자재 - 농업	- 원유정제 - 석유화학 - 기계 - 에너지(발전, 송배전)
	小	- 섬유가공 - 수산업 - 항공	- 의약품 - 바이오 - 정보통신 - 대체에너지

카자흐스탄의 각 산업부문에 대한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는 먼저 시장 확보 또는 자국 시장의 수입대체화 관점에서 원유정제, 석유화학, 기계, 에너지, 건설자재 등의 산업이 포함된다. 이 부

문은 정부의 자금투여가 높고 산업의 중요성도 큰 산업(산업 중요도 大-정부 자금투여 大)이다. 카자흐스탄은 지역별로 원유정제 설비가 부족하여 정제된 원유를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원유정제 부문에 대한 투자는 국내 시장의 수입대체화를 통한 자국 시장 보호의 목적이 강하다. 또한 석유화학 분야 역시 해당 제품의 자국 내 생산이 미미하여 산업성장을 통한 자국시장 보호의 의도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기계, 에너지, 건설 자재 분야도 현재 자국 내에서 산업 성장이 더딘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을 통해 자국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이 산업분야의 특징은 카자흐스탄이 일정부문의 산업기초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원유정제와 석유화학 부문 발전을 위한 원유생산이 충분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기초 생산시설은 노후화되었으나 존재하고 있다. 에너지 부문의 전기 생산도 기반은 갖추고 있다. 다만 기존 시설의 확장 및 설비 고도화를 통해 먼저 자국 시장에서 산업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부가 판단하는 분야이다.

이와는 달리, 혁신 목적의 산업 육성은 대체로 기존의 산업기반이 매우 미미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산업으로는 의약품, 바이오, 정보통신, 대체에너지, 항공 산업 등이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러한 산업부문의 발전을 향후 카자흐스탄 경제성장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자국 내의 산업 기반이 매우 미미하다. 정부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 가운데 이들 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은 그 규모가 매우 작아 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소규모의 혁신적인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산업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는 외국기업들의 투자와 협력을 장려하고 경제특구를 통해 세금 등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확대 분야이다.

다음은 수출확대 목적의 부문으로 이러한 부문에는 앞의 석유화학, 기계, 의약품, 바이오 부문이 포함된다. 산업발전으로 제품의 국제적 경쟁력이 확보되면 제품의 해외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고용확대 부문에 해당되는 산업은 섬유가공 부문이다. 섬유가공 산업 자체가 카자흐스탄 경제 성장에 있어 중요한 산업으로 판단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카자흐스탄 남부 지방에는 면직물 생산의 기반이 있고, 섬유가공은 이 지역의 많은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적합한 산업이다. 따라서 정부는 10개 경제특구 가운데 1개를 이 지역의 섬유가공 산업발전을 위해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고용확대에 섬유가공 산업을 활용하고자 한다.

산업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이 크게 나타난 산업(산업 중요도 小-정부 자금투여 大)은 건설자재 및 농업이 해당될 것이다. 이 산업들은 앞의 원유정제, 석유화학, 기계 등의 산업에 비해 카자흐스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아 중요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라는 단점도 있다. 하지만 건설자재 부문의 경우 수입대체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고 농업은 식량자주화 등의 전략적인 이유로 인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중소기업의 경우 건설 자재 부문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자재 완제품의 경우 고가인 서구산 자재와 저가의 중국산 자재의 중간에 위치한 관계로 제품의 적절한 포지셔닝이 어려웠고,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이유로 부피가 큰 건설자재의 운송비가 올라가 사실상 수출이 어려웠다. 따라서 카자흐스탄 현지 시장을 목표로 한 시장추구형(market seeking)의 직접투자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경기에 따라 시장의 부침이 있으나 향후 성장이 가능한 분야이다. 다음의 <표 11>은 카자흐스탄 시장의 건설자재 수출입 현황을 보여준다.

〈표 11〉 카자흐스탄의 건축자재 수출입 현황(백만 달러)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10월)
수입	731.7	889.4	1139.3	1121.9	897.8	672
수출	31.3	45.3	82.1	68.7	59.2	67.1

* 자료: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строительных материалов, Ежемесячный Дайджест, Декабрь 2014.

카자흐스탄 건축자재 수입액은 2009년 7억 3170만 달러에서 2011년 11억 3930만 달러에 이를 정도로 확대되었으나 2013년부터 축소되었고 2014년 10월까지 약 6억 7200만 달러에 그치고 있다. 반면 수출은 2009년 3130만 달러에 그쳤으나 2011년 8210만 달러까지 확대되었고 2014년 10월까지 6710만 달러에 달하는 등 수출은 2009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카자흐스탄 정부의 건축자재 시장 육성정책에 힘입어 카자흐스탄産 건축자재 생산이 늘어나고 수출이 확대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시멘트 등의 일부 자재는 100%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어 직접투자를 통한 카자흐스탄 내수 수요 확보와 수출에 협력이 가능하다.

다음은 산업의 중요도가 낮고, 정부의 재정지원도 적은 산업(산업 중요도 小-정부 자금투여 小)이다. 해당 산업은 섬유가공, 수산업, 항공업 등이다. 섬유가공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노동력 투입이 커 유희노동력이 많은 지역에서 활용하기 쉬운 산업이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남 카자흐스탄 지역에 온투스크 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섬유산업을 발전시키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다른 산업에 비해 카자흐스탄 정부의 재정투입과 중요도는 현저히 낮은 편이다. 수산업 역시 내륙 국가인 카자흐스탄의 환경에 적합한 업종이라 볼 수 없으나 카스피해 인근의 수산자원을 활용한 수산업 가공 등이 가능한 정도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은 적지만 산업 중요도는 큰 산업(산업 중요도 大-정부 자금투여 小)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산업은 주로 의약품, 바이오, 정보통신, 대체에너지 등이 포함된다. 이 산업들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로 카자흐스탄 기술 개발공사의 자금지원을 받는 산업에 해당된다. 즉, 카자흐스탄 투자펀드 또는 카자흐스탄 개발은행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업 또는 프로젝트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와는 달리 기술 개발공사의 자금 지원은 주로 소규모 벤처 기업의 인큐베이팅에 활용되기 때문에 자금 지원규모는 작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이러한 산업들에 대해 대규모의 투자를 할 수 있는 의지는 갖고 있지만 사실상 큰 규모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나 기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술 개발공사를 통해 기술력을 갖고 있으며 성장 가능성이 있는 해당 분야의 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해주고 성장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카자흐스탄의 경우 상기의 산업 분야에서 기술기반이 매우 약하다는 것이다. 바이오나 정보통신, 대체에너지 등의 분야는 카자흐스탄과 같은 신흥국뿐만 아니라, 선진국 역시 산업발전에 있어 중요한 분야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기술기반이 부족한 카자흐스탄이 이들을 추격하는 것은 단기간 내에는 쉽지 않은 과제임은 틀림없다. 따라서 카자흐스탄으로서는 적극적인 해외투자 유치를 통해서만 해당 산업을 빠른 시일 내에 발전시킬 수 있다.

해당 산업 부문에서 한국과의 적극적인 경제협력이 가능한 우선 분야는 정보통신과 대체에너

지 분야이다. 정보통신 산업은 한국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이다. 카자흐스탄 정부 또한 경제특구 지정을 통해 정보통신 분야의 성장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대체에너지 분야 역시 한국의 기술력이 경제협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분야인 것으로 판단된다.

개방적 통상체제하 소규모 저개발국의 산업정책 : 키르기스 공화국의 경우와 한-키르기스 산업협력 방향

한홍열(한양대학교)

1. 소규모 개방국가, WTO 그리고 산업정책

개도국의 성장에 있어서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배경은 비교적 분명하다. 즉, 20세기 후반 급속히 진행된 경제의 세계화가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동일하게 경제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다.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활용한 중국, 브라질 등의 국가가 그 과실을 편중되게 향유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반복적인 국제금융위기와 함께 오늘날 신자유주의 정책이 경제성장에 대한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적극적인 산업정책은 필요충분 조건으로 보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산업정책의 실시현황과 경제성장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는 과거 시장개방과 경제성장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와 대칭성을 갖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경제성장을 가져오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으로서 거시경제적 안정성, 적절한 거버넌스, 세계경제로의 적극적 통합 등을 들고 있다.(Growth Commission 2009). 그러나 Rodrik(2009, 2011)이 비판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조건은 성장의 결과이며 개도국의 성장전략으로 보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동일한 논리에서 개도국이 산업정책과 보호주의를 선택하는 전략 그 자체도 성장을 보장할 수 없다. 양자는 그 극명한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선택에 중점을 주고 있을 뿐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정책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의 이행역량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와 동시에, 소규모 경제가 대외적으로 개방적인 정책을 취하는 논리는 비교적

간명하다. 시장의 개방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소비자의 후생증대를 통하여 경제전반적 효율성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교과서적 믿음이다. 이러한 일종의 ‘신념체계’는 국제경제질서 특히 다자간무역질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IMF에 의한 고정환율제도의 도입과 GATT 체제(이후 WTO)의 성립은 결국 시장경제메커니즘의 확고한 기반이 궁극적으로는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필수적 요소라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¹⁾ 자본주의적 경제질서하에서 안정적 시장메커니즘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는 점에 이론의 여지는 많지 않다. 문제는 자유무역의 확대에만 초점을 맞춘 다자간 통상질서는 시장메커니즘이 갖고 있는 교과서적 시장실패의 가능성에 대한 고려를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특히 소규모의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고전적인 산업발전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관찰은 키르키스 공화국과 같은 저개발국이 WTO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매우 극명하게 들어난다. WTO의 성격은 회원국 정부의 무역정책을 규율하는 일종의 ‘행동준칙(code of conduct)’인 동시에 협상을 통하여 상호 수출시장을 교환하는 ‘시장의 시장(market for markets)’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²⁾ WTO가 1990년대부터 세계무역을 강력히 규율하는 역할을 확보함으로써 신규회원국의 가입협상은 당연히 신청국의 시장을 가능한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려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WTO 출범 이후 수많은 저개발국들이 신규회원국이 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저개발국의 산업발전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키르키스 공화국이나 몽골 그리고 이후 캄보디아 등의 가입 시 특히 공산품 관세율이 5% 수준으로 설정되었다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한국의 양허관세율이 현재 10% 수준에 달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놀랍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³⁾ 이들 국가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는 WTO 협정에 도입되어 있는 개도국 우대조항을 일반적으로 적용받는데 그치고 있을 뿐이다.

물론 전세계 무역의 자유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WTO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접근이 결코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IMF, GATT와 함께 세계은행(IBRD)가 3대 축으로 설립된 것은 시장경제의 강화를 위한 역할분담을 위한 것이다. 즉, 시장의 강화와 함께 개도국의 개발을 지원하는 업무는 세계은행으로

1) 1947년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의 설립을 위한 Havana Charter가 성립하였으나 미국 의회의 반대로 그 설립이 무산되고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하여 WTO가 설립될 때까지 다자간의 협정체인 GATT 체제로 다자간 무역질서가 운영되어 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2) 예를 들어, 반덤핑협정과 같은 개별 통상규범은 행동준칙의 대표적 예이며, 관세인하, 서비스무역협정의 도입과 양허의 교환등은 회원국의 시장을 WTO에서 교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논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ockman(1996)을 참조하라.

3) 물론 한국의 양허관세율 수준에도 불구하고 상품별로 지속적인 인하를 통하여 실행관세율은 훨씬 낮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분장되었으므로 WTO는 자유무역을 강화하는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어쩌면 10년 이상 DDA 협상이 부진한 것도 WTO의 기능에서 벗어나 개발의 요소를 강화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상호모순적 목표를 동시에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문제는 이러한 가입협상의 결과는 적어도 저개발국 회원국이 정상적인 산업정책을 통하여 다른 국가들을 효과적으로 '추격(catch up)'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부정적 효과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산업정책을 위한 정책수단 및 활용에 있어서의 제한효과이며 이것이 가장 직접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책당국자에 대한 교육효과로서 일종의 '자기검열적' 효과가 존재하며 정책의 선택에 있어서 WTO 규범은 정책선택의 폭을 자동적으로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셋째, 국가별 자원보유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개방적 경제정책이 대체로 자본의 축적을 저해함으로써 개발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

개방적 소규모국가가 시장체제를 급속히 전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많은 경우, 국내의 경제적 정책적 자원만으로 개발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어려운 국제환경에 처해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키르기스 공화국의 산업정책을 주변의 유라시아 국가와 비교하여 살펴보고 한-키르기스 산업협력의 방향을 진단하고자 한다.

2. 두 개의 길: 유라시아 중견국의 사례⁴⁾

정부 주도의 산업 및 무역정책은 어디까지 유용한가? 20세기 후반 급격히 진행된 세계화와 두 차례의 금융위기는 개발도상국의 정부가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는데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개도국 내에서도 BRIC로 대표되는 신흥국가에 비하여 아프리카와 중남미 상당수 국가들은 여전히 경제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남-북간 경제력 격차 뿐만 아니라 남-남간 격차라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경제적 여건과 제도 그리고 정책에 대한 차이점의 이해만으로는 부족하다. 보다 중요한 것은 각국의 성장에 대한 제약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의 질과 정책의 이행역량에 대한 미시적 고찰이 필요하다.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필요한 정책적 조건으로는 일반적으로 건전한 거시

4) 본 절의 내용은 2015년 KIEP 전략지역심층연구 '한-유라시아 전략적 산업협력 방안 연구(한홍열 외)'를 정리한 것이다.

경제의 운용, 무역 및 자본시장의 개방, 통치제도의 건전성 등을 꼽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개도국들이 이러한 정책적 환경을 확보한다 할지라도 경제성장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성공적이지 못한 증거로서 중남미의 국가들이 시장의 개혁과 자유주의적 정책을 취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주도하의 성장에 못미치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Rodrik 2011). 반대로 중남미 국가들이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실시하였던 80년대의 성과가 국가가 적극적으로 산업정책을 실시하였던 시절보다 부진하였던 원인을 과거 비효율적 국가개입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즉, 개도국의 성공적 경제성장을 특정한 정책수단의 선택에 의해서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것이다.

중양아시아에서 상대적으로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된 국가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들 수 있다. 이 두 국가는 대체로 자원의존적 경제구조를 탈피하고 산업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그 경로는 매우 상이하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관찰의 대상이다. 즉, 카자흐스탄은 WTO 및 EAEU 가입 등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개방적 태도를 취하면서 정부주도의 산업화를 추구한다. 반면에 우즈베키스탄은 전형적인 수입대체에 의한 국내산업의 보호를 통하여 산업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두 국가의 경제정책적 성격과 성과를 비교하는 것은 역내 후발개도국에 대한 높은 정책적 시사점을 갖는다.

(1) 개방형 국가주도 산업정책: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의 산업정책은 개방과 국가주도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정책은 과거부터 정책의 큰 틀을 구성하는 <카자흐스탄 2050> 정책과 <국가 산업·혁신발전 프로그램>의 2 단계 산업화 과정에 준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2 단계인 <국가 산업·혁신발전 프로그램 2015-2019> 는 1단계의 산업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산업다변화를 촉진하는 데 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으로는 1) 제조업 발전 촉진 2) 주요 산업분야에서 부가가치와 효율성 향상 3) 비석유 부문의 비중증가를 위한 시장 확대 4)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 5) 제조업 우선 분야의 기술 효율성 증대와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미래 산업 기반 마련 6) 제조업 분야에서 비즈니스 활동 촉진과 중소기업 발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과제 실현을 위해 연간 구체적인 투입 재정을 확정하였다.

<표 1> 2단계 산업화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예산

(단위: 백만 텡게)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327,506.3	111,324.6	74,464.6	64,785.3	65,828.8

자료: Baiterek 홈페이지

이러한 카자흐스탄의 정책방향은 대외지향적 정책과 일정한 충돌을 일으키는 경향을 갖는다. 즉, 카자흐스탄은 적극적으로 WTO 가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정부 주도의 산업화를 실시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상호모순의 성격을 가질 수 밖에 없으며, 효과적인 산업화를 위한 초기의 정책적 환경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한다. 예를 들어, 섬유관련 산업과 식음료 제조업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2000년대 초반 가장 먼저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선정했던 업종이다. 정부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두 산업을 수입대체산업화(ISI; Import Substituting Industrialization)의 주력 업종으로 선정하고 육성에 노력을 기울였다.⁵⁾ 일반적으로 음식료·섬유 산업의 경우 중화학공업과는 달리 대체로 고도화된 기술과 설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다가 고용효과가 크기 때문에 산업화를 추진하는 국가들이 가장 우선적인 발전분야로 삼는 분야이다. 그러나 카자흐스탄 정부의 수입대체정책이 여전히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수입대체정책이 약 2년에 그쳐 국내 산업이 충분한 생산역량을 확보하는 충분하지 못했던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카자흐스탄 정부로서는 국제무역기구(WTO)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수입대체산업화를 추진하기에는 큰 부담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⁶⁾ 이러한 현상은 산업화를 추진하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발생하는 현상인데 그것은 대부분 다자간·복수간 무역협정과 관련한 통상정책과 그것이 갖는 국내 산업정책에 대한 제약효과에 대한 정책적 이해가 부족한데서 기인한다. 개발도상국의 지나친 사전적 대응이 오히려 WTO와의 가입과정에서 협상의 폭을 스스로 축소시키는 현상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향후 카자흐스탄의 국제화 또는 대외경제정책에 있어서 정책적 역량의 강화가 매우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5) Sabit Khakimzhanov and Ai-Gul S. Seitenova, *op. cit.*, pp. 15-16.

6)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에서 정부가 주로 사용하는 정책은 해당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관세율을 높임으로 수입품의 가격을 높이고 자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향상되게 된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대외경제기조가 대체로 개방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WTO 등의 국제기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관세상의 차별적인 요인들을 제거해야 했기 때문에 주변국인 우즈베키스탄이 하고 있는 것과 같이 표면적으로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을 추진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2001년 최혜국(MFN)에 대한 관세율은 9.87%에서 국제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까지 2.05%까지 하락하면서 개방적인 기조를 유지하게 된다.

다.

또한 카자흐스탄 정부는 산업발전 계획에서 국가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부문을 강화할 것이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으나 산업화와 주요 전략 산업에 있어서는 정부의 주도권을 놓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는 혁신적인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 단순히 세금을 감면하는 등의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⁷⁾ 세금면제 방식의 산업육성책은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으나 그다지 큰 성과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자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자금을 각각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업에 배분하거나 운영하는 방식의 정책실현을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정부재원의 분배를 통해 산업간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책 현실화의 결과물을 염두에 둔 다양한 방식의 정부운영 펀드 및 기구를 산업육성의 도구로 삼고 있다.

이러한 산업정책의 수행을 목적으로 카자흐스탄 정부는 2000년대 초반 산업부문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지원 목적의 다양한 국가 기구를 창설하였다. 2000년대 초부터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이 시작되었고 원유와 천연가스, 광물 등의 원자재 수출로 막대한 금액의 외화가 유입되자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러한 자금을 원자재 이외의 산업분야 발전을 위한 각종 마중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이러한 정책적 의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동원한 정책 메커니즘은 매우 특기할 만한 것인데 그 요체는 2013년 국영 지주회사인 '바이테렉(Байтерек)'을 설립한 것이다. 이 기구는 효율적인 산업정책 집행과 자금 제공, 운영과 관리의 편의를 목적으로 한다. 즉, 산업정책의 구성요소에 있어서 자원의 배분(Channelling)과 관리(Management)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2014년 말 기준으로 바이테렉은 산하에 11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카자흐스탄-2050>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카자흐스탄 경제에서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부문에 대해 정부차원의 재정적인 자금 제공과 행정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바이테렉의 자회사 중에서 '기술 개발공사', '카자흐스탄 투자펀드', '카자흐스탄 개발은행' 등의 3개 기업은 카자흐스탄 산업화와 산업다각화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도록 정부의 자금을 기업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정부가 설립한 국영기업으로 바이테렉 산하에서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산업화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다.

(2) 대내지향적 수입대체형 산업정책: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을 추진

7) КИСИ, *Казахстанский путь - 2050. Книга 1. Экономика Казахстана в XXI веке*, (Алматы: Волкова Е.В, 2014), с. 48.

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 전략의 핵심은 정부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주요 대기업들을 통해 천연자원개발이 아닌 산업을 발전시켜 산업 다각화를 이루고자 하는데 있었다.⁸⁾ 우즈베키스탄의 폐쇄적 정책은 국내 산업의 발전 여부와 무관하게 지속되고 있는데 그 경향은 최근에 더욱 강화되고 있다. 당초 우즈베키스탄은 개혁이후 자국시장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면서 정부가 지분을 가진 대기업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1990년대 정부의 정책은 수출촉진보다는 다분히 자국의 내수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에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경향은 한편으로는 금융위기 등 외부적 환경변화로부터 우즈베키스탄 경제를 보호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였지만 폐쇄성에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장기적 발전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다.

2015년 1월 19일 우즈베키스탄 카리모프 대통령은 2014년 사회-경제발전 상황을 결산하고 2015년 경제정책을 논의하는 각료 회의를 주재하였다. 이 자리에서 6가지 경제정책의 우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세계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생산 및 산업을 지원하고 발전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통해 향후 경제성장의 동력, 지속적인 경제 현대화 및 다각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과제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장애 및 제한 요인을 제거하고 사적 소유 및 민간 기업의 발전을 위한 모든 자유를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국가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 수준이 매우 과도하며 전략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근거있는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 넷째, 기업 운영 시스템에서 원칙 및 접근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며, 생산, 대외무역 및 투자 과정 등 기업 경영에 국제적인 표준을 도입하여야 한다. 다섯째, 경제성장 및 경제 구조조정 of 가장 중요한 요인은 생산의 국산화 강화, 복합산업 기업의 확대이다. 여섯째, 경제의 구조조정은 인프라의 발전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보통신 시스템, 도로-교통 및 공공인프라 건설이 필수적이다⁹⁾.

이러한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해당 부처에서 경제의 구조개혁, 주요 산업의 현대화 및 적극적인 다각화를 위해 산업경쟁력 제고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중기 산업발전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발표하였다.

8) Max Spoor, David Kotz, Zavikhulla Nasritdinkhodjaev, Aktam Khaitov, Yulduz Abduganieva, and Artur Tukhtarov, "Linking Macroeconomic Policy to Poverty Reduction in Uzbekistan," *UNDP and The Center for Economic Research report*, 2005, p. 53.

9) <http://www.norma.uz/raznoe/doklad> (검색일: 2015.6.13.)

http://www.norma.uz/parlament/programma_deystviy_kabineta_ministrov_na_blijajshuyu_i_dolgosrochnuyu_perspektivu (검색일: 2015.6.13.)

2015-2019년 생산 구조개혁·현대화·다각화 보장 방안 프로그램

2015년 3월 4일 우즈베키스탄 카리모프 대통령은 선진 기술 도입과 생산 현대화의 연속적인 과정의 일환으로, 「2015-2019년 생산 구조개혁·현대화·다각화 보장 방안 프로그램」을 대통령령(UP-4707)으로 공포하였다.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 프로그램은 생산 구조개혁·현대화·다각화의 지속적인 보장,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의 견인차가 될 수 있는 첨단기술의 지속적 발전, 제조부문 에너지, 물질 및 노동비용 감축을 위한 기존 자원의 최대한 이용, 세계 시장의 견고한 수요가 있는 경쟁력 있는 완제품·반제품의 생산 확대, 외국 기업과 동일한 지분의 합작 기업 설립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의 적극적인 유치 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총 864개의 생산기술 현대화 및 개발 프로젝트로 408억 9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투자자 및 투자자금이 정해진 신규 투자 프로젝트가 711개로 196.4억 달러이며, 외국인 투자 및 차관 유치가 필요한 유망 프로젝트가 135개로 211억 69백만 달러의 투자가 예상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이행되면 2015-2019년간 연평균 8% 이상의 GDP 성장이 전망되며, 동기간 산업생산은 연평균 9% 성장하여 2020년까지 2014년 대비 1.5배 확대되고 GDP에서 제조업 비중은 현재 24%에서 2020년까지 27%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기계·석유가스·석유화학·화학·섬유·식품 분야의 발전 및 동 분야에서의 고부가가치 부문이 급속히 발전하여 산업부문에서 동 산업 비율이 2014년 62%에서 2020년에 67%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 결과 약 100개의 신규 상품군(약 1000개 품목)이 생산되고 2020년까지 연간 생산 잠재력은 18조숨(약 75억 달러), 수출 잠재력은 20억 달러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표 2> 주요 산업의 발전 목표 및 실행 프로젝트

주요 산업	목표
전력산업	자원절약형 복합가스터빈 설치 및 태양에너지 기술 이용 도입을 통한 기존 전력시설의 현대화 및 신규 발전소 건설로 전력 생산 1.2배 확대
석유가스/석유화학 산업	천연가스·콘덴세이트 완제품 생산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량 확대 및 품목 다양화
화학산업	복합비료·폴리머·합성고무·메탄올·생활 화학제품 생산을 위한 현대 기술 도입 및 수출 다변화
기계산업	선진 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농기계·트럭·부품 부문 국산화 및 수입 대체 농업 기계, 트럭, 부품 생산 관련 신규

	시설 건설, 기존 시설 현대화
섬유·가죽·제화 산업	국내 원료의 심화 가공을 기반으로 한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 높은 완제품 및 반제품 생산(염색 원사, 원단, 무두질 가죽, 니트, 의류, 신발 및 가죽제품)을 통한 상품 품목의 구조 개선
전자산업	전기기기 생산 가속화 및 첨단 기술 습득, 정보통신 기술 장비 및 부품 생산 시설 구축
건자재 산업	친환경 건설 자재 품목의 다양화
제약산업	유명 외국 제약업체의 라이선스 및 특허를 이용한 약품 생산 확대와 품목 다양화, 국내원료 및 기술을 이용한 자국산 약품 생산 추진
식품산업	국제 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반가공품 및 과일·채소의 훈증 기술 도입, 진공 포장, 급속 냉동 및 기타 현대적인 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 역량 강화
광물산업	알말릭광업공사(AGMK) 및 나보이광업공사(NGMK) 현대화/장비재건 관련 41개의 프로젝트 시행

자료: 우즈베키스탄 경제부. <http://www.mineconomy.uz/ru/node/847>

2015-2019년 국산화 프로그램

제조업 발전의 중요한 우선순위 중의 하나가 생산의 국산화이다. 2015년 2월말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제조업의 국산화 확대를 통한 수입의 최적화를 위하여 2015-2019년 완제품 생산 국산화 프로그램(PP-2298, 2015.02.11)을 승인하였다. 동 프로그램에는 600개의 광물 자원 가공 프로젝트와 1,225개의 가장 수요가 많은 제품 생산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 동 프로그램의 실시로 매년 35억 달러, 5년간 총 175억 달러 규모의 수입대체 효과가 예상되며 13,3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국산화 프로그램에 포함된 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세제 및 관세 혜택(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되지 않은 장비·부품 등의 관세 면제, 생산제품 기업의 법인세 및 재산세 면제 등)을 부여한다.

우즈베키스탄은 2000년 중반부터 수입대체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중단기(1년/3년) 국산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왔으며 자국 업체의 기술발전, 자국산 원자재를 사용한 고부가가치 제품생산, 자국산 생산제품 다양화, 수입대체 및 수출증진, 고용 창출 등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 제조업 부문에서 수입대체품 생산이 2005년 9.2%에서 2014년 말 약 20%까지 성장하였다. 향후 5개년 국산화 프로그램이 완료되는 2019년 말에는 국산화 수준이 36%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 프로젝트 실행에 5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¹⁰⁾.

이상에서 살펴본 우즈베키스탄의 정책은 전형적인 수입대체형 공업정책임을 알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비교적 순탄하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관건은 수입대체정책의 규모의 경제를 통하여 일정한 수준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이다. 국산화 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 수출산업화를 통하여 이러한 도전을 극복해야 할 것이나 대내지향적 산업정책이 현재와 같이 지속될 경우 수출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정책이 산업생산력 강화에 치중되어 있고 대외진출을 위한 정책역량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즈베키스탄은 수입대체 이후 개방이라는 단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매우 전형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키르기스 산업정책 및 한-키르기스 협력 방향

(1) 키르기스 경제의 동향

1992년에 독립한 이후 키르기스 공화국은 지난 24 년간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였다. 소련 붕괴 이후 키르기스 공화국은 가장 개방적인 경제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WTO도 가장 먼저 가입하였다. 이는 키르기스 공화국이 대외 지향의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키르기스 공화국은 구소련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양자 및 지역 자유무역협정 (FTA)을 맺었으며 관세 동맹에 참여한다. 키르기스 공화국은 독립국가연합(CIS),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EC), 상하이 협력기구(SCO), 중앙아시아 경제협력 공동체(CAREC) 등 경제 협력기구에 참여하고 있다. 키르기스 공화국은 1994 년부터 CIS국가들과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하였다. CIS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일부 특정 제품 제외)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키르기스 공화국의 EEU 참여는 이러한 정책적 기초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¹¹⁾

그러나 키르기스 경제가 이러한 정책을 통하여 성과를 거두기에는 산업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키르기스 공화국의 경제는 주로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제조업 비중이 낮다. 농업은 노동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

10) Утверждена Программа локализации на 2015–2019 годы
http://www.norma.uz/novoe_v_zakonodatelstve/novaya_programma_lokalizacii(검색일: 2015.5.27.)
http://news.uzreport.uz/news_4_r_128680.html (검색일: 2015.5.27)

11) BTI 2014 | Kyrgyzstan Country Report, <http://www.bti-project.org/reports/country-reports/pse/kgz/index.nc>

고 있다. 러시아에서 일하는 키르기스 이주 노동자는 오십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주 노동자들의 송금 금액은 GDP의 약 30%에 이르고 있다. 주된 산업은 에너지 및 광업이며 경공업과 식품 산업에 종사하는 다수의 기업들이 존재한다. 천연가스 및 석유 시장은 북부지역의 주유소 6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러시아 기업 가스프롬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다. 농산물 대부분은 수출되고 있다. 외환수입의 다른 중요한 공급원은 관광분야다. 매년 200만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고 최근의 관광수입은 약 5억 달러이다. 이러한 경제적 구조를 감안할 때, 개방적 경제체제와 EEU 가입으로 일정한 성과를 거두는 것은 쉽지 않은 정책적 과제로 보인다.

1998년 키르기스 공화국은 WTO의 멤버가 되었고, 그 이후 자유 무역 정책을 유지하였다. 키르기스 공화국은 WTO에 일찍 가입한 덕분에 중국에서 상품을 수입하여 러시아로 중계무역 기지로 발전할 수 있었다. 1998년 이후, 키르기스 공화국의 대외 교역량은 4.2배 증가하였다. 키르기스 공화국의 평균 양허관세율은 4.9% 수준으로 개도국으로서 매우 낮은 수준이 아닐 수 없다. 물론 1993년부터 유럽 연합(EU)의 일반관세혜택(GSP) 수혜자이지만 산업생산력이 미약한 상황에서 GSP 제도는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¹²⁾

<표 3> 키르기스 경제 동향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인구증가율(%)	1.1	0.8	1.1	1.3	1.1	1.4	2.0
GDP (US\$ million)	2,883.3	3,803.4	5,140.7	4,691.5	4,794.8	6,197.8	6,474.9
1인당 GDP (경상가격,US\$)	557.3	740.1	969.2	865.9	875.3	1,116.3	1,143.4
실질성장율(%)	3.1	8.5	8.4	2.9	-0.5	6.0	-0.9
취업률(%, 증가율)	0.9	2.7	1.5	1.5	1.2	1.5	..
고정자본형성	49.4	10.8	13.2	8.5	-7.1	-4.4	..
실업율(%)	8.3	8.2	8.2	8.4	8.4	8.5	..
GDP 대비 산업비중(%)							
농림수산업	28.7	26.9	23.5	18.8	17.4	16.6	17.5
광업	0.4	0.5	0.5	0.5	0.6	0.8	1.3
제조업	11.0	9.9	13.2	14.2	17.0	18.3	12.5

12) EU의 GSP + 방식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좋은 지배 구조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약속한 국가에게 유리한 관세 정책수단을 제공한다. GSP+ 제도에 참여하면 섬유, 농산물을 포함한 7,000여 종류의 제품에 대해 면세초치를 받을 수 있다.

Kumto 광산의 금 가공	3.1	2.7	5.9	7.3	11.3	12.2	6.6
전기, 가스, 수도	3.5	2.7	1.4	2.2	3.1	3.4	3.0
건설	2.7	3.6	5.3	6.7	5.5	4.9	5.7
Services	41.3	42.9	43.0	46.6	46.1	45.0	46.6

자료) WTO TPR 보고서(2014)

실제로 키르기스 공화국의 성과는 한마디로 불안정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독립 이후 GDP 성장률은 불규칙하였다. 2014년, GDP 성장률은 국내 통화를 기준으로 계상하면 3.6% 성장하였지만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경제는 67억 달러로 축소되었다. 키르기스 공화국은 WTO에 가입하면 무엇보다도 대외 무역이 크게 증가하고 세계무역체제로의 통합이 촉진될 것을 기대하였다. 이는 상품과 서비스 무역 장벽의 철폐로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고 무역은 증대될 것이며 경제체제의 전반적인 개혁과 자유화는 시스템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 더 빠른 경제성장이 이룩할 것이라고 기대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현재까지 실현되지 못하였다. 무역은 정체되었다. 1997년 키르기스 공화국의 수출은 670 만 달러였으나 2004년 740 억 달러 수출을 기록하기 전까지 하락세를 보였다. 제조업의 수출 비중은 44%를 기록한 1998년 이후 계속 감소했다. 현재도 제조업 수출은 40%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까지 키르기스 공화국의 무역은 중국 제품을 수입하여 임가공하여 CIS 국가의 재수출하는 중계무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카민스키 외(2009)는 역내에서 가장 큰 바자르 시장 도르도이와 카라슈는 재수출의 기지이며 재수출 시장의 규모가 28억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하였다.

키르기스 공화국 산업은 제조업, 비철 야금·광물 자원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생산은 2000년의 414억 SOM에서 2014년 1,675억 SOM으로 성장하였다. 지난 15년간 산업생산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원료생산은 늘었고 완제품 생산은 줄었다. 경공업의 점유율은 29.0%에서 4.0%로, 기계산업은 26.0%에서 0.2%로 축소되었다. 제조업은 국가 예산 세수의 약 40.0%를 차지한다.

수출상품의 다각화를 살펴보면 키르기스 공화국의 상위 10대 수출 품목의 점유율은 자원부국 러시아, 카자흐스탄과 매우 비슷하다. 키르기스 공화국의 주요 수출품은 금(수출의 40-45% 차지)으로서 스위스, 독일, 아랍 에미리트, 중국 등 다양한 국가로 수출되고 있다. 다른 주요 수출품은 방사성 원소, 전기, 농산물과 식품이 포함된다.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제조업 생산 제품 (기계·설비, 의류) 수출 비중은 크게 증가하였다(2014년 14%). 키르기스 공화국의 전력수출은 변동성이 높다. 전력수출은 1990년대 말 두 번째로 큰 수출산품이었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전

력수출은 줄어들었으나 2009년에서 2011년까지는 증가하였다. 이렇게 전력수출의 변동성이 큰 것은 우즈베키스탄의 수요와 관련이 있다. 금을 제외한 키르기스 공화국의 수출상품의 주요 시장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으로서 주된 상품은 의류, 전기장비 및 각종 기계를 포함하고 있다.

독립 첫 9년 동안 키르기스 공화국의 수입과 수출량은 거의 같았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수입량은 지금까지 크게 증가하여 15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자동차, 휴대폰 및 신발 수입의 증가, 천연가스와 석유의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2000-2010 기간 동안, 키르기스 공화국에서의 수출은 단지 29% 증가하였다. 동기간 수입은 2.5 배 증가했다. 키르기스 공화국은 거의 매년 GDP의 10%를 넘는 무역적자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무역수지 적자는 이주노동자의 송금과 비공식적 재수출에 의하여 보전되고 있다. 대외 무역의 자유화는 수입증가의 주된 이유였으며 수입규모는 GDP의 40-50%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키르기스 공화국의 수입은 기계 및 장비 및 에너지 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비재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소비재 수입의 일부만 키르기스 공화국의 공식 통계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자 한다.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제품은 키르기스 공화국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방향성은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에너지 수입이 감소한 것과도 관련된다.

소련 붕괴 이후 대외무역 자유화는 키르기스스탄의 무역구조가 악화된 것의 원인이 되고 있다. 독립은 했지만 새로운 투자가 없는 상태에서 키르기스스탄 산업기반은 무너졌으며 변화를 받아들여야 했다. WTO 가입 이후에도 산업 생산은 회복하지 못하였다. 키르기스스탄은 제품 포장기, 산업용 모터, 수중 펌프, 케이블 및 전선, 배터리, 세탁기, 농업 기계용 부속품, 반결정 및 단결정 실리콘 및 광범위한 영역의 제품생산 능력이 부족하게 되었다. 언급한 제품들은 가운데 일부는 20~25년 전 키르기스스탄에서 생산된 제품들이다. 키르기스스탄은 농업기반의 약한 산업 기반을 갖춘 국가가 되었다.

현재 키르기스 공화국의 산업 경쟁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유일한 예외는 의류, 유제품, 농업 등 일부 산업이다. 관세 동맹 가입은 키르기스 공화국의 산업 경쟁력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공부정의 효과가 모두 있을 수 있다. 부정적인 것은 키르기스 공화국의 봉제 산업이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키르기스 공화국은 관세 동맹 가입 이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되는 제품의 관세를 인상해야 한다. 이는 키르기스 공화국 제품이 관세동맹 시장에서 경쟁할 의류제품의 원가 상승을 의미한다. 의류 제품은 «메이드 인 키르기스 공화국»의 대표적인 상품으로서 관세동맹 국가에서 인기가 있어 관세동맹 지역으로 수출되는 중요한 상품이다. 이는 관세동맹 가입의 긍정적인 요소이다. 이미 러시아는

WTO에 가입했으며 카자흐스탄도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이는 향후 관세동맹의 관세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키르기스 공화국의 관세는 5%이다. 관세동맹의 수입 관세는 이보다 높다. WTO 체제에서 관세동맹의 관세수준은 5~7%까지 낮추어야 할 것이다. 관세동맹이 이 수준까지 관세를 낮추면 키르기스 공화국이 수입하는 제품의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다. 관세동맹은 관세를 줄이는 계획을 규정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노력이 있을 경우 부정적인 효과는 줄어들 것이다.

(2) 키르기스 공화국 산업정책의 평가

키르기스 공화국이 EEU에 가입할 경우 1억7천만명의 거대한 시장의 한 부분으로 통합되고 회원국간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 짐으로써 규모의 경제에 의한 효율성 제고를 기대하는 것이다. 특히, 키르기스 공화국 재산업화와 수출을 통한 성장을 이룩함으로써 국가 경제와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현실화하기 위한 가장 첫 걸음은 키르기스 공화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관점의 재수립이 가장 급선무인 것으로 보인다. WTO가입과 EEU 멤버십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경제정책의 한 축인 대외경제정책에 속하는 것이며, 이에 상응하는 대내 경제정책에 대한 방향의 수립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대외정책이 자동적으로 공동체의 경제적 목표를 자동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이유이다.

키르기스 공화국이 향후 일정한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산업화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적 과제가 매우 어려운 일임은 세계경제의 많은 개발도상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산업정책과 산업화가 한 경제의 순조로운 성장을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 성과를 거둔 국가들은 예외 없이 산업화의 성공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산업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최소한 필요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EEU의 효과를 논의하기 이전에 현재의 키르기스 경제에 대한 평가는 산업화의 관점에서 분명한 시장의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키르기스 공화국이 추진한 거의 ‘급진적으로’ 자유주의적인 정책이 산업화에 기여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¹³⁾ 궁극적으로, 산업 기반과 공급 능력의 구축없이 지속적인 수출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개발도상국의 자유주의 개혁은 국내 시장과 수출을 위한 생산능력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산업 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물론 CIS국가들이 체제전환 과정에서 어려운 거시경제적 상황에 처하였고 그래서 키

13) 섬유 분야의 중계무역 활성화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경제활동이 산업자본화로 이어져 제조업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르키스 공화국의 경제적 어려움 일부를 이로서 설명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자유주의 경제 정책에 신념만으로 키르기스 공화국이 기대하는 경제적 성과를 실현할 수는 없다. 키르기스 공화국이 부존자원이 없다는 점에서 적절한 산업 정책을 수반되어야 한다. 외국인 직접 투자 (FDI)를 유치하는 것은 산업정책에서 중요한 과제이지만, 제도적 개혁이 자동적으로 부족한 국내투자를 보충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수동적인 정책적 태도가 아닐 수 없다.

① 산업정책을 위한 개발계획의 수립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경제 또는 산업개발계획의 필요성은 현재 ‘시장의 실패’가 존재하고 있는 경제상태를 어떻게 ‘교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에 따라 정해진다. 극단적으로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기본으로 하지 않는 한 경제개발계획의 수립과 집행은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다. 오히려 키르기스 공화국과 같이 체제전환과 거의 동시에 매우 대외개방적 경제체제를 채택하는 것은 이례적인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다.¹⁴⁾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최근 키르기스 정부가 경제개발계획의 수립과정에 돌입한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사료된다.

‘키르기스 공화국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 위원회’는 <키르기스 공화국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2013-2017)>을 발표하였다. 발전전략은 키르기스스탄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한 중기 계획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분야별 발전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분야는 농업, 제조업, 관광, 에너지, 교통, 통신 등이다. 이에 따르면 농업·제조업 부문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은 실시 가능하지만 효과적인 목표를 규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필수 요소 들이 많이 부족하다. 목표도 구체적이지 않고 개선의 방향을 나타내는 설명들도 더 필요하다. 둘째, 목표와 관련된 시간설정이 없다. 다시 말해, 목적을 달성하는 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셋째, 목표와 정책수단 사이에 논리적인 일관성이 없다. 제안된 정책수단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지라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다.

EEU 가입을 계기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개발계획의 상세한 내용은 아직 구할 수 가 없다.¹⁵⁾ 그러나 한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본 계획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든지 간에 다음과 같은 요소가 반드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의 산업 육성 경험을 고려하면 발전 전략의 대부분은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며 목표달성의 시기도 명확하게 정해져야 한다.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 역시 구체적이어야 한다. 한국의 경제개발 초기 5개년 계획은 규칙적으로 검토되었고, 국내외 경제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수정되었다. 또한 경제기획원에 의하여 매년 구체적인 목표치로 제시되었

14) 유사한 정책적 경험을 보이는 국가는 몽골이라고 할 수 있다.

15) 적어도 2015년 6월 현재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은 확인한 바 있다.

다. 이러한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공부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의 항목들을 제시하였다. 다시 말하면, 대외경제정책에 의하여 규정된 정책적 환경하에서, 국내 경제적 세부 목표의 분명한 설정과 목표 그 자체에 대한 '이행목표 및 수단'에 대한 이해와 현실적 설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경제개발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즉, 산업 정책의 주요 골격, 산업 정책의 수립에 보다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정부부처간 협업체의 구성, 필요한 조직을 창설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는 법적 조치의 도입 등을 포함한다.

② 산업정책을 위한 정책적 자원의 확보 및 전략산업으로의 전달

모든 공공정책과 마찬가지로 산업정책은 이의 수행에 있어서 정책적 자원을 필요로 한다. 산업정책은 전략 산업분야에 대한 고정자산의 형성(즉, 자본축적), 인력양성 그리고 정책의 운영을 위한 정책적 자원 등 다양한 물적 인적 자원을 소요한다. 개발도상국은 그 정의상 소득의 낮은 국가이므로 이러한 재원에 투입될 수 있는 저축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경제개발을 위한 각종 정책의 시행 그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다. 또한 산업과 시장의 미비에 따라 FDI의 유인이 부족하며 이는 제도적 개선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자본시장의 비효율성은 개도국의 보편적인 문제이며 개도국이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 생산으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자본시장의 실패는 개도국의 대부분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경제활동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금융기관들의 소극적인 활동 때문에 산업 부문은 생산적인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경제발전을 저해한다. 따라서 산업정책의 이행을 위해서는 이러한 자원의 확보와 전략산업 부문으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다시 말하면, 산업정책의 이행과정에서 정부는 일종의 준자본시장(pseud-capital market)의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현재, 키르기스 공화국은 EEU 가입과 함께 이에 필요한 국가 역량 강화의 목적으로 10억 달러의 자본을 키르기스 공화국-러시아 개발기금으로 확보하였다. 개발 기금의 자본이 수출 지향적 산업화를 위한 투자 프로젝트에 지출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¹⁶⁾ 키르기스 공화국의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이러한 규모의 자금은 산업정책의 이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금규모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자본 시장을 구축하려는 개도국 정부들은 시장의 변동성이 야기하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지도 모른다. 초기에는 정부 주도하에 인적, 제도적, 물적 자원을 조직하여 비효율적 자본시장을 보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은행 및 자본시장의 개선을 추구해

16) 이는 키르기스 공화국 경제부 공무원간의 면담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개발계획과 자금집행 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미지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야 한다.

③ 구체적 이행방안

키르기스 정부가 이행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제안될 수 있다.

첫째, 전략 부문에 있어서의 공공기업 설립을 검토한다. 키르기스 경제내에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산업 활동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공공기업의 설립을 통하여 국내의 가용자원을 집적하고 전략산업 부문에의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원의 조성 과 전략부문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공공 금융기관의 설립을 검토한다. 예를 들어, 과거 한국의 산업은행 역할을 담당할 키르기스 개발 은행과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키르기스 수출입 은행 등 개발 금융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개발은행은 가용자원의 전략부문의 전달(channeling)을 효과적으로 담당하고, 수출입 은행은 수출 금융 등의 기능을 통하여 수출시장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산업정책의 가장 큰 난점과 위험요소는 전략산업의 선택에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산업정책이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인 것은 정책이행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전략산업의 선택 그 자체의 타당성을 항상 보장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산업정책은 공공과 민간의 자원을 투자하여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므로 단기적으로 공급역량의 확대 그 자체는 어렵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확대된 공급이 지속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내외적 수요가 담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키르기스 공화국의 EEU 가입은 보다 넓은 시장기회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국내시장에 대한 국내 산업의 시장수요 확보에 위험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3) 한-키르기스 산업협력 방향

한국의 경우, 지난 반세기동안 추진해온 산업화가 일정 수준의 경제적 수준을 달성하는데 성공하였지만 후발공업국의 빠른 추격으로 거의 대부분의 공산품 시장에서 극심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다. 한국경제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전반적인 재편과 구조고도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이를 위한 적극적인 고민과 투자가 부재한 상황이다. 키르기스 공화국의 경우, 산업정책을 이행한다고 할지라도 국내 제조업의 생산역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대체적' 전략을 활용하는 것은 기껏해야 단기적으로 유효하다. 가장 적극적으로 대내지향적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으며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도 실제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우선순위 설정과 투자를 통한 국내 산업의 육성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 본질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키르기스 공화국이 향후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경우, 한국과 키르기스는 양자간의 전략적 협력을 실시할 공통의 이해기반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한국의 중소기업이 새로운 국내외 환경에서 경쟁력 향상과 생존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술적 금융적 지원에서 벗어나 국제적 생산분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기조의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둘째, 한-키르기스 공화국간 산업협력을 위하여 새로운 협력의 'Modality' 구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지역간 협정 체결과 같은 시장중심적 협력모형이 아니라 양 지역간의 정책적 '공공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셋째, 키르기스 공화국이 산업화를 경제발전의 핵심전략으로 설정할 경우, 전략목표와 한국의 중소기업 육성이 상호 일관된 산업분야를 발굴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구체적 협력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전략적 산업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초를 확보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위한 지원의 기초 전환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정책 과제이다. 그 일환으로써 유라시아각국의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주요 생산공정 및 비교우위를 파악하고 국가간 비교우위에 따른 '생산공정의 무역(trade in tasks)'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주로 기술적이고 금융적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정책을 보다 장기적인 구조고도화의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국제화로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한-키르기스 산업무역협력을 위한 새로운 협력 Modality 개발(무역투자개발협정(Trade and Investment Development Agreement, TIDA)이 필요하다. 통상적인 FTA 체결이 현재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 특히 중소 제조업이 처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투자 개발 협정(TIDA)'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국제협력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① 통상적 지역간 협정의 요소: 계약 당사국간의 자유로운 무역 투자활동의 보장을 통해서 산업협력을 위한 기본적 환경을 조성함

이러한 협정 체결을 통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수출 활로를 개척하는 등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함

② 국가간 산업협력을 위한 정책조정 메커니즘

- FTA 체결이 국제 및 지역 협력과 통합의 시발점이라는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고, 수출시장 확대를 통한 수출역량 강화에 집중되어 있는 FTA의 한계를 극복

- 산업정책의 요체는 목표산업의 설정과 추진 전략 그리고 이에 소요되는 자원의 확보에 있음. 따라서 계약 당사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전략적 제휴가 가능한 목표산업 및 생산공정의 분업구조 등의 설정을 위한 정부간 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 이러한 점에서 국가간 산업협력 방안 - 예를 들어 협력 산업 분야 협의 등 - 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 또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며, 결론적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정책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함

- 본 위원회는 통상 정부가 갖는 강제적 자원동원력을 갖기 보다는 전략적 제휴의 방향 제시, 관련 산업활동에 대한 공통의 인센티브 시스템 개발, 기술적 및 인적 자원의 제공 등에 관한 조정을 담당

셋째, 전략적 산업협력을 위한 공동 자원의 조성이 필요하다. 전략적 산업의 이행은 여타 정책과 같이 자원의 투입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이에 필요한 공동기금 및 여타 자원을 조성 및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 2세션(16:00-18:00)

- 사회자: **고재남**(국립외교원)
- 발표자: **김영식**(강릉원주대학교)
“우크라이나의 산업정책과 협력 방안”
변현섭(한양대학교)
“우즈베키스탄의 산업정책과 협력 방안”
조영관(수출입은행)
“투르크메니스탄의 산업정책과 협력 방안”
- 토론자: **Horopakha. S.**(주한 우크라이나대사관, 1등서기관)
Shagzatov. O.(주한 우즈베키스탄대사관, 참사관)
Durdyev. B.(주한 투르크메니스탄대사관, 참사관)

우크라이나의 산업정책과 협력 방안

김영식(강릉원주대학교)

I. 서론

우크라이나는 1991년 독립이후 구사회주의 유산청산에 실패하면서 각종 부정부패와 경제실정으로 자유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실패하였으며, 이로 인해 만성적인 정치불안과 경제위기가 반복되었다. 그리고 EU 통합 추진과 러시아와의 전통적인 입장에서 협력을 고수해 왔으며, 집권정부의 성향에 따라 친서방과 친러 성향을 오가며 실용적 노선을 취해왔다. 2004년 유셴코대통령 및 티모셴코 총리는 오렌지혁명으로 집권하였으나 민영화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이견으로 대립하였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여파로 2010년 2월 친러성향의 야누코비치 전총리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부정부패와 친러정책으로 인해 추출되면서 러시아와 대립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맞물려 서방과 러시아의 첨예한 대립은 탈냉전 이후 국제질서를 변화시켰다. 그러나 반대로 미국, EU 등 서방과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전면적인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수립하였다. 이는 러시아와 서방 간의 대립을 가져왔으며, 탈냉전이후 국제질서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야누코비치 대통령 축출과 친서방 과도정부 수립으로 투르치노프 대통령 권한대행과 야체뉴크 총리체제의 과도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리고 2014년 5월 25일 대선에서 무소속의 포로셴코 대통령이 당선되었으며, 대통령은 2014년 10월 동부사태의 해결과 유럽 기준에 입각한 강력하고 자유로운 국가건설 추진을 위해 “2020 우크라이나 전략(Ukraine 2020 Strategy)”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EU가입을 목표로 반부패 개혁 및 정화, 사법개혁, 분권화 및 국가 거버넌스 개혁, 규제 완화 및 기업가 정신 개발, 법집행 시스템 개혁, 국가안보 및 국방시스템 개혁, 보건시스템 개혁, 조세개혁 등 8개 분야를 최우선으로 설정하여 관련 법령정비 및 기구설치를 추진하였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군사교전보다 양국간 경제제재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관련 기업의 자산을 동결했으며, 개인 여행 및 입국금지를 시행했으며, 러시아산 제품 사용을 금지하였다.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산 농산물과 식품 수입을 금지하였으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외교적·경제적 대립이 더욱 심해졌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대러시아 무역 의존도가 높아 대러시아 제재가 지속될 경우 우크라이나 경제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경기침체와 외환보유고의 급감, 신용등급 강등 등 경제적 취약성이 심각한 가운데 정치적으로도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어 디폴트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¹⁾

최악의 경제적 상황에 처해있는 우크라이나 경제는 서방의 경제적 지원과 EU와의 FTA체결에 따른 교역환경 및 지속적인 구조조정 기초하에서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이 제거되면 단기간 내에 회복 추세로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II. 우크라이나의 경제 현황

우크라이나의 경제현황을 살펴보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경기 침체 심화로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었으나 미국, EU 및 IMF 등의 지원과 광범위한 경제개혁 조치로 인해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현재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는 우크라이나 경제는 서방의 경제적 지원 및 구조조정 추진에도 불구하고, 동부지역 사태가 안정되지 않는다면 지정학적 불안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될 전망이다. 2015년 3월 11일에 IMF는 경제개혁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향후 4년간 총175억불의 차관 제공 결정했으며, 동부지역사태가 진정되면 2016년에 2%의 경제성장을 전망(IMF)했다. 2015년 상반기 동부사태 악화, 급격한 환율 급등 및 물가상승으로 국내총생산이 16% 하락하는 등 최악의 경제침체를 경험하였으나 하반기에 들어 국제사회의 지원 및 외환시장 안정화에 힘입어 경기 하락 속도가 완화되고 있다.

현재 IMF와 미국, 그리고 EU 등 국제사회의 지원 아래 금융·조세·사법 등의 분야에서 개혁조치를 통해 경제 안정화와 성장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성장을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안정화라는 지정학적 불확실성 제거가 중요하다. 그리고 지속적인 개혁이행을 통해 다양한 위험요인을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2012년에 경제성장률을 3.2%로 예상했으나 유럽 및 미국경제 위기로 인해 0.2% 증가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정부는 2013-2014 경제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성장을 추진했으나 EU와 러시아의 경제성장 둔화와 우크라이나의 부진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2013년에 0%의 경제성장을 기록했다. 2014년에 우크라이나의 내전사태와 정정불안으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6.8%, 11%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했다.

그리고 2012년과 2013년에는 안정적 물가를 유지해왔으나 2014년에는 급격한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해 물가상승과 공공요금인상 등으로 인해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여 24.9%를 기록했다. 경기 침체 및 대외적 불안정으로 인해 실업률도 상승했으며, 특히 교전이 진행되고 있는 동부지역은 대부분 산업시설이 가동 중지되어 경제상황이 심각했다.

<표 1>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지수(CPI), 실업률 변동 추이

(단위 :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경제성장률	4.2	5.2	0.2	0.0	-3.0	-11
인플레이션율	9.1	4.6	-0.2	-0.5	24.9	46.4
실업률	8.1	7.9	7.5	8.0	9.3	9.6

자료 : 우크라이나 통계청, EIU, 2016

1) 2015년 9월 25일 S&P는 우크라이나 국가신용등급을 '제한적 디폴트'로 강등했으며, 10월 6일에 Pitch는 우크라이나 신용등급을 '제한적 디폴트'로 강등시켰다.

2015년 이후 통화 가치가 급속히 하락함에 따라 수입물가가 폭등하였고, 가스 등 각종 공공요금도 인상됨에 따라 상반기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되었으나(2015년 물가상승률은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하반기 들어 다소 완화되었다. 경제 위기로 산업생산 감소, 소비 및 투자심리 냉각, 기업 및 은행 도산 증가 등으로 실업이 증가했다.

2014년 2월 중앙은행은 IMF 구조조정 일환으로 변동환율제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급격한 환율변동 초래하였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낮은 생산성과 대외 경쟁력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화폐가치는 과대평가되어 있었고, 금융분야 자유화와 정세 악화로 인해 화폐가치가 하락되었다. 이에 따라 환율은 2013년에 달러당 7.99그리브나에서 2014년에 16그리브나로 급등하였고, 2015년 2월에는 35그리브나로 증가하였으나 2015년 3월에는 22그리브나로 안정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2015년 중앙은행은 통화 가치 방어 및 대량 은행예금 인출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19.5%(2월 6일)로 인상한데 이어 3월 3일에는 30%로 대폭 인상하였다. 이는 2001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금리수준으로 한 달 사이에 무려 15% 인상한 비상조치였다. 우크라이나의 기준금리는 우크라이나가 국제 금융을 신청한 2009년에 13.8%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에는 7.5%로 하락하였다. 환율 방어를 위해 2013년에 8.7%로 인상했으며, 2014년에는 19.5%까지 금리를 인상하였다. 금리인상은 금융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화폐가치급락과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은 경제위기 이후 적극적인 환율방어를 위해 사실상 페그제도(De facto peg)를 실시하여 2013년 말까지 1달러당 7.99그리브나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IMF가 요구한 시장자유변동제 실시에 따른 변동환율제를 채택하여 2014년 2월 페그제도를 포기하였다. 그리고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정정불안으로 우크라이나의 현지화 가치는 달러 대비 약 43% 하락하였다. 2015년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2015년 2월에는 무려 33그리브나까지 치솟았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은 고시 6월 30일 기준 환율은 1달러에 21.01그리브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2> 공식 환율 추이

(단위 : UHA/\$)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환율(연말기준)	7.70	7.99	7.96	7.99	7.99	8.7	15.77	22.40
환율(평균환율)	5.27	7.79	7.94	7.97	7.99	8.7	11.89	21.65

자료 : EIU, 2015.6

우크라이나는 국내산업의 경쟁력 부재와 과대평가된 환율로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해 왔으나, 2014년 이래 국내수요 감소 및 화폐가치 하락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개선되는 듯했다. 그러나 경상수지는 2013년 GDP의 4.4%에서 2014년 3.5%로 감소하였고, 2014년 수출은 4.3%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16.9% 감소(총수출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는 33.7% 감소)하였다.

외환보유고는 경상수지 적자, 자본 유출 및 외국인 투자 감소로 인해 2015.2월 56억불까지 급감하였으나 2015년 하반기 들어 IMF 지원금 유입, 대외 채무 조정 및 외환시장 안정화로 점

차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외환보유고는 2013년 12월에 204억불, 2014년 12월에 75억 불, 2015년 6월에 102억불, 2015년 10월에 129.6억불 기록하였다.

대외 정부 채무와 관련해서는 국내 산업 경쟁력 부재와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로 국가 채무가 증가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국가 개혁 및 경쟁력 강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분야를 포함한 우크라이나의 총 대외채무는 GDP의 153%에 상당하는 1,269억불 규모다.

디폴트 위기는 피하더라도 지속적인 외환 부족 및 환율 추가절하에 대한 불안 지속, 정책적 불확실성 및 위기 대응능력 부족, 러시아와의 경제 관계 중단 등 불안요인이 많아 경제위기 요인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미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는 우크라이나 경제는 서방의 경제적 지원, EU와의 FTA 체결에 따른 교역환경 개선 및 지속적인 구조조정 기초 하에서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이 제거되면 단기간 내에 회복 추세로 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나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 회복이 관건이다.

<표 3> 주요거시경제 지표

지표 (단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경제성장률(%)	4.2	5.2	0.2	0.0	-3.0	-11
명목 GDP(억\$)	1,364	1,634	1,763	1,809	1,809	-
1인당 GDP(\$)	6,649	7,161	7,320	7,486	7,486	-
정부부채/GDP(%)	39.9	36.3	36.6	40.4	40.3	-
소비자물가상승률(%)	9.1	4.6	-0.2	0.5	24.9	46.4
실업률(%)	8.1	7.9	7.5	8.0	9.3	9.6
수출액(백만\$)	52,191	69,418	70,236	59,501	61,252	-
수입액(백만\$)	60,579	85,670	89,714	81,228	76,358	-
무역수지(백만\$)	-8,388	-16,252	-19,478	-21,727	-15,106	-
외국인투자(백만\$)	4,753	4,556	5,100	4,437	4,753	-
총외채(백만\$)	116,026	134,482	136,563	137,336	146,645	-
외환보유고(백만\$)	34,580	31,790	24,550	20,420	22,940	-
환율(UAH/\$)	7.99	7.99	7.99	7.99	10.50	-

자료 : 우크라이나 통계청, EIU, 2016.2

지난 3.27 IMF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경제개혁 프로그램 이행 지원을 위해 향후 2년간 170억 불 규모의 대기성 차관 제공 합의하였으며, 4월 30일에는 IMF 이사회 의결을 거쳐 1차분 32억 불을 지급하였다. IMF와의 차관 협상 타결을 전제로 공약된 국제사회의 지원 계획은 총 270억

불 규모이며, EU 110억 유로, 미국 10억불 차관 보증 및 1.5억불 직접 재정지원, 캐나다 2억불, 일본 15억불, 세계은행 7.5억불 등이다.

IMF는 우크라이나의 전반적인 거시경제 지표는 심각한 수준이며, 최근까지 과대평가된 환율로 인해 경상수지적자가 과대(GDP의 9%)해 지고 있으며, 경쟁력 부재로 인해 수출과 국민생산이 정체 수준에 있다. 그리고 심각한 대외채무와 국제 채무시장에의 접근 제한으로 인해 외환보유고가 고갈(수입액 대비 두 달치에 불과)되었다.

2015년 2월중 변동환율제 도입과 금융변화 개혁조치 덕분에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가고, 긴급한 재정수요에도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경기는 계속 침체중이며, 특히 2016년 이후 예정되어 있는 대규모 외채상환도 경제에 많은 부담을 주었다.

크림 사태 이후 러시아가 2차에 걸쳐 대 우크라이나 가스 수출가격을 일방적으로 대폭 인상한데 대해 우크라이나가 가스대금 납부를 거부하는 등 반발하면서 양국간 가스분쟁 격화되었다. 러시아는 대 우크라이나 및 대 EU가스 공급 중단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으며, 러시아 정부는 지난 4월 1일에 대 우크라이나 가스 수출 가격을 1,000m³당 268.5불에서 385.5불로 인상한데 이어 4월 3일에 다시 485.5불로 추가 인상하였다.

러시아는 2014년 12월 EU와 제휴협정 서명 준비를 중단하고, 러시아와의 경협을 강화한다는 요지의 푸틴 대통령과 당시 야누코비치 대통령간 합의에 따라 금년 1/4분기부터 주재국에 대해 1,000 m³당 268.5불이라는 인화된 가격으로 가스를 수출해 왔으나 러시아 측은 2월말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축출되고, 주재국에 친서방 과도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대주재국 가스 수출 가격 인상하였다.

러시아가 주재국에 대해 연체대금 납부를 촉구하면서 가스대금 선불제 도입을 논의하는 등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데 대해, 주재국은 러시아와의 가스가격 문제를 국제중재재판소로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EU와 가스 역수입 방안을 추진하는 등 양측간 대립 국면을 조성하였다. 따라서 러시아는 2015년 4월 10일과 5월 13일에 각각 우크라이나가 35억 달러의 연체 가스대금을 납부토록 EU가 중재할 것을 요구하면서 연체대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스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다. EU-우크라이나-러시아는 2015년 5월 2일에 3자회담을 열고 안정적인 가스 공급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Ⅲ. 우크라이나의 산업 정책

우크라이나는 국가차원에서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육성하는 포괄적인 산업육성정책은 없고 개별사업별로 육성책이 수립 시행되고 있다. 현정부는 철강산업에 수출의 40%를 의존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변동에 따라 수출량 및 수출가격이 급변하고 이것이 경제의 안전적 성장을 해친다는 판단하에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소련시절 우크라이나에는 지역별 산업 배치 정책에 따라 철강, 조선, 우주, 항공 등과 같은 산업시설이 밀집된 지역 중하나였으나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는 정부지원이나 정부의 구매가 크게 감소하여 시설 개보수가 거의 중단되었다. 2015년 5월 25일 신정부 출범 이후 우크라이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경제개혁정책을 구상중이며, 산업분야에서도 대표산업인 농업, 철강, 항공산업, 우주산업, 원자력 분야의 발전을 목표로 중점 지원하고 있다.

<표 4> 연도별 산업생산 지수 변동 내역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 광업	103.7	107.2	97.5	100.6	86.3	81.3
에너지광물	96.9	108.4	103.5	104.6	167.8	94.3
기타광물	114.3	105.7	99.7	98.9	9.6	98.7
2. 제조업	113.9	108.2	96.3	92.9	90.7	83.7
식음료 및 담배 생산업	103.2	99.4	101.6	94.9	102.5	87.8
섬유공업	109.5	108.6	97.1	94.2	98.6	91.5
목재가공	109.6	109.7	98.2	100.8	103.0	98.5
제지산업	102.8	99.1	101.9	105.1	94.3	87.0
코크스 및 정유생산	99.8	91.5	73.6	89.2	78.7	70.3
화학공업	126.6	114.4	107.3	83.1	85.8	80.6
고무플라스틱	110.1	100.6	103.4	99.5	91.2	89.8
기타 비금속광물 생산	108.5	112.4	94.2	96.6	91.5	91.9
철강산업	112.2	108.9	94.8	96.9	85.5	79.7
기계산업	136.1	117.2	94.0	86.8	79.4	80.7
전기전자광학기기	124.2	114.7	88.4	91.1	77.9	86.7
운송기계	161.9	122.6	100.1	79.6	64.3	78.0
3. 유틸리티산업	109.5	105.3	102.8	98.6	93.4	86.3
총계	111.2	107.6	98.2	95.7	89.9	83.4

자료 : 우크라이나 통계청(Ukrstat), 2015.11

* 지수: 100-무변동, 100이상-증가, 100이하-감소

**크림공화국, 세비스토폴 및 반정부군 장악 지역 제외

1) 농업

우크라이나는 전통적인 농업국가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농업을 에너지·농업·IT분야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3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외국인 투자는 물론 식품 제조산업 발전을 위해 가장 주력하는 분야다. 2014년 우크라이나사태이후 정부는 농업부문의 진흥정책 추진을 위해 외국자본 유치를 통해 세계 농업국가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방농업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소비에트전까지 구소련의 식량생산을 담당하는 ‘빵바구니’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우크라이나의 흑토는 전세계 흑토의 40%에 달하며, 농지 가용률은 42.8%로 한국 14.8%, 캐나다 7.8%보다 높은 편이다. 주요 수출 농산물은 밀(전 세계비중: 8%, 순위: 6위), 보리(10%, 4위), 옥수수(3%, 3위) 등이다.

한반도 면적의 약 3배에 달하는 우크라이나의 국토는 세계에서 가장 비옥하다는 흑토로 덮여 있으며 풍부한 노동력을 갖고 있어 농업에 관한 최고의 여건을 갖고 있다. 국토총면적 6,030만 헥타르 중에서 67%가 농지이고 54.4%가 경작 가능 면적이다. 이러한 우수한 환경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는 유럽, 중동, 아시아 등지로 많은 곡물을 수출하고 있다. 또한 세계 6대곡물 수출국으로, 동식물성유지, 채유용 종자 등도 수출하고 있다. 2014년 우크라이나의 곡물수출량은 6,544백만 불이었으며, 동식물성유지는 3,823백만 불, 채유용 종자는 1,687백만 불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물류, 저장, 유통인프라가 열악한데다 체르노빌원전사고(1986년)후 농축산물의 해외 수요처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바 있다. 현재 채소, 과일, 생화, 낙농품 등 많은 농산물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2014년 기준 주요 농산물 수입실적은 낙농품 20백만 불, 채소 23백만 불, 과일·견과류 148백만 불 등으로 나타났다.

이외 곡물 366백만 불(옥수수 313백만 불, 쌀 43백만 불), 채유종 종자 311백만 불(해바라기씨 165백만 불, 파종용씨앗 53백만 불), 동식물성유지 301백만 불(팜오일 154백만 불, 마가린 64백만 불) 등도 수입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인 곡물 부족 현상에 따라 러시아에 이어 2010년 10월부터 주요 곡물에 대한 수출 쿼터제도를 도입해 2011년 6월 30일까지 적용했었고,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1월 1일까지는 수출 쿼터제는 폐지하는 대신 수출관세를 신규 도입하였다. 한편, 2015년 1분기 곡물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22% 감소한 1,421백만 불이다.

농업부문의 GDP대비 산업비중은 2014년 10%로 매년 1~2% 증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전체 농산물 가운데 곡물의 비중이 3/4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사탕무, 감자, 해바라기씨, 야채, 과일 등의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다른 작물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농업부문의 산업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열악한 관개시설이 개선된다면, 곡물을 포함한 농업부문의 생산량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표 5> 우크라이나 GDP 대비 농업 비중 현황

(단위: 백만 그리브나, %)

연도	GDP	농업	비중
2010	1,079,346	80,385	7
2011	1,299,991	106,555	8
2012	1,404,669	109,785	8
2013	1,465,198	128,738	9
2014	1,566,728	160,516	10
2015(1분기)	367,577	15,923	4

자료 : 우크라이나 통계청(Ukrstat), 2015

<표 6> 우크라이나 주요 곡물 생산 현황

(단위: 천 톤, %)

	2010	2011	2012	2013	2014	증감률
곡물	39,271	56,747	46,216	63,051	63,859	1
사탕무	13,749	18,740	18,439	10,789	15,734	46
해바라기씨	6,772	8,671	8,387	11,051	10,134	-8
감자	18,705	24,248	23,250	22,259	23,696	6
야채	8,122	9,833	10,017	9,873	9,638	-2
산딸기류	1,747	1,896	2,009	2,295	1,999	-13
총계	88,366	120,135	108,318	119,318	125,057	5
성장률	-4	36	-10	10	5	-

자료 : 우크라이나 통계청(Ukrstat), 2015

2) 낙농업

우크라이나의 낙농업시장은 세계 우유생산시장의 약 1%를 차지한다. 국민들의 우유 소비량은 선진국보다 낮은 편이나 수출을 통해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우유를 통해 가공하는 치즈는 세계 치즈생산시장의 약 3%를 차지하며, 대부분이 러시아로 수출되었다. 그러나 우유공급의 과잉생산으로 인해 2015년부터 우크라이나 낙농업시장은 침체기를 겪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로의 수출이 중단되자 낙농업자들은 초과생산 분을 우크라이나 내수시장에 공급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낙농업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이집트, 모로코, 알제리 및 나이지리아 등 수출 다변화를 통해 유제품의 수출판로를 개척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농업부에 따르면 2015년 9월 1일까지 우유 수요량은 7백 4천만 톤이었으며, 해외로부터의 유제품 수입은 4만 2천 톤이었다.²⁾

그리고 2015년 1월부터 우크라이나의 우유가격은 평균 25-30% 상승하였다. 이는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농장 폐쇄 등이 원인이었으며, 2015년 1분기 우크라이나 우유 생산량이 전년 동기대비 3.4% 감소하면서 포장 우유 생산량도 9% 감소하였다. 그리고 유제품 생산량과 치즈생산량도 각각 11%, 19% 감소하였다.

우크라이나의 낙농업 업체들은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걸쳐 농장 및 유제품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유 생산량의 76.3%는 전역에 위치한 농장으로부터 생산되며, 나머지는 기업형 우유공장을 통해 생산하고 있다.

2015년 우크라이나 정부는 EU 및 중국과 우유, 유제품 수출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고, 우크라이나의 유제품을 EU로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거 우크라이나는 2012년 EU로부터 가금류 수출을 승인받아 계란, 계란 제품, 가금류 및 가금류 고기를 수출한 바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는 EU 시장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 아시아 등 해외 시장에 대한 진출 기회를 모색 중이다.

3) 에너지산업(에너지/광물)

우크라이나는 화력발전소 16개(발전용량 총 31GW- 도네츠크 주 5개, 키예프 주 2개, 루한스크 주 2개, 드니프로페트로브스크 주 2개, 르비브 주 1개, 이바노프랑키브스크 주 1개, 빈니차 주 1개, 크림자치 공화국 1개, 자포리자 주 1개), 수력발전소 12개(발전용량 총 4.7GW-드니프로강 변 7개, 드니스테르강 변 3개, 보흐강 변 1개, 테레브라강 변 1개) 및 원자력발전소 4개(발전용량 총 13.8GW-자포리자 주 1개, 미콜라이브 주 1개, 리브네 주 1개, 흐멜리츠키 주 1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우크라이나 독립 이전에 건설된 것으로 발전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어 설비의 현대화가 시급하다. 석유는 정유기술이 낙후되어 있어 매연과 자동차 고장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석탄은 매장량은 풍부하지만 열악한 채탄 여건과 안전대책 소홀 등으로 매년 20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에너지자원 소비량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원유, 천연 가스 등 에너지자원의 가격변동에 민감하다. 2009년 1월 우-러 양국간 체결한 가스협상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2009-2019년 기간 중 연도별로 수입 목표량을 정하고 동 목표량을 최소 80% 이상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소목표량을 수입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 측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코트라, 우크라이나 주요산업 동향, 2015.11

우크라이나의 연간 천연가스 수입은 전체 광물성 연료 수입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2012년 14,025백만 달러, 2013년 11,821백만 달러이다. 2014년에는 러시아와의 가스분쟁 및 공급중단사태로 인해 전년 동기대비 49.0% 하락한 6,018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 중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수입액은 전체 수입액의 67.8% 차지한 4,082백만 달러로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아르세니 야체누크 총리는 10년 이내에 다양한 공급처를 확보해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의존도를 30% 이하로 낮출 계획(세일가스 개발,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화력발전소는 40%가 교체시기에 도달했으며, 일부발전소는 70~80% 까지 교체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 Development Programme)자료에 따르면, 2016년까지 전력발전소 현대화가 이루어지지 못 할 경우 우크라이나는 전력 부족국가로 전락될 것이며, 소비에트 당시 구축된 발전소는 2020년까지는 완전 폐쇄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우크라이나정부는 Energetic Strategy of Ukraine 2030(우크라이나 에너지 전략 2030)을 만들어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부문(수력, 풍력, 태양광 등)이 전체 에너지 시장의 20%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2015년말까지 원자력 발전의 생산비중을 55%에서 6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에너지부장관 Volodymyr Demchyshyn은 원자력을 확대함에 따라 연간 5백만톤의 석탄을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으며, 화력발전은 전체 에너지 생산의 30% 수준으로 감소시킬 예정이다.

4) 일반기계산업(기계/장비)

우크라이나의 일반기계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약 1,000여개에 달하며 생산량의 약 25%를 수출하고 있어 일반기계산업은 우크라이나의 기간산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구소련에서 우크라이나는 일반기계의 주 공급 기지였으나 독립한 후에 판로가 막혀 생산량이 급감하였다. 현재 기술수준이 낮은 중소기업과 현대화 된 대형기업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기술 엔지니어의 노령화와 기계산업 분야의 외자 유치 및 현대화, 그리고 인력공급 정책이 시급하다.

대형기업의 본사는 주로 자포리자, 도네츠크, 마리우폴 및 하르키브 등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일반기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의 현대화와 동부지역 분쟁 해결이 최우선 과제다. 하르키브는 우크라이나 내에서 기계산업이 발전한 도시로 분쟁지역인 돈바스지역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불안정한 치안이 산업발전의 잠재적 위험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일반기계산업이 예전과 같은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분쟁의 해결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우크라이나의 일반기계산업 기업들이 침체를 겪고 있지만,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들은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비행기, 헬기 생산기업인 Motor Sich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3배까지 감소했지만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은 EU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EU와의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새로운 시장을 찾고 시설의 현대화와 정확한 발전전략을 통해 기계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표 7> 우크라이나 일반기계 산업현황

일반기계산업분야	비중(%)
농업기계	18.4
자동차	14.7
전기	13.7
중공업	12.3
자도와기계	8.2
생산제어기계	8
건설기계	6.7
석유화학	6.9
식품산업기계	5.5
가죽관련 기계	4.2
발전관련 기계	1.4

자료 : Subject.com library 2015

5) 항공우주산업

우크라이나는 세계 9대 항공산업 국가이며, 대표적인 우크라이나 항공기인 An(ANTONOV)-시리즈의 경우 총 20종에 100개가 넘는 기종으로 전 세계에서 6,500대가 운행 중이다. 이렇게 항공산업이 발달하게 된 것은 구소련의 항공 우주 생산설비의 약1/3이 우크라이나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우주선을 자체적으로 설계, 제작, 발사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EU, 중국, 일본, 인도로 우크라이나도 이중 하나다. 우주선 및 발사대 설계연구센터 7개, 우주선 제조기업 12개, 기타 전문업체 13개사를 보유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5가지 종류의 로켓을 생산하고 있으며,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다른 국가로부터 위성발사체 제작 주문을 많이 수주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까지 총 143개의 위성발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으며 연도별 위성 발사 실적 비중은 2013년에 4.9%(7/82), 2014년에 7.6%(7/92)이다.

우크라이나에는 3개의 대형항공기 제작업체와 4개의 중소형 항공기 제작업체가 있다. 중소형 항공기 제작업체에서 제작되는 경비행기 및 글라이더는 주로 미국, 호주, 뉴질랜드, 영국 및 프랑스 판매된다. 우크라이나 항공기 제작업체들은 2005년에서 2014년까지 새로운 항공기 모델 설계가 중단된 상태다. 따라서 설계된 항공기들은 현재는 구형모델로 낙후되어 브라질 및 캐나다 항공기 제조업체들에 점유율을 많이 빼앗겼다.

우크라이나는 로켓의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 공정이 가능한 세계 5개국 중 한 국가로서,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50여개의 우주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우주 관련 주요 22개 기술 중 17개를 우크라이나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다. 2014년말 현재 우크라이나에는 33개의 우주 관련기업 및 기관이 존재하며, 이들 기업 및 기관에 약 3만 2,0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우주로켓산업은 1992년부터 국가 우주국에서 총괄하는데, 이 기관은 산하에 30개의 기업, 연구소, 설계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항공산업은 2008년 의회에서 채택한 항공산업 발전전략(2009-2020)을 통해 구조적 개혁과 부분적 민영화를 추진 중이다. 개혁을 통한 외부 투자유치와 불필요한 예산절감으로

항공산업 발전을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우주국은 브라질과의 Cyclone-4 프로젝트, 러시아와의 Dnepr 프로젝트, See Launch, Land Launch 및 유럽 우주국과의 Vega 프로젝트 등을 통해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을 인정받았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경제 및 정치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후속 프로젝트들의 시작을 앞두고 있어 우크라이나 우주산업의 전망은 매우 밝은 편이다.

6) 철강산업

우크라이나 동쪽에 위치한 크리보리츠키분지(Kryvorizsky Basin)에 매장되어 있는 철강, 돈바스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석탄과 저렴한 노동력 등에 힘입어 우크라이나는 철강산업이 발전되어 있다. 크게 3개 지역으로 나뉘져 도네츠크지역에 13개 공장, 아조브지역에 5개 공장, 프리드니프로스키지역에 14개 공장이 자리잡고 있다. 2014년 우크라이나는 2,720만 톤의 철강을 생산하며 세계 10위권의 철강생산국을 기록했다.

우크라이나 철강금속산업은 반제품 및 저부가가치 제품 위주로 생산되고 있어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냉연제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기반구축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철강산업은 우크라이나 2차산업 생산의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전체수출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주요 외화획득 채널이기도 하다.

주요 제철소로는 Mittal Steel, Illich Iron and Steel Works, Azovstal, Zaporizhstal, Alchevsk Iron and Steel, Petrskyi Iron and Steel Works 등을 들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 최대 규모의 제철소인 Mittal Steel의 생산능력은 세계 30위권에 든다. 하지만, 철강, 금속산업은 2008년 하반기 몰아닥친 경제위기로 가장 위축되고 있는 산업분야이다. 2010년과 2011년도 우크라이나의 철강생산량은 각각 3,350만톤과 3,530만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12.4%, 5.7% 증가했으나 2008년 3,710만톤에 비하면 아직 90%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2012년 생산량은 3,290만톤으로 2011년대비 6.8% 하락했는데, 이는 국제시장의 수요감소에 따른 철강 가격하락과 러시아산 가스가격 상승에 의한 우크라이나 철강산업의 경쟁력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진다. 2013년 철강생산량은 작년 동기대비 0.3% 감소하였으나 3,280만톤에 달했다.(총 64개국 중 10위 철강생산국) 한편, 2014년 철강생산량은 주요 철강산지인 동부지역의 내전사태 장기화로 인하여 전년 동기대비 17% 감소한 2,720만톤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철강산업은 우크라이나-러시아 관계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분쟁의 장기화로 인해 향후 몇 년간 철강산업은 예전과 같은 모습을 되찾긴 어려울 것이다. 분쟁이 정리되어 산업이 회복한다해도 노후 된 생산시설을 현대화하기까지 5-7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전폭적인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크라이나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이후로 연속 3년 동안 철강 수출량의 감소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8> 세계 10대 철강생산국

(단위: 백만 톤, %)

순위	국가명	2010	2011	2012	2013	2014
1	중국	626.7	695.5	708.8	822.0	822.7
2	일본	109.6	107.6	107.2	110.6	110.7
3	미국	80.6	86.2	88.6	86.9	88.2

4	인도	66.8	72.2	76.7	81.3	86.5
5	한국	67	68.7	70.6	66.1	71.5
6	러시아	67	68.7	70.6	69.0	71.5
7	독일	43.8	44.3	42.6	42.6	42.9
8	터키	29.1	34.1	35.9	34.7	34.0
9	브라질	32.9	35.2	34.7	34.2	33.9
10	우크라이나	33.4	35.3	32.9	32.8	27.2
합계	-	1,429.9	1,526.9	1,510.2	1,649.0	1,665.0

자료 : 2015년 World Steel Association 분석보고서

IV. 나가는 글

1991년 자본주의 경제체제 도입이후 우크라이나는 국영기업의 민영화, 시장경제 도입 등 꾸준히 자본주의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특히 1990년 초반에 WTO가입을 신청한 이후 의류, 신발, 가전제품, 농산물 등의 수입관세를 대폭 인하하였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유럽연합 가입을 위한 첫 단계로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면서도 러시아가 관세동맹(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에 가입할 것을 압박함에 따라 입장 표명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유럽연합에 가입한다는 기본입장을 정하고, 관세동맹과는 WTO 및 유럽연합과의 FTA 규정 범위 내에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14년 5월 25일 친 EU성향의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이 당선됨과 동시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EU와의 경제협력협정을 추진하였으며, 브뤼셀 EU정상회의에서 마침내 우크라이나와 EU간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9월 해당 협정비준을 완료하여 2016년 1월 협정 발효 시 우크라이나 국내총생산은 12억 유로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EU의 우크라이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 질것으로 기대했다.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국제곡물 수급불균형으로 곡물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며, EU는 식량 확보차원에서 미래 식량기지를 우크라이나에 확보하고, 이를 거점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유럽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유럽계 농업개발 기업 및 관계기업과의 협력과 그들의 투자유치가 필요하다.

2015년 들어 우크라이나는 경제적 난항을 겪고 있다. 야르세니 야체뉴총리는 자국통화의 가치하락과 높은 물가상승률, 외환보유고의 감소, 대외 채무 증가 등으로 인해 경제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지만 EU, IMF, ERDB(유럽부흥개발은행) 등 세계의 여러 조직들과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에 도움을 주고 있어 금리 인상을 통한 가치안정과 세금제도 개혁을 통한 재정확보를 추진하고 있고, 외국인들의 투자유치를 위한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위한 서방의 적극적 지원 하에서 국가 거버넌스시스템이 조기에 회복된다면, 우크라이나는 예상보다 조기에 안정화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 강봉구, “우크라이나의 ‘오렌지혁명’에서 국제요인과 대외정치적 정체성,”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7권 1호, 2009
- 김성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정책과 유라시아주의,” 중소기업연구 39권 4호, 2015
- 온대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과-러시아 관계,” JPI정책포럼 제 167, 2015
- 코트라(KOTRA) 키예프무역관, ‘우크라이나 경제동향 및 전망,’ 2015

우즈베키스탄의 산업정책과 전략적 협력방안*1)

변현섭(한양대학교)

1.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구조와 한-우즈베크 무역구조

① 산업구조: 폐쇄적 체제하의 제조업 기반과 안정적 성장

경제학적 관점에서 우즈베키스탄 산업의 성과와 미래는 매우 흥미로운 관찰대상이 아닐 수 없다. 경제활동의 세계화가 주류적 흐름으로 자리잡은 90년대와 2000년대에도 우즈베키스탄은 폐쇄적인 정책적 기조를 유지하였다. 상대적으로 풍부한 부존자원(금, 에너지 등)을 바탕으로 1차 산업 중심으로 산업이 발달하였으나 역시 제조업 육성을 통한 산업의 다각화를 산업정책의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입대체는 여전히 가장 강력하고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실제로 제조업 기반의 강화에 일정한 성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성과가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해외시장의 확보를 통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폐쇄적인 경제체제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억제함으로써 산업의 국제화에 불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서방의 대 우즈베키스탄 투자는 소극적이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제도적 환경과 무관하게 활발한 투자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우즈베키스탄은 2007년 이후 에너지 가격 고공행진에 힘입어 연평균 8%를 상회하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해 왔다. 산업생산 증가율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9.4%로 GDP 성장률을 앞섰다. 물가상승률은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재정수지는 2005년 GDP대비 0.1%로 흑자전환 이후 계속해서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폐쇄적인 체제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영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기도 하다. 그 결과, 지난 10년간 우즈베키스탄의 경제는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2014년만을 두고 볼 때에도 우즈베키스탄은 국제유가하락과 러시아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GDP는 144조 8,679억 슝(약 598억 달러)으로 전년대비 8.1% 증가하며 견고한 성장세를 지속하였다. 산업생산은 규모는 75조 1,935억 슝(약 310억 달러)로 전년대비 8.3% 성장하였다. 이러한 안정성 성장세는 그 자체로 상당히 인상적인 성과임에는 분명하다. 그리고 그것은 우즈베키스탄이 국제적 경쟁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폐쇄적 구조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커다란 요인인 것도 분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 본 발표 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2015년도 정책보고서 용역 연구인 “한-유라시아 주요국 산업협력을 위한 전략적 제휴방안 연구”의 일부입니다.

정책적 환경 속에서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가 일정한 수준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지속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는 매우 흥미로운 관찰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그림 1〉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경제 지표



출처: 우즈베키스탄 경제부

1991년 독립 이후, 우즈베키스탄은 자동차, 석유가스화학, 석유가스 기계제작, 현대적 건설자재 산업, 철도 기계제작, 생활가전, 제약, 식료품 가공 산업 등 상당히 새로운 산업들을 창출해 내었다. 예를 들어, 기계제작 산업과 목재가공 산업은 독립 이후 각각 18.5배, 19.8배 증가하였다. 2014년 한해만 두고 볼 때에도 주요 제조업은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하였는데, 철강산업 16.5%, 경공업 16.1%, 기계류 13.5%, 목재가공 및 제지업 12.3%, 건축자재 10.7% 등이 평균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또한 최근 산업의 현대화 및 기술개발, 생산의 효율성 증대 조치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실시로 2000-2013년 기간 동안 노동생산성이 2.1배 증가하고 에너지 사용은 3.2배 감소하였다.(표 1)

〈표 1〉 체제 전환 이후 우즈베키스탄 주요 산업의 확대

(%, 1990=100)

부문	1990년	2000년	2013년
에너지/연료	100	127.3	2.4배
전력	100	78.9	85.4
철강 산업	100	58.8	1.8배
비철금속	100	87.7	100.9
석유화학	100	101.6	3.6배
기계제작	100	142.2	18.5배
건축자재	100	58.4	1.9배
경공업	100	159.2	5.0배

식료품	100	150.0	7.5배
목재가공 및 제지	100	248.4	19.8배
기타	100	162.6	7.0배
계	100	123.6	3.7배

출처: 우즈베키스탄 경제부 (<http://www.mineconomy.uz/ru/node/696>. 검색일: 2015.08.31.)

〈표 2〉 2014년 우즈베키스탄 주요 산업 부문별 생산

부문	생산액 (십억 숨)	생산액 (백만 달러)*	비중 (%)	증가률 (전년대비 %)
에너지/연료	9,841.5	4,062.7	13.1	-1.9
전력	5,368.5	2,216.2	7.1	2.2
철강 산업	1,800.5	743.3	2.4	16.5
비철금속	6,580.1	2,716.4	8.7	1.7
석유화학	4,107.7	1,695.7	5.5	8.9
기계제작	14,828.3	6,121.3	19.7	13.5
건축자재	4,553.8	1,879.9	6.1	10.7
경공업	10,555.5	4,357.5	14	16.1
식료품	11,993.8	4,951.2	16.0	7.6
목재가공 및 제지	1,261.1	520.6	1.7	12.3
기타	17,557.6	1,776.1	5.7	3.7
계	75,193.5	31,040.9	100	8.3

주) 2014년 12월 31일자 환율 적용(1\$=2422.4숨)

출처: 우즈베키스탄 경제부

우즈베키스탄은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에 30.1%에서 2013년 17.6%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농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이다. 2014년 농업 생산량은 36조 9,570억 숨(약 153억 달러)로 전년대비 6.9% 증가하였으며 농작물은 전년대비 6.9% 증가하였고 축산물은 6.3% 증가하였다. 소매판매액은 58조 6,434억 숨(242억 달러, 식품 50.9%, 비식품 49.1%)로 전년대비 14.3% 증가하였다. 서비스 총액은 22조 6,831억 숨(93.6억 달러)로 전년대비 11.4% 증가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의 고정자본투자 규모는 GDP 대비 23% 수준이며 투자금의 원천은 기업 및 국민 등 사적 영역에서 조달되고 있다. 투자환경 개선 및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혜 제공 등으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규모가 크지 않으며(2013년 기준 약 30억 달러) 외국인 투자의 대부분은 생산 부문의 건설(70%)에 이루어지고 있다. 2014년 고정자본투자는 전년대비 9.6% 증가한 140억 달러였으며, 생산부문 투자 비중이 66.5%를 차지하였다. 건설부문 투자는 전년 대비 18.3% 증가한 19조 7,793억숨(81.6억 달러)였으며, 그 중 기업의 신규 건설·재건 및 현대화 사업에 80.6%, 수리정비 사업에 17.7%, 기타에 1.7% 투자하였다. 투자에 소요된 재원

은 기업 및 국민 52.7%, 외국인 투자 및 대출 20.2%, 은행대출 11.4%, 예산외 펀드(재건개발펀드 포함) 10.7% 등으로 조달하였다.

② 무역구조

독립 이후 현재까지 우즈베키스탄의 상품 수출 구조가 상당히 많이 변하였다. 90년에 수출의 절반 이상(59.7%)을 차지하던 면화의 수출 비중이 2013년에 7.5% 수준으로 떨어졌다. 대신에 에너지원 및 석유제품의 수출이 30.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의 수출이 크게 늘어났는데 특히 자동차 11.6배, 섬유 4.1배, 붕대 114.8배, 비료 11.3배 등이다.

〈표 3〉 우즈베키스탄 수출 상품 구조(%)

	1990년	2013년
면화	59.7	7.5
농산품	3.9	9.5
화학제품	2.3	3.9
에너지원 및 석유제품	17.1	30.1
철강 및 비철금속	4.6	6.1
기계 및 장비	1.7	5.3
서비스	1.3	18.9
기타	9.4	18.7

출처: 우즈베키스탄 경제부

1990-2014년 기간동안 수출 규모는 약 35배 증가하였고 이 기간 내내 무역 흑자를 달성하였다. 2014년 우즈베키스탄의 무역 동향을 살펴보면, 총 무역규모는 280.6억 달러로 전년대비 약 2.8% 감소하였으나, 1.5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시현하였다. 수출은 전년대비 1.5% 감소한 약 141억 달러로, 에너지 및 석유제품의 수출이 36.7억 달러로 전체 수출 비중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원면(7.4%), 식품(11.9%), 철강 및 비철금속(6.9%) 등이 있다. 수입은 전년 대비 0.1% 증가한 약 139.5억 달러로, 주요 수입품목은 기계 및 설비류로 39.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화학제품(16.0%), 비철금속(8.0%) 순이다.

90년대 초반 우즈베키스탄의 대외교역 국가는 대부분 CIS 국가들이었으나 현재 대외교역의 40% 이상은 아시아이며 15%은 유럽 국가들과 이루어지고 있다. 2014년 CIS국가와의 무역 규모는 124.7억 달러, 非CIS국가와의 무역 규모는 155.9억 달러로 非CIS국가와의 무역 비중이 전년 57.8%에서 55.6%로 소폭 감소하였다. 국가별은 러시아가 21.8%(61억 달러)로 가장 높으며, 이어 중국(16.9%, 47.5억), 카자흐스탄(12.6%, 35.4억), 한국(7.2%, 20.1억)순이었다. 수입규모로는 러시아(33억 달러), 중국(23.9억 달러), 한국(18.7억 달러) 순이었다.

수출 증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여 수출참여업체가 500개 이상 증가하고, 중소기업수출지원

펀드를 통해 2,4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 서비스를 지원하여 12.5억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고 8.4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 정책으로 기업 등록, 토지제공, 라이선스 취득, 건설허가 등 인허가 절차의 원스톱(one stop) 서비스를 확대하고, 통계 및 세무보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2014년에 2만개의 중소기업이 새로 설립되어 2015년 1월 현재 총 19.5만개의 중소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중소기업은 GDP의 56%, 산업생산의 31.1%를 차지하며 전체 고용의 76.5%를 차지하는 등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적극적인 투자정책, 산업 및 생산 인프라 현대화로 인해 경제의 구조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1차 산업(에너지, 금, 면화 등)의 수출비중이 여전히 총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국제 원자재 가격의 등락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낙후된 인프라와 열악한 투자환경으로 인해 자원 생산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전력 및 교통 인프라 관련 산업이 취약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잠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GDP의 10% 수준인 러시아 이주노동자의 송금액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러시아 금융위기와 루블화 환율 상승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전년대비 10% 감소한 6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²⁾. 자동차 수출 또한 감소 추세로 2014년에 러시아에서 판매된 우즈베키스탄 자동차는 전년대비 38% 감소한 37,695대였으며 특히, 12월에는 62% 감소한 2,340대 판매에 그쳤다.

2015년 5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양국 정상은 투자뿐만 아니라 무역 규모 확대 및 무역구조의 질적 다변화를 위한 잠재력과 폭넓은 가능성이 있음을 공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우즈베키스탄측은 우라늄 정광, 비철금속 및 관련 제품 등 전략적 상품과 면화, 면직사, 면 완제품, 다양한 화학 및 전자기술 제품, 비가공 및 가공 과채류, 수요가 있는 기타 상품의 직접 및 장기적 수출 추진·확대를 제안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측은 산업현대화 및 신규 설비 시설 조성을 위해 한국으로부터 현대적 첨단 기술이 접목된 장비 수입을 확대하는데 관심을 표명했다.

한-우즈베키스탄 양국간 교역동향을 살펴보면, 2014년 교역액은 20.5억 달러 기록하였는데 한국의 대 우즈베키스탄 수출은 전년 대비 3.3% 증가한 20.3억 달러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한국의 대 우즈베키스탄 수입은 전년 대비 48.5%로 크게 감소한 2,700만 달러였다. 2014년 한국이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수입한 제품은 우라늄, 면사, 펄프, 질소비료 등으로, 5대 품목이 수입액의 90%를 차지하였다.

〈표 4〉 한-우즈베키스탄의 연도별 교역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수 출	1,439(25.1)	1,719(19.5)	1,767(2.8)	1,968(11.4)	2,032(3.3)
수 입	22(-53.6)	40(81.2)	42(6.4)	53(25.3)	27(-48.5)
무역수지	1,417	1,679	1,724	1,915	2,005

출처: KOTIS

2) 러시아 이민청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 거주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는 2,215,780명이다.

〈표 5〉 주요 품목별 대 우즈베키스탄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 (MTI)	품목명	2013년		2014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2511	펄프	7,573	40.1	7,040	-7.0
2	0156	식물성한약재	1,926	35.7	3,089	60.4
3	4213	면사	8,192	-5.2	5,456	-33.4
4	7420	자동차부품	308	-56.7	256	-17.0
5	2310	질소비료	6,276	-49.8	1,423	-77.3
6	0233	동물성한약재	1,173	-20.7	178	-84.8
7	7411	승용차	598	-50.9	316	-47.2
		총수입	53,095	25.3	27,361	-48.5

출처: KOTIS

한국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하는 품목 중에는 자동차 관련제품(자동차 부품, 승용차, 원동기, 타이어 등)이 수출액 중 약 60%을 차지하여 높은 비중을 보였다. 기타 주요수출 품목은 건설중장비, 펌프, 합성수지, 기타가구, 편직물, 철구조물, 전선 등이다. 특히, 한국 업체들이 시공 중인 수르길 가스화학플랜트에 납품되는 건설중장비, 철구조물, 철강관 등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표 6〉 품목별 대 우즈베키스탄 수출 현황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 (MTI)	품목명	2013년		2014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7420	자동차부품	820,255	3.9	796,482	-2.9
2	7411	승용차	255,448	24.6	145,362	-43.1
3	7111	원동기	138,133	-23.9	105,354	-23.7
4	7112	펌프	46,328	54.1	49,253	6.3
5	2140	합성수지	85,187	10.9	75,185	-11.7
6	7901	기타기계류	9,043	-54.0	10,602	17.2
7	7251	건설중장비	47,365	80.9	54,040	14.1
8	5290	기타가구	36,531	8.8	33,977	-7.0
9	7131	공기조절기	11,679	-30.3	34,843	198.3
10	7290	기타산업기계	18,103	102.8	27,425	51.5
11	4360	편직물	46,724	4.4	38,964	-16.6
12	2221	도료	19,151	-1.9	18,597	-2.9
13	3109	기타플라스틱제품	11,360	3.5	17,582	54.8

14	6133	냉연강판	16,876	17.7	14,863	-11.9
15	8155	분석시험기	309	-71.6	12,934	4,090.5
16	6134	아연도강판	25,594	41.9	17,377	-32.1
17	8500	전선	11,157	1,604.5	21,516	92.8
18	2211	타이어	30,336	6.4	20,524	-32.3
19	8151	계측기	3,552	-21.2	7,704	116.9
20	7216	화학기계	7,831	1,100.8	14,230	81.7
21	7133	가열난방기	15,087	1,065.8	41,910	177.8
22	6172	주철	12,027	416.9	9,510	-20.9
23	3209	기타고무제품	6,868	95.7	8,490	23.6
24	2900	기타화학공업제품	5,532	36.2	5,803	4.9
25	4395	부직포	2,160	787.6	3,854	78.4
		총수출	1,968,036	11.4	2,032,719	3.3

출처: KOTIS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부진 속에서 우즈베키스탄 GDP와 산업생산의 안정적 성장세는 주목할 만한 성과임에는 분명하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세가 지난 10년 이상 유지되었다는 사실도 놀라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폐쇄적 구조 하에서 유지되고 있는 산업성장은 효율성의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을 것으로 쉽게 추론할 수 있다. 물론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경제가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은 안정적 성장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해소되기도 한다. 따라서 향후 우즈베키스탄 산업의 과제는 강화된 생산역량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외 수요를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찾아내느냐에 있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은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여부와는 무관하게 중장기적으로 적극적인 국제분업 관계의 형성에 대한 정책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우즈베키스탄 산업정책 현황과 평가

(1) 산업정책 경과와 특징: 폐쇄적 수입대체정책의 지속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서 매우 강력한 산업정책과 수입대체정책을 통하여 산업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을 추진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 전략의 핵심은 정부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주요 대기업을 통해 천연자원개발이 아닌 산업을 발전시켜 산업 다각화를 이루고자 하는데 있었다³⁾. 우즈베키스탄의 폐쇄적 정책은 국내 산업의 발전 여부와 무관하게 지속되고 있는데 그 경향은 최근에 더욱 강화되고 있다. 당초 우즈베키스탄은 개혁이후 자국시장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면서 정부가 지분을 가진 대기업을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1990년대

3) Max Spoor, David Kotz, Zavikhulla Nasritdinkhodjaev, Aktam Khaitov, Yulduz Abduganieva, and Artur Tukhtarov, "Linking Macroeconomic Policy to Poverty Reduction in Uzbekistan," *UNDP and The Center for Economic Research report*, 2005, p. 53.

정부의 정책은 수출촉진보다는 다분히 자국의 내수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에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경향은 한편으로는 금융위기 등 외부적 환경변화로부터 우즈베키스탄 경제를 보호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였지만 폐쇄성에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장기적 발전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의 중요한 정책 수단 중 하나인 관세 정책의 변화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개혁초기인 1991년부터 1996년까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관세정책의 특징은 비교적 낮은 수입 관세율 또는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를 적용하지 않음으로 시장경제도입 초기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억제하고 내수시장에 충분한 상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⁴⁾. 반면, 수출관세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이 시기 우즈베키스탄은 에너지 자급에 있어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시기였는데, 1991년 이후 에너지 수급에 있어 수입에 의존하던 우즈베키스탄은 1990년대 중반부터 석유, 가스, 석탄 등의 주요 에너지원을 자립할 수 있게 되었다⁵⁾. 에너지원에 대한 자립은 정부로 하여금 대외경제여건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이고 폐쇄적인 경제정책을 이끌어가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⁶⁾. 이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본격적으로 수입완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상향하여 본격적인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수입대체공업화 전략과 자국 시장에 대한 폐쇄적인 정책은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유럽부흥은행의 2012년 체제전환국 이행지수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전반적인 산업의 체제이행정도는 '1'점으로 나타나⁷⁾ 평가 대상인 동유럽과 CIS 등 33개국 중에서 투르크메니스탄과 함께 산업부문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도가 낮고 가장 정부의 통제를 많이 받는 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기본은 1990년대 중순부터 시작된 정부의 수입대체공업화 전략이 근간을 이루었다⁸⁾.

우즈베키스탄은 막대한 자원 수출을 기반으로 2004-2010년에 연평균 7%을 상회하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폐쇄 경제체제로 인해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도 미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에너지, 금, 면화 등 1차 산업의 수출비중이 총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국제 원자재 가격의 등락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낙후된 인프라와 열악한 투자환경으로 인해 자원 생산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가 부진하여 장기적으로 경제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전력, 교통인프라, 금융 등 다양한 산업의 현대화를 정책 우선순위로 책정하고 추진함으로써, 2004년 이후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그 결과 2010년 12월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5개년에 걸친 산업현대화 프로그램(2011-2015년)에 총 50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4) Saidazim Ganikhodjaev, "Regulating System of Foreign Trade in Uzbekistan at the Transitional Period," *Economic Journal of Hokkaido University*, Vol. 33, 2004, pp. 206-207.

5) 원유의 경우 순수입이 1993년 약 480만 톤, 1994년 약 320만 톤에 달했으나 국내생산량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1995년부터는 국내생산이 국내소비를 넘어서게 되었고, 석탄의 국내생산도 1995년부터 국내소비를 초과하게 되었다. 또한 천연가스도 수급이 안정화되어 수입이 중단되는 등 주요 에너지원을 대외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었고 오히려 1995년을 기점으로 에너지를 수출하기 시작하였다. 박지원, "우즈베키스탄과 몽골의 체제전환 초기 10년: 전략선택의 배경과 사유화 과정의 경로," *슬라브연구*, 제 28권 2호, 2012, p.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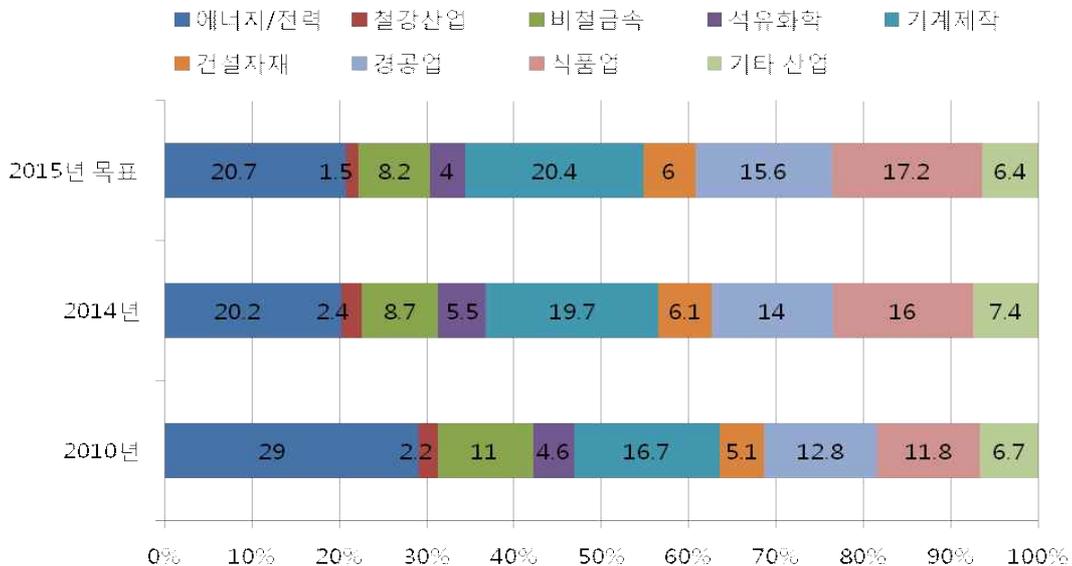
6) Richard M. Auty, "Transition reform in the mineral-rich Caspian region countries," *Resource Policy*, Vol. 27, 2001, pp. 25-32.

7) EBRD, "Transition Report 2012: Integration Across Borders," 2012, p. 9.

8) 박지원, "우즈베키스탄의 수입대체공업화 전략: 자동차 산업의 사례분석," *중소연구*, 제37권 제4호. 2013/2014 겨울, p. 295-297.

2011-2015년 산업발전 프로그램은 산업의 지속적인 균형발전, 수출 잠재력 및 산업경쟁력 확보 등을 목표로 기존 시설을 현대화하고 신규 생산설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산업현대화를 통해 산업생산량이 5년간 60% 이상 증가하고, 산업생산의 GDP 대비 비중이 2010년 24% 수준에서 2015년 28%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2015년 우즈베키스탄 산업구조는 2010년 산업생산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 비중이 63.2%까지 확대되고 관련 수출 비중도 51.1%에서 71.8%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연료 및 에너지 분야 생산비중은 29%에서 20.7%로, 비철금속 생산은 11%에서 8.2%로 축소되는 반면, 기계류 생산비중은 16.7%에서 20.4%로, 경공업은 12.8%에서 15.6%로, 식품업은 11.8%에서 17.2%로 각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다⁹⁾. 동 프로그램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조정하는 업무는 ‘전략적 투자사업 관련 국제기구 및 차관 제공국 담당 협력위원회’가 전담하고, 아지모프 제1부총리가 해당 기구의 수석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림 2〉 우즈베키스탄 산업구조 추이



출처: 통계청 자료 및 ‘2011~15년 산업발전 프로그램’ 바탕으로 저자 작성

2014년을 기준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산업생산규모는 75조 1,935억 습으로 이미 2015년 목표치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생산에서 연료 에너지 및 전력 분야 생산 비중을 20.2%로, 비철금속은 8.7%로 각각 낮추어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다. 기계류 생산 비중은 19.7%, 경공업 14%, 식품업 16%로 상승하여 2015년에 목표 달성이 가능한 수준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성과는 특히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결실로서 GDP에서 중소기업 생산 비중은 2010년 52.5%에서 2014년에 56.1%로 증가하였고, 2014년 산업생산에서 중소기업 비중은 31.9%, 투자에서 34.8%, 서비스에서 48.5%, 고용에서 77.2% 등을 차지하였다¹⁰⁾. 이는 그동안 추진해 오고 있는

9) 2011-2015년 산업현대화 프로그램의 주요 산업별 추진 내용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개도국 지역이슈 리포트 “우즈베키스탄의 산업현대화 추진현황과 향후 산업전망”(2011.12)을 참고.

자원의존 산업에서 국내외 상품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제품 생산 확대로 이전이라는 산업 정책의 성과이며 산업구조의 다각화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가 폐쇄적 경제구조의 한계를 과연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다. 그리고 그것은 산업 생산력의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어떻게 국제분업체계에 효과적으로 편입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2) 제4기 카리모프 정부의 산업정책과 평가

우즈베키스탄은 부존 천연자원을 이용한 에너지 개발 산업 및 풍부한 면화 생산량을 바탕으로 한 섬유산업 등은 발달한 반면, 제조업 및 2차 가공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부실한, 편중된 산업 구조를 보이고 있어 다각화된 산업 발전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다. 지속되는 글로벌 금융 위기 상황에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높은 경제성장세 유지와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였다.

2015년 1월 19일 우즈베키스탄 카리모프 대통령은 2014년 사회-경제발전 상황을 결산하고 2015년 경제정책을 논의하는 각료 회의를 주재하였다. 이 자리에서 6가지 경제정책의 우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세계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생산 및 산업을 지원하고 발전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통해 향후 경제성장의 동력, 지속적인 경제 현대화 및 다각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과제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장애 및 제한 요인을 제거하고 사적 소유 및 민간 기업의 발전을 위한 모든 자유를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국가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 수준이 매우 과도하며 전략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근거 있는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 넷째, 기업 운영 시스템에서 원칙 및 접근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며, 생산, 대외무역 및 투자 과정 등 기업 경영에 국제적인 표준을 도입하여야 한다. 다섯째, 경제성장 및 경제 구조조정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생산의 국산화 강화, 복합산업 기업의 확대이다. 여섯째, 경제의 구조조정은 인프라의 발전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보통신 시스템, 도로-교통 및 공공인프라 건설이 필수적이다¹¹⁾.

이러한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해당 부처에서 경제의 구조개혁, 주요 산업의 현대화 및 적극적인 다각화를 위해 산업경쟁력 제고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중기 산업발전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발표하였다.

- 2015-2019년 생산 구조개혁·현대화·다각화 보장 방안 프로그램
- 2015-2019년 국산화 프로그램
- 2015-2019년 농업 발전 프로그램
- 2015-2019년 교통인프라 현대화 프로그램
- 2015-2019년 에너지 절감, 절전 기술 및 시스템 도입 방안 프로그램 등

이러한 주요 경제정책들은 대부분 대통령 선거 직전¹²⁾에 발표되었다.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10) Основные итог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Узбекистана в 2014 году.
http://www.ved.gov.ru/exportcountries/uz/about_uz/eco_uz/ (검색일: 2015.7.5.)

11) <http://www.norma.uz/raznoe/doklad> (검색일: 2015.6.13.)

http://www.norma.uz/parlament/programma_deystviy_kabineta_ministrov_na_blijayshuyu_i_dolgosrochnuyu_perspektivu (검색일: 2015.6.13.)

12) 우즈베키스탄의 정치체제 특성상 그의 연임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실제로 2015년 3월 29일 치러진 선거에서 90.39%의 득표율로 당선되어 정책의 연속성이 확보되었다.

동안에도 카리모프 대통령은 산업에 현대적 기술 도입, 새로운 생산 기업 설립, 사적 소유 및 민간 기업 분야의 지속적 발전, 국가의 경제 개입 재검토, 파종 면적 최적화 및 수확량 증대, 농민의 이동 확대, 투자환경의 지속적 개선, 국산화 프로그램의 개선 및 수출 확대, 고용 증대, 해외 국가들과의 상호 협력 강화 등 10가지 중요한 공약을 내놓았다¹³⁾. 이렇게 카리모프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일관되게 경제개혁과 현대화, 생산의 국산화 및 수입대체산업화를 강조하고 있고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이러한 정책기조는 지속 및 강화될 것이다. 상기의 주요 경제발전 프로그램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2015-2019년 생산 구조개혁·현대화·다각화 보장 방안 프로그램

2015년 3월 4일 우즈베키스탄 카리모프 대통령은 선진 기술 도입과 생산 현대화의 연속적인 과정의 일환으로, 「2015-2019년 생산 구조개혁·현대화·다각화 보장 방안 프로그램」을 대통령령(UP-4707)으로 공포하였다.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 프로그램은 생산 구조개혁·현대화·다각화의 지속적인 보장,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의 견인차가 될 수 있는 첨단기술의 지속적 발전, 제조부문 에너지, 물질 및 노동비용 감축을 위한 기존 자원의 최대한 이용, 세계 시장의 견고한 수요가 있는 경쟁력 있는 완제품·반제품의 생산 확대, 외국 기업과 동일한 지분의 합작 기업 설립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의 적극적인 유치 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총 864개의 생산기술 현대화 및 개발 프로젝트로 408억 9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투자자 및 투자자금이 정해진 신규 투자 프로젝트가 711개로 196.4억 달러이며, 외국인 투자 및 차관 유치가 필요한 유망 프로젝트가 135개로 211억 69백만 달러의 투자가 예상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이행되면 2015-2019년간 연평균 8% 이상의 GDP 성장이 전망되며, 동기간 산업생산은 연평균 9% 성장하여 2020년까지 2014년 대비 1.5배 확대되고 GDP에서 제조업 비중은 현재 24%에서 2020년까지 27%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기계·석유가스·석유화학·화학·섬유·식품 분야의 발전 및 동 분야에서의 고부가가치 부문이 급속히 발전하여 산업부문에서 동 산업 비율이 2014년 62%에서 2020년에 67%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 결과 약 100개의 신규 상품군(약 1000개 품목)이 생산되고 2020년까지 연간 생산 잠재력은 18조숨(약 75억 달러), 수출 잠재력은 20억 달러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3,000만 달러 이상, 외국인 투자 지분 50% 이상 프로젝트의 경우, 외부 공공 인프라(전력 등)는 정부 재원으로 건설을 지원하고 2020년 1월 1일까지 동 5개년 프로그램에 명시된 프로젝트 시행과 관련하여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되지 않는 장비·원자재·부품 수입 시 관세를 면제(내각 승인 목록 포함, 통관수수료 제외)하는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¹⁴⁾.

13)

<http://uz24.uz/politics/islam-karimov-izlozhil-predvibornuyu-programmu-izbiratelyam-buharskoy-i-navoiyskoy-oblastey> (검색일: 2015.7.20.)

14) 2015-2019년 생산 구조개혁·현대화·다각화 보장 방안 프로그램의 전문은 우즈베키스탄 경제부 사이트 참고 <http://www.mineconomy.uz/ru/node/847> (검색일: 2015. 5.01)

〈표 7〉 주요 산업의 발전 목표 및 실행 프로젝트

주요 산업	목표	주요 프로젝트
전력산업	자원절약형 복합가스터빈 설치 및 태양에너지 기술 도입을 통한 기존 전력시설의 현대화 및 신규 발전소 건설로 전력 생산 1.2배 확대	나보이화력발전소 확장(2차 450MW 복합가스터빈 설치), 니즈니-부즈수 수력발전소·파르하드 수력발전소·타슈켄트 수력발전소 현대화 사업의 시행 등
석유가스/석유화학 산업	천연가스·콘덴세이트 완제품 생산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량 확대 및 품목 다양화	부하라 정유공장 시설 현대화·재건사업, 무바렉 가스처리공장내 가스화학공장 건설, 우스투르트 가스화학공장내 탄화수소 분해 신규공장 건설, 우즈벡-중국간 3차 가스파이프 건설, 대용량 석유가스화학 장비 생산을 위한 ‘우즈벡화학중공업’ 생산 용량 확대(2단계), 플라스틱 제품 생산, 지질탐사 작업 관련 첨단 장비 구입 등
화학산업	복합비료·폴리머·합성고무·메탄올·생활 화학제품 생산을 위한 현대 기술 도입 및 수출 다변화	사마르칸트화학공사의 황산칼륨 및 복합비료 생산, 나보이 질소공장의 메탄올 및 폴리염화비닐 생산, 안그렌 경제특구의 승용차 및 농기계 타이어 생산 등
기계산업	선진 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농기계·트럭·부품 부문 국산화 및 수입 대체 농업 기계, 트럭, 부품 생산 관련 신규 시설 건설, 기존 시설 현대화	- UZAUTOTRAILER JV(Uzavtosanoat와 MAN AUTO Uzbekistan 합작)에서 화물차 캐빈 및 부품 국산화 추진, 지작 축전지 공장 장비 현대화, 자동차(Gentra·Spark·Cobalt·T250 등)의 알루미늄·브레이크·플라스틱 부품 생산 등 - 국영농기계주식회사는 선진 농기계 업체(Klass, Lemken 등)와 공동으로 타슈켄트 및 치르치 농기계 공장 현대화·기술장비 재건사업을 통하여 부품·트랜스미션·기어의 생산 및 열처리 시설 건설, 트랙터 생산, 곡물·사료·목화 수확기 생산 등
섬유·가죽·제화 산업	국내 원료의 심화 가공을 기반으로 한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 높은 완제품 및 반제품 생산(염색 원사, 원단, 무두질 가죽, 니트, 의류, 신발 및 가죽제품)을 통한 상품 품목의 구조 개선	- 우즈벡 경공업성은 주요 외국 업체와 신규 공장 건설 및 기존 생산 시설 현대화 관련 58개의 프로젝트 시행(엘리칼린·쿤그라드 원면 공장내 편직기 건설, 부하라주 존도르·로민탄 지역 미준공 시설내 편직기 건설, 인도라마코간 텍스타일 공장내 섬유 생산(4단계) 등 - 우즈벡가죽제화산업협회(Uzbekcharmpoiavzali)는 국내외 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가죽 및 제화 생산 관련 61개의 프로젝트 시행
전자산업	전기기기 생산 가속화 및 첨단 기술 습득, 정보통신 기술 장비 및 부품 생산 시설 구축	우즈벡 전자산업공사(Uzeltexsanoat)는 안디잔케이블에서의 유럽 기술 이용 자동차 케이블 생산, 마이크로회로·소형 태양광발전소·전기동력기·가전

		제품용 김프레셔 생산, 가전제품 생산 확대(냉장고·가스오븐 등), 舊 모터 공장부지내 생산·마케팅·물류 종합센터 설립 추진(2.68억 달러 규모의 39개 신규 투자 사업 이행) 등
건자재 산업	친환경 건설 자재 품목의 다양화	우즈벡 건설자재주식회사(Uzstroyateriali)는 키질쿰시멘트공장내 현무암 섬유·철재 생산 및 철근콘크리트 플레이트·활성석회 생산, 우즈 오이나(Uz Oyna) 업체의 유리 생산, 카라칼파크스탄 지역내 시멘트 공장 건설, 지작주 시멘트 공장내 마감재 생산 시설 공사 등
제약산업	유명 외국 제약업체의 라이선스 및 특허를 이용한 약품 생산 확대와 품목 다양화, 국내 원료 및 기술을 이용한 자국산 약품 생산 추진	Pharm Product 공장의 앰플·일회용 주사기·수액·가루약·알약·캡슐 등 생산, Soft inter medical사의 수액 생산, Radiks의 혈장수액 생산, 기타 약재 제조를 위한 식물성 농축액 생산 등
식품산업	국제 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반가공품 및 과일·채소의 훈증 기술 도입, 진공 포장, 급속 냉동 및 기타 현대적인 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 역량 강화	수르한다리아주내 Faizi Ramz 농장의 과일 및 야채 건조가공, 지작특구내 인스턴트식품 생산, 사마르칸트주내 SIEB SAHOBATI 외국기업의 육류 생산, 타슈켄트주의 EURO FOOD TRADE의 버섯 가공 및 생선 통조림 생산, 기존 식품 회사 현대화(165개 사업) 등 시행
광물산업	알말릭광업공사(AGMK) 및 나보이광업공사(NGMK) 현대화/장비재건 관련 41개의 프로젝트 시행	무룬타이(Muruntay) 광산 개발(5단계)·부대생산 시설 현대화, 지작 시멘트 공장 확대, 웨라바드 지역 시멘트 공장 건설, 구리전선 생산 사업 등

출처: 우즈베키스탄 경제부. <http://www.mineconomy.uz/ru/node/847>

② 2015-2019년 국산화 프로그램

제조업 발전의 중요한 우선순위 중의 하나가 생산의 국산화이다. 2015년 2월말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제조업의 국산화 확대를 통한 수입의 최적화를 위하여 2015-2019년 완제품 생산 국산화 프로그램(PP-2298, 2015.02.11)을 승인하였다. 동 프로그램에는 600개의 광물 자원 가공 프로젝트와 1,225개의 가장 수요가 많은 제품 생산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 동 프로그램의 실시로 매년 35억 달러, 5년간 총 175억 달러 규모의 수입대체 효과가 예상되며 13,3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국산화 프로그램에 포함된 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세제 및 관세 혜택(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되지 않은 장비·부품 등의 관세 면제, 생산제품 기업의 법인세 및 재산세 면제 등)을 부여한다.

우즈베키스탄은 2000년 중반부터 수입대체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중단기(1년/3년) 국산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왔으며 자국 업체의 기술발전, 자국산 원자재를 사용한 고부가가치 제품생산, 자국산 생산제품 다양화, 수입대체 및 수출증진, 고용 창출 등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 제조업 부문에서 수입대체품 생산이 2005년 9.2%에서 2014년 말 약 20%까

지 성장하였다. 향후 5개년 국산화 프로그램이 완료되는 2019년 말에는 국산화 수준이 36%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 프로젝트 실행에 5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¹⁵⁾.

〈표 8〉 2015-2019년 국산화 프로그램하의 정부의 생산 권고 제품 분야*

정부의 생산 권고 제품 분야 (7개 분야)	세부 품목 수 (총 162개)
농산품	2
광물	9
화학 및 관련 산업 제품	39
섬유 재료	6
건설 자재	6
금속 제품	35
기계 및 장비	65

주) 세부 목록은 우즈베키스탄 경제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mineconomy.uz/ru/local>

③ 2015-2019년 농업 발전 프로그램

현재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농업생산의 구조개혁 지속, 선진농업기술 도입, 농업의 기계화, 농산물 가공 확대 등 농업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 중이다.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식량 프로그램 실행 문제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2015-2019년 농업 발전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

동 프로그램에는 수확량이 낮은 토양의 개량과 과일, 야채, 감자 및 기타 작물 파종 후 빈 공간에 순차적 배치를 통한 목화 재배 면적의 단계적 최적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고효율의 내염성(salt-tolerant) 및 내건성(drought-resistant) 면화 품종 및 다수확작물 개발을 포함한 채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이 수립될 것이다. 농기계 생산업체의 기술 장비 향상을 위해 2014년 5월에 설립된 국영 농업기계 회사인 ‘우즈아그로프롬마쉬홀딩’은 ‘클라아스’, ‘렘켄’ 및 기타 세계적인 기업들과 협력하여 현대적인 고효율의 트랙터, 현대화된 면화수확 기계, 곡물 수확 콤팩트 및 기타 장비들을 생산할 것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농업생산의 효율성 향상 보장의 가장 중요한 기초로서 토양의 비옥성 향상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이를 위해 2013-2017년간 토양 개량 조치 프로그램이 실행 중이다. 여기에는 관개 시설의 건설 및 재건과 보다 현대적 에너지절감 장비의 설치가 포함되어 있다. 그 결과 5년간 1.4백만 헥타르의 관개 토양을 개량하고 농작물 수확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점적관개(drip irrigation) 시스템의 확대를 포함하여 물절감을 위한 현대적 기술 도입에 관한 작업을 지속하는 것이다. 이것은 연간 10억m³의 관개용수를 절약할 수 있게 한다.

15) Утверждена Программа локализации на 2015-2019 годы

http://www.norma.uz/novoe_v_zakonodatelstve/novaya_programma_lokalizacii (검색일: 2015.5.27.)

http://news.uzreport.uz/news_4_r_128680.html (검색일: 2015.5.27)

그 다음의 작업 방향은 농산물의 가공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식료품 산업에 391개의 투자 프로젝트, 1.3백만 톤의 과일 및 야채를 보관할 수 있는 냉장창고를 포함한 총 2백만 톤 규모의 저장 창고 2천개 이상을 건설하는 것이다. 동시에 통합 물류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2015-2019년에 농업 분야에서 이러한 조치의 실현은 식량 안보의 강화와 주요한 식료품에 대한 자급자족 보장, 식료품 수출의 상당한 증가를 가능케 할 것이다¹⁶⁾.

④ 2015-19년 교통인프라 현대화 프로그램

우즈베키스탄은 현재 약 8%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2030년까지 유지한다면 화물 운송 규모가 매년 약 9.2%씩 증가하여 2013년 1,387.3백만 톤에서 2030년에 6,041.3백만 톤으로 4.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자동차도로 운송은 연평균 9.4% 증가하여 2013년에 1,258.6백만 톤에서 2030년에 5,811.6백만 톤으로 4.6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철도 운송은 연평균 5% 증가하여 2013년에 63.7백만 톤에서 2030년에 146백만 톤으로 2.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화물 운송 규모의 증가는 교통 분야의 투자 규모 증대를 요구하며 이는 GDP의 3.55%(2005-2012년 평균)에서 2030년에 GDP의 4.6%까지 투자될 예정이다¹⁷⁾.

이러한 배경에서 2015년 3월 6일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2015-2019년 엔지니어링-통신 및 도로-교통 인프라 현대화 및 발전 프로그램을 승인하였다. 동 프로그램에 따르면, 2015-2019년에 우즈베키스탄은 2,400.2km의 자동차 도로와 다리를 건설할 예정이며 이중 1,227.8km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도로기금 재원으로 건설되며 1,172.5km는 국제금융기관의 재원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그리고 299.5km의 일반도로와 다리가 도로기금 및 세계은행의 재원으로 건설 및 재건될 예정이다. 5년간 총 993개의 도로수리 기술장비를 구매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2015년에 150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200개, 2019년에 243개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2016-2019년에 38개의 아스팔트 및 시멘트 공장과 콘크리트 혼합 장치, 분쇄 및 분류 라인의 재건축 및 기타 장비 구매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도로공사인 '우즈아프트이울' 생산능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표 9〉 우즈베키스탄 도로교통 현대화 추진계획

	정부의 도로기금 재원 건설	국제금융기관의 재원 건설
2015년	204.6km	156.5km
2016년	257.8km	191.0km
2017년	213.5km	258.0km
2018년	277.9km	303.0km
2019년	274.0km	264.0km
합계	1,227.8km	1,172.5km

출처: http://news.uzreport.uz/news_4_r_130072.html (검색일: 2015.5.21.)

16) Программа развития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на 2015-2019 годы (검색일: 2015.5.28)

http://news.uzreport.uz/news_4_r_128684.html (검색일: 2015.5.21.)

17) Новая «транспортная программа» Узбекистана на 2015-2019 годы оценивается в \$10 млрд. <http://www.stanradar.com/news/full/16250-novaja-transportnaja-programma-uzbekistana-na-2015-2019-gody-otsenivaetsja-v-10-mlrd.html> (검색일: 2015.05.21.)

2005년부터 우즈베키스탄은 교통인프라 부문이 투자의 우선순위 중의 하나였으며 2011-2015년에 교통 인프라 투자에 70억 달러가 배정되었다. 현재 동 프로그램의 투자 예상 금액은 약 100억 달러이며, 향후 동 프로그램은 우즈베키스탄의 자동차 도로 발전에 새로운 추동력이 될 전망이다.

⑤ 2015-2019년 에너지 절감, 절전 기술 및 시스템 도입 방안 프로그램

2015년 5월 5일 우즈베키스탄 카리모프 대통령은 「2015-2019년 경제 및 사회 부문 에너지 절감, 절전 기술 및 시스템 도입 방안 프로그램」 대통령 결의안에 서명하였다. 동 결의안은 선진국 사례를 감안하여 경제부문 총체적인 에너지 절감, 화석에너지의 합리적 사용, 제조업 경쟁력 향상,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우선적인 발전 방향은 에너지절감 정책의 법적 보장, 에너지 효율증대를 위한 설비의 현대화, 기술재정비, 에너지 절약을 위한 필요규정 제정, 재생 에너지의 단계적 도입, 국내 업체의 첨단 절전 장비 생산 확대, 주택 등 건축시 절전 설비 도입 등이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부터 재건 및 신축 건물 등록시 현대식 자동검침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신규회사의 전기 및 가스 서비스를 신고시 국가전기감독청(Uzgoenergonazor), 국가가스감독청(Uzgoneftegazinspektion)의 규격에 부합하는 절전장비 이용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2017년 1월 1일부터 자동 검침 및 감독 자동기능을 포함한 최신 전기검침기가 없는 기업체에는 전기 공급을 중단하도록 하였다. 40W 이상 백열램프의 2015년 9월 1일부터 생산이 중단되고 2016년 1월 1일부터 판매가 중단된다¹⁸⁾.

이 프로그램의 결의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로 발전(0.1MW 이상)하는 업체는 설치 후 10년간 설비시설 부문 재산세, 토지세, 도로펀드 부담금, 예산외 재건펀드 부담금, 교육 부담금, 전기료 VAT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재생에너지 설비 생산업체는 등록 후 5년간 모든 세금 및 도로펀드 부담금, 예산외 재건펀드 부담금, 교육 부담금 등이 면제된다. 또한 2020년 1월 1일까지 재생에너지 부문 전기생산 및 관련설비 생산, 기업 에너지 검사 시행, 복합가스터빈 검사·수리, 신규가스터빈 건설, 국제기구 및 차관 지원에 따라 에너지효율 증진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되지 않은 수입 장비, 부품, 원자재 등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된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생산 특화기관(업체)의 동 설비 판매수의 비중이 회계연도 기준 전체 판매액의 60%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기업의 수입 장비, 부품, 원자재 등의 관세면제 혜택이 제공된다¹⁹⁾.

강력한 대통령의 리더십과 통제된 경제체제 하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일련의 정책 프로그램들의 목표를 계획대로 진행시켜 왔으며 향후에도 정치적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프로그램들의 목표들이 순조롭게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발전 프로그램들은 자체적인 재원 조달보다는 대부분 외국인투자 및 국제금융기관의 원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외국인투자 유치가 산업현대화 및 다각화의 성공의 관

18) 단, 연구 및 의료용 특별 기술업체의 경우는 제외되며, 예외적으로 수입산 램프의 경우 2015년 9월1일까지 임시통관 및 보세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라면 2015년 10월 1일까지 도소매판매, 2016년 1월 1일까지 소매판매가 허용된다.

19)

<http://www.12news.uz/news/2015/05/%D1%83%D0%B7%D0%B1%D0%B5%D0%BA%D0%B8%D1%81%D1%82%D0%B0%D0%BD-%D0%BF%D1%80%D0%B8%D0%BD%D1%8F%D0%BB-%D0%BF%D1%80%D0%BE%D0%B3%D1%80%D0%B0%D0%BC%D0%BC%D1%83-%D0%BC%D0%B5%D1%80-%D0%BF%D0%BE-%D1%81%D0%BE/> (검색일: 2015.7.15.)

건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즈베키스탄은 외국기업의 본국에 대한 이윤 송금이 법적으로는 보장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송금 지연, 환전 지체 등의 장애요인이 발생하는 등 법령 및 제도 개선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투자환경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산업발전 및 현대화 프로젝트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프로젝트의 건설뿐만 아니라 자금지원, 건설설비 공급 등의 직간접인 형태로도 참여가 가능해 투자환경이 개선된다면 충분한 유인 잠재력은 있다.

3. 한-우즈베키스탄의 전략적 협력 방안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있으며 경제협력의 잠재력은 여전히 높다. 우즈베키스탄은 산업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한 다양한 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의 제재와 그에 따른 경제위기는 동북아 국가 특히 한국과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한국도 중견중소 제조업체의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유라시아 주요 국가 중의 하나인 우즈베키스탄의 산업정책에 부합하는 분야에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산업화 전략과 치열한 경쟁 환경을 고려할 때 한국의 대 우즈베키스탄 산업 협력 전략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우즈베키스탄의 산업화 정책은 한국에 유리한 경제 및 산업협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한국의 산업 및 경제발전 경험과 한국 산업의 구성 및 기술발전 수준은 우즈베키스탄의 산업화 정책에 필수적인 투입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우즈베키스탄의 산업화를 위해 필요한 산업구성과 기술측면에서 한국은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정부 주도의 전략적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 분야에서 한국의 경제 및 산업발전 경험은 다른 경쟁국들이 제공하기 힘든 요소를 제공한다. 따라서 한국의 우즈베키스탄 진출 전략은 자본력과 기술력에서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경쟁국에 대한 열위를 산업화 전략에 부응할 수 있는 한국의 산업 및 기술구성과 발전경험상의 우위요인으로 상쇄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한편으로 자본력과 기술력에서 열위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과 민관 협력의 틀을 개발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유라시아 주요국의 산업화 전략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여 이 전략에 필수적 투입물을 제공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 잡아야 한다.

더욱이 국가의 경제적 개입이 광범위하게 남아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산업협력은 주로 상대국 정부를 파트너로 하는 경우가 많고, 자원개발뿐만 아니라 인프라 건설 및 제조업 육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산업화 전략의 일환으로 산업협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산업협력이 효과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정이나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산업구조와 기술, 경제 및 산업발전 경험이라는 경쟁우위 요소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즈베키스탄의 발전 전략 수립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협력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현지 투자 또는 수출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모델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논의한 바에 의하면, 우즈베키스탄의 산업정책을 감안한 산업협력 분야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국내 수요 충족 및 수출을 위해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 제약 및 의료장비, 석유화학, 전력 및 에너지 플랜트, 인프라 건설 분야 진출과 연계 가능한 건설자재 분야

- 네트워크 구축 분야와 연계 가능한 IT 관련 부품 분야
- 식품가공 산업과 연계한 식품가공 기계 분야
- 농업분야와 연계할 수 있는 농자재나 관련 기계

2015년 5월말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2015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첫 해외 공식 방문국으로 한국을 선택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은 산업다변화 및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첨단 기술과 경제발전 경험을 보유한 한국과의 협력 강화에 매우 적극적이다. 양국 실질협력의 근간인 에너지·인프라 분야 협력을 지속 확대하는 가운데, ICT, 보건의료, 방산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해야 한다. 우즈베키스탄은 한국 주요 기업의 첨단 기술 도입 및 직접 투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대규모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의 자원과 한국의 기술·자본을 결합시킨 주요 협력사업으로 수르길 가스전 프로젝트(39억 달러), 가스 액화사업(31억 달러), 칸담 가스전 개발(27억 달러), 탈리마잔 발전소 현대화 사업(8.2억 달러), 고속도로 건설(1.7억 달러), 전기 검침 현대화사업(1억 달러) 등이 있다. 향후에도 이러한 상생의 협력모델을 지속하기 위한 신규 프로젝트 수주를 추진 중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메탄올-올레핀(MTO)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협력 MOU(45억불)를 체결하였고 투라쿠르간 발전소 건설(10억 달러), 타히아타쉬 발전소 건설(7억 달러), 사마르칸트 태양광 발전소 건설(3억 달러) 등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정상외교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정상외교를 통해 양국은 우선적인 투자 협력분야를 선정하였는데 석유·가스, 석유화학, 광산 개발, 자동차 생산을 포함한 기계 제작 및 전자(가전), 보건 및 제약, 식품산업, 새로운 종류의 건축 자재, 농산물의 고도 가공, 에너지효율 기술 도입, 교통 인프라 현대화 사업 등이다. 이들 산업 대부분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산업발전 프로그램으로 통해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와 일치한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투자청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프로젝트 제안서에서도 이들 산업 분야들이 대부분 포함된다²⁰⁾. 따라서 이들 산업분야는 한국의 중견기업 진출 가능성이 높으며 이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 분석과 전략적 제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0) 우즈베키스탄 투자청 홈페이지에 석유가스, 화학, 전력, 자동차 및 기계제작, 경공업, 제약, 식품, 피혁 및 제화, 건설자재, 관광업에 대한 소개와 주요 투자 프로젝트들이 소개되어 있다.
http://www.uzininvest.uz/rus/investiionnie_vozmojnosti/otrasli/ (검색일: 2015.8.30.)

투르크메니스탄의 산업정책과 협력방안

조영관(한국수출입은행)

1. 서론
2. 투르크메니스탄 산업 정책의 특징
 - 2-1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발전전략과 산업 정책
 - 2-2 투르크메니스탄의 부문별 산업정책
3. 경제특구 정책
4. 결론

1. 서론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에서 공업과 중공업, IT, 전자 산업으로 발전한 것과 마찬가지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추진하는 주력 산업도 1990년대 이후 다르게 제시되어 왔다. 이것은 투르크메니스탄 국내 경제상황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며, 세계 경제흐름에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기존에 주요한 산업이었던 농업과 섬유 산업에서 에너지 산업으로 발전하였으며, 에너지 산업은 점차 자원의 단순한 생산과 수출에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가스화학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가스로 대표되는 에너지 산업의 발전은 매우 특징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가스가 생산되고 있었으나, 투르크메니스탄이 에너지 산업을 국가경제의 주력산업으로 하게 된 것은 2008년 세계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가스전인 갈키니쉬 가스전의 발견과 관련된다. 이 가스전에 대한 중국을 비롯한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를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은 향후 안정적인 경제발전의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2009년 이후 중국으로의 가스관 연결을 통한 에너지 수출 다변화는 투르크메니스탄이 문자 그대로 영세중립국으로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

이후 에너지 부문에 대한 외국으로부터의 활발한 투자를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은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경제 상황의 변동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은 새로운 산업 발전을 추진해야할 과제를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의 하락과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는 그동안 투르크메니스탄이 지속해온 에너지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이 완전하게 안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중국의 러시아와의 장기 가스 공급 계약을 비롯한 수입선 다변화도 향후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산업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1991년 독립 이후, 추진된 경제 발전전략을 통해 산업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고, 주요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산업과 섬유 산업을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특구 정책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투르크메니스탄 산업 정책의 특징

2-1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발전전략과 산업 정책

1992년 독립 직후에 발표된 “안정화 프로그램”과 2003년에 발표된 “2020년까지의 경제, 정치, 문화 전략”, 2010년에 발표된 2030년까지의 “장기 사회, 경제발전 전략 2030”이 주요한 국가발전전략이었다.

이러한 발전전략을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의 산업정책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안정화 프로그램 단계는 정치, 경제적으로 급격한 변동을 추진하는 것보다 급변하는 대내외 정치, 경제환경 가운데 점진적인 변화를 추진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산업정책에서는 여러 산업들 가운데 농업을 위주로 한 식량 자급에 초점을 두었으며, 기존의 전통적인 섬유산업 등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물론 에너지 산업은 주요한 산업이었다. 1990년대 중반에도 에너지 산업이 전체 산업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독립된 국가 발전을 위해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농업부문에서 식량 자급 정책을 통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기존의 주요한 농업 생산이었던 면화, 섬유, 과일 등의 생산 확대를 농업 부문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였다.¹⁾

표 1. 투르크메니스탄 국가발전전략과 주요 내용

수립 연도	시행기간	국가발전전략	주요 내용
1992	1992~1999	국가안정화 프로그램	-안정적인 국가건설과 과도기 불안 극복 - 석유, 가스 산업민영화 유예, 환율 규제, 기초 생필품 및 전기, 가스, 수도 무상공급
1999	2000~2010	사회 및 경제 체제 전환 전략	-석유, 가스 등 핵심산업 발전 및 수입대체 부문 확대를 통한 자급자족 경제
2003	2003~2020	경제, 정치, 문화 발전전략 2020	- 신기술 도입과 노동생산성 증대 - 정부주도 프로젝트의 투자유치 증대 및 생

1) 2010년대에도 GDP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은 14.3%, 농촌인구는 전체 인구의 50.9%로 평가된다. USAID, *Reg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2015-2019*. October 2014. p. 23.

			산시설 확충 - 1인당 GDP 3만 달러 목표 - 농업발전과 인프라 확충, 금융 및 외환제도 정비
2010	2011~2030	장기 사회, 경제발전 전략	-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및 대형프로젝트 추진 - 산업다변화 - 사회복지 환경 개선 - 관광산업 육성 - 민간부문의 비중을 GDP 70% 이상

자료: 이시영·조영관(2010), 7쪽을 참고로 작성.

이후 2003년에 발표된 “2020년까지의 경제, 정치, 문화 전략”은 농업, 섬유산업의 발전과 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기존의 가스 매장지들을 개발하는 것과 함께 화학단지 건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2020년까지 6개의 섬유공장 건설하고 수도와 지방에 면사 공장들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6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계획하였다.

대규모의 주거단지 건설과 연관되어 시멘트를 비롯한 건설업이 발전계획이 제시되고 있으며, 2020년까지 밀 생산량 2.9배, 원면 생산을 4.9배 등을 포함한 농업부문의 발전도 언급되어 있다.

또한 “장기 사회, 경제발전 전략 2030”을 통해서도 점차 천연가스 위주의 에너지 산업이 발전전략의 핵심을 차지하게 되었다. 에너지 산업 발전정책에서도 초기의 생산과 수출 위주의 산업전략에서 점차 가공, 처리 설비를 갖추어 보다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2010년 ‘2011~2030 사회-경제발전 국가프로그램’은 장기적인 국가 사회 경제 발전에 관한 다양한 부문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투르크메니스탄이 2025년까지 고소득 국가로 발전하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2030년까지 모든 지방에 상수도 공급하는 것과 같은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것에서부터 도시와 농촌의 격차 축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국가프로그램에서 가장 크게 강조된 것 가운데 하나가 산업다변화를 추진하는 것이었다. 또한 2030 프로그램은 비에너지 분야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70%로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30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민영화 등 시장개혁을 포함하고 있다.²⁾ 이와 함께 2030 프로그램은 새로운 산업으로 금융부문의 발전도 추진하고 있는데, 금융부문의 경쟁력 강화, 금융 인력의 역량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30 프로그램에서 특징적인 것은 관광부문을 주요 산업부문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다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카스피해의 자연환경을 이용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투자유치가 비교적 수월한 관광부문을 주요 육성 산업으로 고려하였다. 제조업 발전을 위해서는 신기술과 전문 인력이 필요하며, 자본의 유치도 쉽지 않은 것을 고려한 산업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기 발전계획과 함께 단기적 전략에서도 산업다변화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2) World Bank, Diversifying the turkmen economy, 2014. p. 11.

‘2012~2016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대통령 프로그램’에서는 민간부문의 확대와 경제다변화,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춘 견고한 경제 확립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통해 GDP에서 차지하는 공업의 비중을 55%, 서비스 22%, 건설 14%, 농업 9%를 계획하였다.³⁾

이러한 산업다변화의 필요성은 최근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향후 더욱 강조될 가능성이 있다. 2015년 투르크메니스탄은 최근 4년 동안의 10% 이상 성장률에서 8%대로 하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2. 최근 5년 간의 투르크메니스탄 주요 경제지표(2011~15년)

단위: %, 억 달러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e
경제성장률	14.7	11.1	10.2	10.3	8.5
명목 GDP	292	352	410	479	444
소비자물가상승률	5.3	5.3	6.8	6.0	7.0
경상수지/GDP	2.0	0.0	-7.3	-5.8	-13.6
재정수지/GDP	3.6	6.3	1.3	0.8	-0.9
총외채잔액/GDP	10.0	18.1	21.1	16.8	18.6

자료: IMF, BMI

따라서 투르크메니스탄이 그동안 에너지 생산과 수출을 통해 성장을 해왔으나, 향후에는 점차 에너지 비중을 축소하고 서비스, 건설 등 다른 산업부문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2. 투르크메니스탄의 부문별 산업정책

1) 에너지 정책

투르크메니스탄의 에너지 부문의 주요 발전전략은 1993년의 “2020년까지 석유와 천연가스 발전 원칙”과 2006년에 발표된 “2007~2030년 석유 및 가스 부문 발전프로그램”에 제시되어 있다. 1993년의 “2020년까지 석유와 천연가스 발전 원칙”은 2020년까지 석유와 가스 생산을 확대하고 여러 개의 송유관 및 가스관을 건설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였다. 독립이후, 투르크메니스탄 가스는 러시아, 카자흐스탄의 가스와 경쟁을 하게 되며, 지리적인 여건상 수출 조건은 불리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이들 국가들을 거쳐야 수출을 할 수 있었으며, 가격에서도 이들 국가들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수출할 수밖에 없었다. 주변국들은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가스 수입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구소련의 가스 공급시장은 가스프롬이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⁴⁾

3) 위의 글.

4) G.O Khalova and M.B. Orazov, Op. Cit. pp. 16-17.

또한 2006년의 '2007~2030년 석유 및 가스 부문 발전 프로그램'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석유, 가스 부문 신규 파이프라인 건설, 정유공장 및 석유화학 산업 현대화 등의 계획을 세웠다.⁵⁾ 에너지 부문의 발전프로그램은 천연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부문 발전방향뿐 아니라, 국가의 장기적인 경제발전 방향, 대외경제정책과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대부분 러시아로 수출하였다. 2000년대 말 이러한 상황에 큰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2009년 12월부터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지나 중국으로 연결된 첫 번째 가스관을 통해 중국으로 가스 수출이 시작되었다. 이후 중국으로 연결되는 가스관은 확장되었다. 두 번째 가스관은 2010년 10월 완공되었으며, 세 번째 라인은 2012년 9월에 착공하여, 2014년 6월 완공되었으며, 용량은 250억 m³이다. 네 번째 라인은 2014년 공사가 착공되어, 2016년 완공예정이다. 네 번째 라인은 키르기즈와 타지키스탄을 통과하는 것이 특징이다. 초기에 가스관 용량은 300억 m³이었으며, 점차 650억 m³로 확대될 계획이다. 따라서 중국으로의 가스관 연결은 향후 투르크메니스탄 정치, 경제에 가장 큰 의미를 갖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에도 이 가스관을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은 전체 수출가스의 60%를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2013년의 경우, 400억 입방미터를 수출했으며, 이 가운데 244억 입방미터를 중국으로 수출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최대 가스전인 갈키니쉬 지역의 생산량 증대에 따라 2020년까지 약 650억 입방미터를 중국으로 수출할 계획이다.

이러한 에너지 발전전략은 투르크메니스탄의 대외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투르크메니스탄은 기존에는 러시아와 밀접한 에너지 협력을 맺었으나, 새로운 가스관 건설로 중국과 긴밀한 에너지 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경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부문의 대외협력은 투르크메니스탄의 대외정치, 경제관계의 주요한 부분을 형성하게 된다.

중국개발은행은 이 가스전의 1단계 개발을 위해 80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였다. 또한 중국의 CNPC는 바그티알릭(Bagtyarlyk) 가스전 개발에 4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기도 하다. 중국은 이러한 에너지, 금융 부문의 협력을 통해 투르크메니스탄 경제전반에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에너지 협력은 중국으로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15년 중국은 전체 수입 가스 539억 m³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를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⁶⁾ 이와 같이 투르크메니스탄과 중국의 에너지 협력은 상호의존적인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투르크메니스탄은 새로운 가스관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투르크메니스탄 에너지 협력의 새로운 단계로 발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투르크메니스탄은 향후 TAPI 가스관 건설을 통해 인도로 천연가스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착공된 TAPI 가스관의 전체 길이는 1,800 km(투르크메니스탄 200 km, 아프가니스탄 773 km, 파키스탄 827 km)으로 연간 330억 m³의 가스를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및 인도에 수송할 예정이다.

이러한 TAPI 가스관 건설을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은 중국으로의 에너지 의존에서 벗어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카스피해 연안 가스관 건설도 계획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카스피해 횡단 가스관 건설 가능성도 있다. 이미 투르크메니스탄은 카스피해 해상과 바쿠-트빌리시-세이한 노선을 통해 석

5) <http://2001-2009.state.gov/e/eeb/ifid/2007/80754.htm> (검색일: 2015년 12월 23일), 미국 국무부 자료.

6)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5. p. 28.

유를 수출하고 있다.

만약 카스피해 가스관 까지 건설될 경우, 투르크메니스탄은 에너지 다변화를 이루게 될 것이며,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주변국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에 발표된 에너지 부문의 전략으로는 “2030 석유가스 부문 개발 프로그램”, “2013~2020 에너지 부문 발전 전략” 등이 있다. 이 전략에 따라 신규 대형 발전소 및 송전선 건설과 터키, 이란, 아프가니스탄으로 전력 수출 계획이 수립되었다. 동시에 이 전략을 통해 천연자원 개발 관련 가스처리 및 화학 플랜트, 비료 공장 등을 건설하여 산업다변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새로운 가스관 건설을 통한 수출노선 다변화를 추진하는 것과 함께 에너지 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플랜트 건설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투자유치를 하고 있다.

2) 섬유산업

투르크메니스탄의 정부는 “2030 사회경제발전 국가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섬유산업의 발전이 목표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처럼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역시 원면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완제품 수출을 지향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의 투자 유치를 통해 기존의 원면이나 면사 등을 수출하는 단계에서 의류 수출 단계로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투르크메니스탄 섬유부문에 30여개의 공장 중 외국 자본의 비중이 80%에 달하고, 기존의 투자 가운데 외국인 투자는 18%인 3억 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터키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다. 2013년 3월에는 터키의 Engin Group이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와 두 개의 면화 가공 공장 건설에 관한 계약서를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터키 기업과 협력이 추진되고 있다.⁷⁾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16년까지 추가로 10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⁸⁾

해외투자 유치 외에도 정부의 주도로 섬유산업을 주요 제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규모 섬유 공장을 설립하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1991년 독립이후,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섬유 산업의 현대화와 공장 설립에 투자하였고, 2012년에는 지방의 두 곳에 섬유 단지가 설립되었다.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은 Turkmenbashi Jeans Complex, Turkmenbashi textile complex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면사, 데님, 테리직물, 편직물, 니트웨어 등 다양한 제품을 유럽과 아시아, 북미와 남미 국가들로 수출하고 있다.⁹⁾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섬유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국제섬유 전시회를 개최하고 섬유 산업과 관련된 경제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전시회에는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터키, 한국 기업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다. 독일 ‘테이르(Their)’와 ‘폴크만(Volkman)’, 벨기에 ‘피라놀(Piranol)’, 한국 ‘휴비스(Huvis)’와 ‘효성(Hyosung)’은 투르크메니스탄 시장 진출에 관심을 표명하였다.¹⁰⁾ 이 포럼에서는 투르크메니스탄 섬유업체의 기술적 현대화, 가공부문의 수출잠재력 확대, 신규 생산능력 구축, 고효율 및 친환경 기술 도입, 서비스 및 마케팅 부문 개선 문제 등을 논의되고 있다.

7) 이 공장은 2013년 4월에 착공되어 2015년 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터키 기업은 건설, 섬유, 유통 등의 부문에서 투르크메니스탄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 부문에서는 투르크메니스탄 전체 건설 계약의 70%를 수주하고 있다. www.invest-turkmenistan.com (2013.04.09)

8) www.trend.az, EIU.

9) www.trend.az (2012.07.16)

10) www.turkmenistan.ru/ru/articles/36054.html. (2011.06.06)

3. 경제특구 정책

또한 관광 특구 정책도 추진하였다. 2007년에는 대통령령으로 카스피해 연안에 위치한 투르크멘바위 인근의 아바자 지역에 관광지대 건설을 결정하고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추진하였다.¹¹⁾ 이미 1998년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자유경제구역법을 통과시켰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9년이 지난 2007년에야 관광지대라는 형태로 설립이 결정되고 발전 전망을 갖게 되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키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1993년 10월 2일 자유기업 경제지대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아쉬가바트-뷰즈 메인, 마리-바이라말, 첼레켄-오카렘, 다쉬호부즈-공항, 차르제브-제이지, 바헤르젠-기즐라르바트, 아쉬가바트-안나우 등 7개의 자유기업 경제지대가 지정되었다.

향후 자유기업 경제지대 내에서는 국유화가 금지되고,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차별대우가 금지된다. 부채 상환 목적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자산에 대한 동결 조치가 허용되지 않으며, 외국인투자자는 제한 없이 송금, 담보, 수출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자유기업 경제지대와 다른 지역 간 투르크메니스탄 인의 이주는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유경제지대에 대한 법안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실질적인 성과는 거두지를 못하고 있다. 이처럼 자유기업 경제지대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07년 카스피해에 위치한 투르크멘바위 인근의 아바자 지역에 최초의 자유경제지대를 건설하였다. 이 자유경제지대는 2007년 7월 24일 대통령령 8855호를 통해 설립이 결정되었으며, 관광 부문에 중점을 둔 관광 서비스 제공, 관광 인프라 구축, 관광지대 형성을 위한 투자유치를 기본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1993년 자유경제지대법에 따라 10개 자유경제지대를 지정하였고, 외국기업이 투자할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할 것을 법으로 명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국유화 금지, 외국인 차별대우 금지, 이익금 재투자 시 소득세 면제, 법인세 납부 후 이익금 송금이 보장된다. 또한 외국인 지분이 30%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 혜택, 가격 책정권 등이 보장된다. 아바자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투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아바자 관광특구 건설기간 동안 이곳에서 일하는 외국인 전문가나 노동자에게 출입 비자를 신속하게 발급하고, 출입을 허용한다. 또한 비자등록 비용도 면제된다. 이와 함께 아바자 지역에서 관광을 목적으로 아쉬가바트나 투르크멘바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는 신속하게 입국 비자를 발급한다. 둘째, 아바자 관광특구에서 건축 활동에 종사하거나 투자를 하는 외국인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 등록 시 지급하게 되는 등록 비용이 면제된다. 셋째, 투르크메니스탄 중앙은행은 아바자 관광특구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기업의 경우 순수익에 대해 달러화로의 태환을 보장하게 된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의 정부부서나 기업이 외화로 부채를 상환하거나, 건설활동에 대해 지급하거나, 생산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는 것을 보장하게 된다. 넷째, 투르크메니스탄의 국영 상품·원료 거래소에서 아바자 관광특구와 관련된 상품을 거래할 경우에는 등록비가 면제된다. 다섯째, 투르크메니스탄 표준위원회에서는 아바자 지역 건설과 운영에 사용되는 제품 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11) 아바자 관광지대는 전체 면적 5,000 ha, 해안길이 26km의 지역에 행정시설, 호텔, 쇼핑센터, 체육시설 등을 건설할 계획이며,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Туркменистана “О национальной туристической зоне Аваза” (아바자 관광지대에 관한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령, 2007년 7월 24일).

아바자 관광지대에 대한 개발 사업은 2020년까지 지속될 계획이다. 아바자 관광지대의 전체 면적은 5,000ha에 이르며, 관광지대의 해안길이는 26km에 이른다. 2012년까지 1단계에서는 751ha의 면적에 3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 건설된다. 이곳에는 행정시설과 호텔, 유통센터,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테니스장,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 등 관광객의 체류에 필요한 설비가 갖추어지게 된다. 이후 카지노, 골프장을 건설하고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와 같은 형태의 도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아바자 관광지대에서는 2009년 6월 15일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최초의 3개 호텔 개관식이 개최되었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이 투르크메니스탄의 매우 중요한 전략적 사업임을 강조하고 외국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바자 관광지대에는 약 60여 개의 호텔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처럼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지원과 러시아를 비롯한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통해 아바자 관광지대는 대규모 휴양지로서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다. 다만 아바자 관광지대가 카스피해 인근의 휴양지와 경쟁하여 인근의 다른 국가들로부터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과제가 될 것이다.

4.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산업협력

한국은 투르크메니스탄과 본문에서 살펴본, 에너지 산업, 섬유 산업에서 협력을 추진할 가능성이 가지고 있다.

이미 에너지 부문에서 한국 기업들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5년에는 한국이 세계 각국에서 수주한 건설 순위에서 투르크메니스탄에서의 수주 금액으로 1위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은 본문의 경제발전전략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에너지 산업의 부가가치를 향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은 2015년 이후, 대규모의 에너지 플랜트 사업을 수주하며 세계 어느 곳 보다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향후에도 가스 플랜트 건설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여전히 유망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최근 유라시아 지역에 에너지, 운송 인프라 건설을 목표로 하는 AIIB가 출범한 것도 투르크메니스탄에서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가 추진될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은 기존의 경제협력 국가들과의 협력을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섬유 산업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산업으로 상호 협력할 부문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중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유사하게 면화 생산을 바탕으로 섬유 산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투르크메니스탄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투자 유치뿐만 아니라, 기술 협력, 인력 협력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기업들은 기존에 중앙아시아에서 우즈베키스탄 섬유부문에 투자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향후 투르크메니스탄의 섬유 부문에 대한 투자나 생산 장비 수출을 고려할 수 있으며,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미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섬유박람회 참여하고 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연수생을 초청하여 섬유 산업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자, 정보통신 등의 제조업 부문과 함께 IT, 금융 등의 서비스 부문에서도 양국은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